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813-01

2014. 12.

#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황 의 식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유 찬 희 부연구위원  
허 주 녕 전문연구위원  
전 지 연 연구위원



## 요 약

이 연구는 주요 농식품 재정사업을 정책군(群)으로 구분하여 효과분석과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정책군의 산업여건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한 예산 배분 및 집행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① 식품산업 정책 현황과 과제 도출, ② 주요 사업별 성과평과와 과제, ③ 식품산업육성정책의 중요도 분석, ④ 식품산업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 도출 등이다.

### □ 식품산업부문의 과제

#### 가. 영세한 산업구조 개선

식품산업은 생산액·매출액 규모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식품산업이 향후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중소 규모의 식품제조업·외식업체를 지원하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많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육성정책에서의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경쟁력을 갖추도록 규모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제품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 나.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간의 연계강화

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농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국내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국내 생산 부족 등으로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국산 원료 농

축산물 구매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각각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공식품 원료농산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업체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공급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자금 및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다. 가공식품 수출 확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신선농산물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국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수출국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과제**

식품산업의 구조적 영세성과 시장 실패(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R&D 추진 유인 부족 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산업 관련 재정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예산 비중, 투융자 금액 대비 효율성, 재정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원 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업체 수와 업체당 지원 규모의 한계로 예산 투입 대비 실제 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을 보면 수출 촉진과 식품산업 육성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다. 특성별로는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의 예산 비중이 높다. 그러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기 자금 용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체질 강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013년 대규모 불용액 발생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사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09~2013년 식품산업 예산의 85.0%를 농안기금에서 조달하였다. 이러한 재원 편중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원별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통·폐합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용자 위주의 지원방식은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지원 조건(담보 조건, 상환 기간 및 금리 등)이 정책 수요자들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업체들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지원방식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R&D의 특성 상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낮을 수 있고, 결과를 실용화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민간시장의 참여 유인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문의 연구 기능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편 가능성 검토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 □ 재정지원 방식별 우선순위

중점기준과 주요정책 중 성장기반 확충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위주의 지원 방식은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식품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식품 간 연계 강화나 식품기업 육성에서 용자 방식의 중요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기반 조성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주요 정책별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응답군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보조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 정책 효과성, 식품업체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지원보다는 용자지원방식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지원 후 모니터링을 통해 인센티브(추가 금리인하, 기한 연장 등)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확대, 성장기반 확충,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하향식 지원보다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보다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고려 가능한 정책(현장수요에 신속적 대응 가능)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자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민간 부분과의 공동자본 형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식품산업분야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첫째가 식품산업이 국내농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다음으로는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이다.

식품산업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현재 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자금지원 이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효과가 보다 높은 재정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식품기업에 원료농산물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용자중심의 자금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제고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저금리시장이 도래한 상황에서 연리 3.0%~4.0% 수준의 단기 용자지원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용자중심보다는 식품기업의 애로요인을 해결하여주는 컨설팅기능을 강화하거나 농식품전문모태펀드와 같은 투자지원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활용하도록 식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식품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금리 면에서 유리한 직접적인 정책자금 융자지원보다는 식품기업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력을 보완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농신보를 통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보다 혁신적인 식품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산업에 적합한 기술 및 창업 신용보증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국내우수 농산물 매입자금 지원 및 전통식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정책자금지원으로 매입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사전 평가에서 매입실적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기능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의 지원은 시장에서 자금공급이 잘 안 되고 영세한 전통식품 가공업체 등에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산업의 기반으로는 국내에서 원료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공용 농산물생산단지의 조성, 식품산업전문 생산단지의 조성, 기술정보의 제공 등이 해당될 것이다.

다섯째, 식품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확대한다. 전통식품기업 등 영세한 식품가공업체는 지역적 특성이 높고, 지역과 밀착관계가 높아야만 농업과 연계성이 강화되므로 이러한 식품기업육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지역식품산업의 육성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연계하도록 한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분야 R&D투자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개발자금지원에서 식품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기업체 현장으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의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도록 컨설팅과 R&D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 창업 활성화에 활용한다.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범위 ..... 5
- 3. 선행연구 검토 ..... 5

### 제2장 식품산업 현황분석

- 1.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 9
- 2. 식품산업 고용 현황 ..... 12
- 3.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계 ..... 13
- 4. 가공식품 수출 현황 ..... 20
- 5. 식품산업부문의 과제 ..... 25

### 제3장 식품산업 정책 현황 및 과제

- 1. 식품산업 주요 정책 현황 ..... 29
- 2. 식품산업 재정 투융자 현황 ..... 32
- 3. 식품산업 관련 정책사업 ..... 41
- 4.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과제 ..... 44

### 제4장 주요 사업별 성과평과와 과제

- 1. 식품·외식 종합자금 ..... 47
- 2.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 62
- 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74
- 4.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 93
- 5.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107

## 제5장 식품산업육성정책 중요도 분석: AHP분석

1. AHP분석 과정 ..... 121
2. 식품산업육성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 124

## 제6장 중소기업육성 지원제도 현황

1. 자금지원제도 체계 ..... 135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사업 ..... 140
3. 산업은행(구정책금융공사) ..... 152

## 제7장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159
2. 세부 개선과제 ..... 162

부록: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분석 ..... 171

참고 문헌 ..... 175

## 표 차 례

---

### 제2장

표 2- 1.	국내총생산에서의 식품산업 비중 .....	10
표 2- 2.	식품제조업 매출 규모별 추이 .....	11
표 2- 3.	외식업 매출 규모별 추이 .....	11
표 2- 4.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추이 .....	12
표 2- 5.	외식업 종사자 수 규모별 추이 .....	13
표 2- 6.	식품산업 원료 농축산물 구매 현황, 2008~2012년 .....	14
표 2- 7.	식품산업 원료 농축산물 중 수입산 비중, 2008~2012년 .....	15
표 2- 8.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적 .....	20
표 2- 9.	농림축산식품의 주요국별 수출 비중 변화 .....	22

### 제3장

표 3- 1.	농림수산식품사업 분야 예산의 부문별 비중 .....	32
표 3- 2.	식품산업 관련 정책 사업군 분류 .....	34
표 3- 3.	분야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	36
표 3- 4.	사업군 성격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	38
표 3- 5.	재원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	40
표 3- 6.	지원방식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	41
표 3- 7.	식품산업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	42
표 3- 8.	식품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및 집중도 .....	42
표 3- 9.	농식품전문모태펀드 산업별 투자실적 및 투자비율 .....	43
표 3-10.	농식품전문 모태펀드 산업별 투자실적 .....	44

## 제4장

표 4- 1.	식품·외식 종합자금 세부 사업 지원 자격 및 대상업체 수	49
표 4- 2.	식품·외식 종합자금 세부 사업 지원 조건	49
표 4- 3.	식품·외식 종합자금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51
표 4- 4.	식품·외식종합 자금 사업 세부사업별 재정 투입 현황	52
표 4- 5.	식품산업 주요사업별 대상업체 매출액 성장률 비교	54
표 4- 6.	주요 사업별 지원 업체 수 및 재정 투입, 2009-2012년	56
표 4- 7.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62
표 4- 8.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내역	63
표 4- 9.	연도별 컨설팅 지원 추이	64
표 4-10.	지원 대상 업체들의 컨설팅 희망 분야 교차분석 결과	66
표 4-11.	지원 대상 업체들의 컨설팅 보완 요청 사항 교차분석 결과	67
표 4-12.	컨설팅 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교차분석 결과	67
표 4-13.	지원 대상 업체들의 식품관련 교육 보완 요청 사항 교차분석 결과	69
표 4-14.	식품관련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교차분석 결과	70
표 4-1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76
표 4-16.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현황	79
표 4-17.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81
표 4-18.	2008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 보조금 현황	82
표 4-19.	2009년 광역클러스터 사업단 지원 보조금 현황	83
표 4-20.	2011년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84
표 4-21.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85
표 4-2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성과	85
표 4-23.	2005년 사업단의 사업 성과	86
표 4-24.	2005년 및 2008년 사업단의 사업 성과	87
표 4-25.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88
표 4-26.	2008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89

표 4-27.	2009년 광역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	90
표 4-28.	2011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	90
표 4-2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매출발생 시점 분석 .....	91
표 4-30.	사업단의 R&D 관련 예산 집행 실태 .....	91
표 4-31.	연도별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예산 현황 .....	94
표 4-32.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품목별 지원액 및 수출액 .....	97
표 4-3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기업규모별 지원액 .....	98
표 4-3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성과 .....	99
표 4-35.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업체별 연속 지원 성과 .....	100
표 4-36.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예산 불용액 .....	100
표 4-37.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관련 조사 .....	101
표 4-38.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특성 .....	101
표 4-39.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매출액 규모(2013년) ...	102
표 4-40.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2013년) .....	103
표 4-4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매출액에서 중요도 .....	103
표 4-42.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희망 금리수준 .....	103
표 4-4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후 매출액 변화 .....	104
표 4-44.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	105
표 4-45.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분류체계 변화 .....	108
표 4-46.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	109
표 4-47.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 .....	110
표 4-48.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113
표 4-49.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 및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	114
표 4-50.	고부가가치 식품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118
표 4-51.	고부가가치 식품분야 한국 경쟁력 분석 및 기술수준 제고방안 ..	119

## 제5장

표 5- 1.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기준의 중요도 .....	125
표 5- 2.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기준의 중요도 .....	125
표 5- 3.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의 중요도 .....	127
표 5- 4.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의 중요도 .....	128
표 5- 5.	식품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별 중요도 .....	130
표 5- 6.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	131
표 5- 7.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	131
표 5- 8.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	132
표 5- 9.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	132
표 5-10.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	132

## 제6장

표 6- 1.	국내 중소기업정책 금융의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	136
표 6- 2.	정부재정대비 중소기업지원 비중 .....	138
표 6- 3.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부사업내용 .....	142
표 6-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사업 .....	148
표 6- 5.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개편 내용 .....	149
표 6- 6.	용도별 정책융자 지원실적 .....	149
표 6- 7.	기업규모별 정책융자 지원 실적 .....	150
표 6- 8.	중진공 컨설팅지원사업 내용 .....	151
표 6- 9.	산업은행의 온렌딩사업 세부지원내용 .....	155
표 6-10.	간접투자제도의 세부내용 .....	157
표 6-11.	컨설팅사업 세부서비스내용 .....	157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1.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2003~2012년 .....	10
그림 2-2.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2009년) .....	18
그림 2-3.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2012년) .....	19
그림 2-4.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연도별 수출비중 추이 .....	21
그림 2-5. 1천만 달러 이상 신선농산물 수출품목 변화 .....	23
그림 2-6. 1억 달러 이상의 가공식품 수출품목 변화 .....	24

### 제3장

그림 3-1. 주요 식품산업 정책별 비전 및 정책 과제 비교 .....	30
그림 3-2. 농어업 부문 재정운용전략과 정책 방향 .....	31

### 제4장

그림 4-1. 식품제조업 매출액 성장률, 2009-2013년 .....	53
그림 4-2. 농업종합자금 사업 추진 체계 .....	58
그림 4-3.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1996-2014년 .....	60
그림 4-4. 컨설팅 대상업체 매출액 성장률, 2009~2013년 .....	65
그림 4-5.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 추진 체계 .....	78
그림 4-6.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추진 체계 .....	96
그림 4-7.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111
그림 4-8.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6대 분야 예산 변화 추이 .....	115

### 제5장

그림 5-1.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HP 계층구조 .....	124
--	-----

그림 5-2.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별 중요도 ..... 129

**제6장**

그림 6-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 137

그림 6-2. 온렌딩의 구조 ..... 154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농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임. 농업발전을 위하여 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식품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효과가 높은 산업이어서 성장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통한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는 「식품산업진흥법」의 도입, 「식품산업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추진하여 왔음.
  -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2010~2014년 동안에 연평균 8.9%씩 증대되어 왔음.

-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 등의 영향으로 식품산업<sup>1</sup>의 총 산출액으로 나타나는 시장 규모는 2012년 186조 원으로 2002년 105조원에 비해 76% 증가하였음.
  -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는 2012년 기준 48.5조 원으로 국내 총부가가치 대비 3.9%에 이룸.
  - 2012년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부가가치는 16조 1천억 원, 음식 및 숙박업 부가가치는 32조 4천억 원으로, 국내 총부가가치 대비 각각 1.6%, 2.6%를 차지하였음.
  
-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성이 높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사료제조업을 제외한 음식료품 제조업 + 외식업(음식점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협의의’ 식품산업 규모는 2012년 141조 6,960억 원이고, 고용인원은 192만 4천 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2,468만 명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식품산업 생산액은 국내 총생산액 대비 11.1%, 제조업 총생산 대비 39.8%를 차지하고 있음.
  - 2003~2012년 동안 식품제조업은 연평균 6.9%(외식업은 6.4%) 성장하였음. 농식품 수출액도 2013년 78.7억 달러로 연평균 10.2% 성장하였음.
  
- 그러나 식품산업은 영세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원료농산물 중에서 수입 농산물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목표 달성이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 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중은 80.5%이고, 그중에서 5인 미만의 외식업 비중 63.8% 수준임.
  - 식품제조업체의 원료사용량 중 국산은 453만 톤(21.2%)에 머무르고 있

---

<sup>1</sup> 한국은행 국민계정 정의상의 식품산업은 음식료품, 담배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을 포함함.

음. 국내 농산물의 높은 가격,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식품산업 원료농산물 이용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식품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식품산업 성장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식품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인 「식품산업진흥법」을 2008년 6월부터 시행하였음.
  - 이를 토대로 1단계 계획(2008~2012년)인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과 2단계 계획(2012~2017년)인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2017년까지 식품시장 규모를 245조 원, 농식품 수출을 200억 달러, 식품산업 고용을 2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음.
  - 주요 정책 과제로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등이 있음.
- 2014년에는 「新식품정책」을 수립하여 식품산업 육성의 정책목표에 더하여 식품공급 및 식품안전성 중심의 국민 건강·영양, 식생활 문화 등을 새롭게 중요한 식품분야 정책대상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특히 식품산업 육성에서는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이 심화되면서 수출 시장 개척 등 농식품산업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졌음.
  - 신선농산물 수출만이 아닌 가공식품 수출 확대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므로 식품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 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재정지원 방식은 크게 경상보조, 저리 융자, R&D 지원, 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식품산업육성정책에서는 융자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식품산업의 구조적 영세성과 이로 인한 신용도 문제로 자금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음.
  - 또한 정책자금의 규모와 지원업체 수가 충분하지 않아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및 투입-산출 효과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新식품정책」이 새롭게 추진되는 시점에서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재정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봄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적합한 재정지원체계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투입 구조를 평가하고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에 따라 재정투자보다는 제도·지원체계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전반의 관점에서 재정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개별사업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재정지출을 보다 확대하여야 할 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재정지원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식품 재정사업을 주요 정책군으로 구분하여 효과분석과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정책군의 여건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한 예산 배분 및 집행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연구범위

- 새롭게 추진되는 「新식품정책」에서는 식품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식품소비 및 식생활 개선 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식품소비 및 식생활개선 등에 대한 정책과 식품산업 육성정책간 연계성이 낮으므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식품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연계된 정책도 있음.
  - 광특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등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성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산업의 범위도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으로만 한정함.

## 3. 선행연구 검토

- 김성용 외(2009)는 경남 식품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클러스터의 절대적 규모, 상대적 규모, 전문화, 지배력, 집적도 등 5가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잠재성을 평가하였음.
- 박순찬 외(2011)는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일반균형(CGЕ: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및 I-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최종일 외(2011)는 전통발효식품산업(김치, 천일염, 전통주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사업의 고용효과를 산업연관분석과 성향점수매칭분석법(PSM; propensity score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제언하였음.
- 황의식 외(2012)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음. 산지유통조직 등 유통주체의 영세성, 계약재배사업 미활성화, 유통시설 노후화,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평가하였음.
- 김성훈 외(2012)는 외식산업 육성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세부사업의 해당 사업과 연관 산업을 파악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정책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또한 정책의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격차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정책 수혜 업체와 정책 미수혜 업체의 정책수혜 이전과 이후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음. 분석 결과, 수혜기업이 정책시행 이후에 정규직 고용, 총매출액, 영업이익 측면에서 미수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김정욱 외(2012)는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에 대한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음.
  - 클러스터 입주 후 각 개별기업은 3.84%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클러스터 효과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이정희 외(2012)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광역 식품클러스터 단



지 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12)은 수출지원사업(농산물, 농식품, 수산물 수출촉진)의 각 사업별로 사업내용, 사업운영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조윤희(2013)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중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선행 연구자료, 통계자료 등 문헌조사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최지현 외(2013)는 식품산업정책의 추진실태와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식품산업의 현황과 구조분석, 재정지출구조 분석, 정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였음.



## 제 2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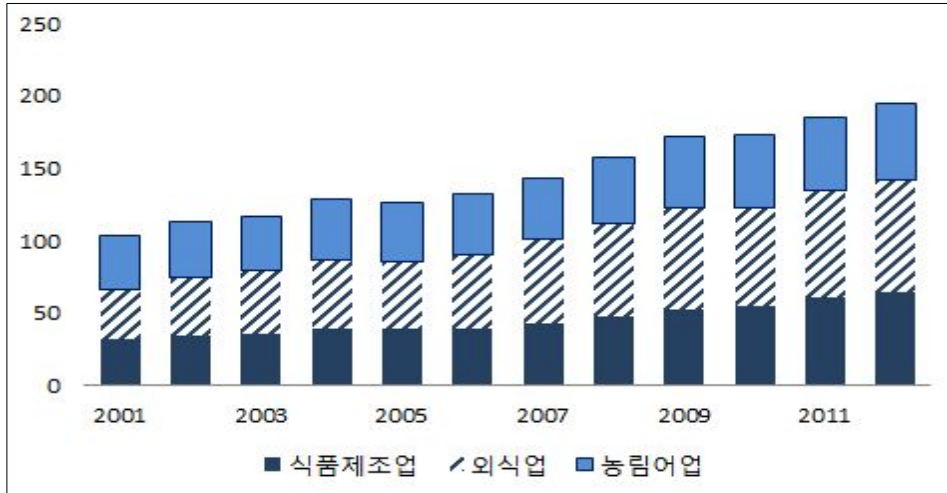
### 식품산업 현황분석

#### 1.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 식품산업 규모는 2012년 현재 141.7조 원(사료제조업 제외)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함.
  - 2003~2012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6.6%임. 동 기간 동안 식품제조업은 연평균 6.9%, 외식업은 6.4% 성장함.
  
- 2008~2012년 식품산업(사료제조업 제외) 총생산액은 평균 126.8조 원임. 이를 같은 기간 제조업 및 국내 GDP와 비교하면 평균 41.3%, 11.0%를 차지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조업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45.9%에서 2012년 39.8%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국내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11.5%에서 2010년 10.5%로 감소 후 2012년 11.1%까지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2003~2012년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경제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표 2-1. 국내총생산에서의 식품산업 비중

단위: 십억 원, %

구분	국내총생산 (GDP)	제조업 GDP	식품산업 총생산액	식품산업 비중	
				전체 GDP 대비	제조업 GDP 대비
2000	603,236	152,177	65,862	10.9	43.3
2005	865,241	213,646	85,311	9.9	39.9
2010	1,173,275	319,275	123,139	10.5	38.6
2011	1,235,161	348,199	134,664	10.9	38.7
2012	1,272,460	355,836	141,696	11.1	39.8

주 :1) 식품제조업에서 사료제조업은 제외함.

2) 식품제조업·외식업은 매출액(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준, 농림어업은 생산액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 201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 부문은 매출액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취약한 산업구조이어서 경쟁력이 낮음.

- 2012년 현재 식품제조업부문에서 연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업체 비중

은 74.8%이고, 외식업부문에서도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업체 비중이 99.0%로 영세한 구조임.

- 소규모 매출(식품제조업: 10억 원 미만, 외식업: 1억 원 미만) 업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간 규모의 매출(식품제조업: 10~1,000억 원, 외식업: 1~10억 원) 업체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 2-2. 식품제조업 매출 규모별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3	2005	2010	2011	2012
업체 수		3,888	3,932	4,261	4,360	4,423
매출액 규모별	10억 원 미만	34.0	29.3	19.2	17.3	15.9
	10-100억 원	50.3	53.3	57.7	58.2	58.9
	100-1,000억 원	13.6	14.9	19.7	20.7	21.1
	1,000억 원 이상	2.1	2.5	3.4	3.8	4.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중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표 2-3. 외식업 매출 규모별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3	2005	2010	2011	2012
업체 수		606	532	586	607	625
매출액 규모별	1억 원 미만	85.1	79.1	72.9	64.3	63.8
	1-10억 원	14.6	20.4	26.0	34.6	35.2
	10억 원 이상	0.3	0.5	1.0	1.1	1.0

주: 식품제조업에는 사료제조업체 포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중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 2. 식품산업 고용 현황

- 식품산업은 산업 비중만이 아니라 고용창출 측면에서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 식품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003년 175만 명에서 2012년 192만 명으로 연평균 1.1%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고용 인원(2,468만 명)에서 7.8%를 차지함.
  - 식품산업에서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종사자의 비중을 보면 8.9%, 91.1%로 외식산업의 종사자수가 많음.
- 고용인력 면에서도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모두 종사자 수가 적은 영세·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식품제조업 부문에서 종사자 수 50인 미만 업체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80%를 상회하고 있음. 2012년 현재 종사자 수 50인 미만 업체 비중은 80.5%임. 반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업체 수와 비중은 2003년 54개(1.4%)에서 2012년 43개(1.0%)로 소폭 감소하였음<표 2-4>.
  - 외식업 부문에서 종사자 수 5인 미만 업체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80%를 상회함. 2012년 현재 종사자 수 50인 미만 업체 비중은 80.5%임. 한편,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업체 수와 비중은 2003년 54개(1.4%)에서 2012년 43개(1.0%)로 소폭 감소하였음<표 2-5>.

표 2-4.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3	2005	2010	2011	2012
업체 수		3,888	3,932	4,261	4,360	4,423
종사자 수 규모별	50인 미만	80.6	82.0	81.2	80.7	80.5
	50-299인	18.0	16.9	17.9	18.3	18.5
	300인 이상	1.4	1.1	0.9	1.0	1.0

주: 식품제조업에는 사료제조업체 포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표 2-5. 외식업 종사자 수 규모별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3	2005	2010	2011	2012
업체 수		3,888	3,932	4,261	4,360	4,423
종사자 수 규모별	5인 미만	90.7	89.6	91.3	90.4	88.6
	5-9인	7.6	8.5	6.5	7.2	9.2
	10인 이상	1.7	2.0	2.1	2.2	2.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 3.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

#### 3.1. 식품산업의 국내 농축산물 수요

-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식품산업의 원료 농축산물 구매현황’을 보면, 식품산업 부문의 주요 원료 농축산물 구매 물량과 금액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표 2-6>.
  - 이러한 추세는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부문의 성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사품목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원료농축산물 구매를 물량기준으로 보면, 2008년 9,840천 톤에서 2010년에는 7,051천 톤, 2012년에는 18,536천 톤으로 증가하였음. 구매액 기준으로는 2008년 11.9조원에서 2010년 8.5조원, 2012년에는 14.2조원으로 변화하였음.
- 식품산업의 원료 농산물 구매에서는 수입산의 비중이 높고 국내 농산물의 사용비율이 낮음. 식품산업의 원료 농축산물 중 수입산 비중은 품목별로 상이함<표 2-7>.

표 2-6. 식품산업 원료 농축산물 구매 현황, 2008~2012년

단위: 천 톤, 십억 원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구매량	구매액	구매량	구매액	구매량	구매액	구매량	구매액	구매량	구매액
쌀	287.2	409.2	243.5	330.8	383.3	395.3	518.0	574.4	482.5	540.7
보리	60.9	78.0	63.5	94.9	49.8	47.6	193.7	159.2	125.6	121.3
밀	2,264.4	1,059.0	2,229.8	1,208.6	1,524.5	413.0	3,525.9	1,405.2	4,099.0	2,183.7
밀가루	960.4	787.9	730.8	535.2	1,087.2	684.9	1,099.8	871.5	1,026.6	1,065.4
옥수수	1,401.6	526.4	468.6	282.4	303.5	207.2	7,616.8	3,440.3	9,052.7	4,545.1
대두	731.4	786.5	178.2	321.6	361.0	430.7	294.1	408.1	203.5	582.1
감자	75.2	75.3	31.3	40.9	45.3	47.6	45.8	64.9	28.0	29.6
무	265.9	100.1	153.5	65.1	198.0	143.4	261.5	143.1	250.3	131.0
당근	14.0	18.0	16.9	21.8	17.6	18.4	14.0	19.2	20.0	30.4
배추	454.5	194.3	240.9	142.8	373.8	234.2	427.3	295.8	358.7	279.7
고추	26.1	124.3	34.5	226.6	75.8	492.4	38.7	317.0	31.4	263.8
마늘	100.8	194.6	50.0	167.1	67.2	292.2	26.2	109.6	26.5	102.7
양파	84.7	80.5	73.7	65.9	60.4	62.6	49.9	56.3	57.2	60.7
파	22.5	44.8	21.2	26.9	24.1	35.4	12.6	18.0	14.7	23.4
수박	1.2	3.7	0.2	0.4	0.3	0.3	0.0	0.0	0.0	0.0
참외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딸기	14.9	25.9	13.3	30.7	19.0	37.9	42.1	66.6	24.3	44.0
토마토	7.1	26.1	6.7	10.9	8.8	10.5	0.5	1.2	0.5	1.5
사과	15.0	35.8	17.6	16.4	23.1	23.3	4.6	5.7	5.5	14.5
배	7.8	11.8	5.2	7.0	11.6	11.6	8.0	7.6	10.7	11.3
포도	9.2	34.3	5.3	7.0	11.6	29.9	2.5	4.8	4.2	5.0
감귤	12.1	23.4	40.2	8.0	136.5	18.1	79.4	16.8	56.7	15.4
쇠고기	155.8	1,338.2	72.8	807.6	94.3	920.2	57.9	441.5	53.9	510.1
돼지고기	874.7	3,422.1	326.4	1,191.1	417.4	2,029.1	211.4	701.5	219.3	878.3
닭고기	393.7	1,060.8	87.4	220.6	122.9	442.7	86.6	228.2	106.6	325.8
계란	28.7	110.0	88.9	179.1	119.7	232.8	59.1	137.9	77.2	197.5
우유	1,571.0	1,358.2	1,220.5	1,321.5	1,514.2	1,249.2	2,178.6	2,085.4	2,227.9	2,202.2
계	9,840.7	11,929.1	6,421.1	7,330.9	7,051.1	8,510.5	16,855.1	11,579.7	18,563.6	14,165.0

주: 1) 2008~2012년 동안 중복되는 주요 품목만을 포함함.

2) 마늘은 2011년부터 마늘(깐마늘 포함)으로 변화; 배추는 2011년부터 절임배추 분리; 우유는 2011년부터 원유로 별도 측정하였음.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 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7. 식품산업 원료 농축산물 중 수입산 비중, 2008~2012년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쌀	24.5	15.7	18.1	34.3	30.7
보리	24.7	4.5	7.2	79.6	72.3
밀	98.7	60.7	100.0	99.8	99.8
밀가루	73.4	87.3	100.0	99.0	100.0
옥수수	97.2	68.6	67.7	99.0	99.1
콩(대두)	79.3	48.0	53.1	87.6	82.7
감자	57.5	5.7	4.1	57.2	14.1
무	1.9	2.3	5.5	4.6	2.3
당근	15.6	19.9	17.5	32.0	23.2
배추	0.0	1.0	1.9	0.2	0.2
고추	14.2	34.9	55.1	41.1	44.2
마늘	3.1	27.8	39.9	23.3	42.6
양파	0.8	6.0	7.4	13.8	16.6
파	31.3	9.3	8.9	15.4	8.6
수박	0.0	0.0	0.0	0.0	0.0
참외	0.0	0.0	0.0	0.0	0.0
딸기	0.0	4.8	9.1	13.4	0.0
토마토	64.1	11.1	15.2	0.0	0.0
사과	0.0	3.2	2.8	0.0	0.0
배	0.0	2.2	0.6	11.0	0.0
포도	41.8	14.5	16.1	44.2	0.0
감귤	0.0	0.0	2.7	0.0	0.0
쇠고기	31.7	77.2	77.8	79.2	89.1
돼지고기	7.0	19.5	35.2	28.1	20.7
닭고기	4.8	22.7	20.4	18.3	15.1
계란	0.0	0.6	0.0	0.0	0.0
우유	0.4	1.6	0.0	0.0	0.0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 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각 연도

- 밀, 밀가루, 옥수수, 대두 등은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국내산 물량이 부족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음.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 높지 않으므로 수입산 이용이 불가피할 수 있음.
- 과일류는 국내 생산과 대체 가능성이 있으니 검역조건(SPS)이나 소비자 선호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 육류는 연도별로 수입산 이용 비중의 등락이 심하고, 쇠고기를 제외하면 수입산 원료 이용 정도가 낮은 편임.
  - 조미채소류를 포함한 채소류는 연도별 변동이 있으나, 수입산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이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식품산업의 원료농산물 사용 비중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용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밀가루, 전분과 같이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간접적인 사용효과까지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임.
- 이러한 간접영향까지 분석하려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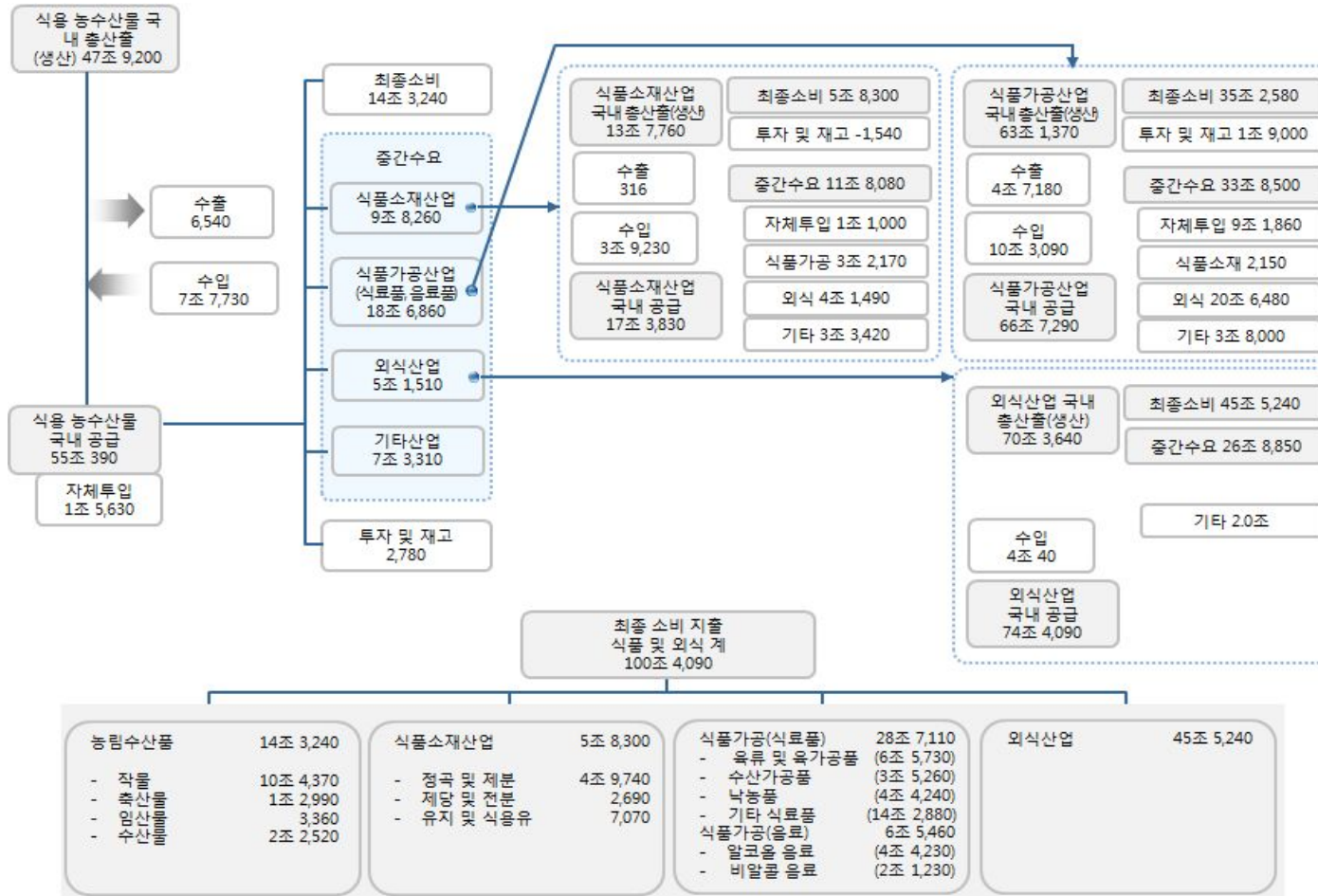
### 3.2. 식품산업의 농업부문 유발효과

- 식품산업과 농업부문 연계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2009년, 2012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과 농업 부문과의 연계를 분석함<sup>2</sup> <그림 2-2, 그림 2-3>.
- 식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 제조·가공, 소비, 수출입 단계를 망라하는 푸드시스템체계에서 분석함.
- 2012년 농림수산물 국내 공급액은 67.6조원으로 2009년 55.4조원 대비 22.8% 증가하였음.

<sup>2</sup> 2009년, 2012년 산업연관표에서 사용한 산업 분류(대·중·소분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산업 부문별 규모나 연계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세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흐름을 비교하는 수준의 분석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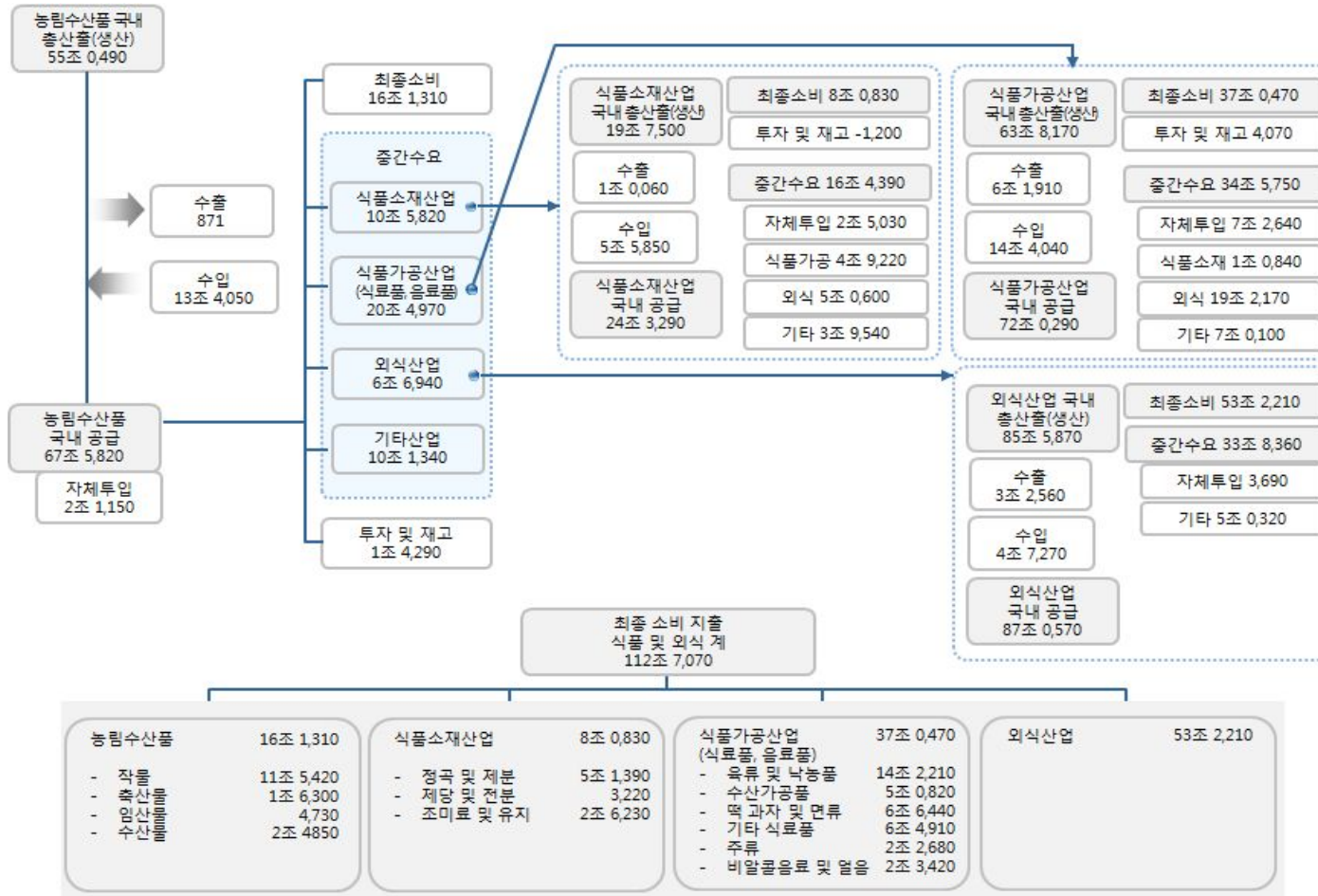
- 같은 기간 농수산물 최종소비는 14.3조원에서 16.1조원으로 12.6% 증가하였고, 중간수요가 증가하였음. 중간수요 중 식품소재(7.7%)와 식품가공(9.7%) 규모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반면, 외식산업(30.0%)과 기타(38.2%)가 빠르게 확대되었음.
- 식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식품소재산업의 국내총산출은 2009년 13.8조원에서 2012년 19.8조원으로 증가하였음. 수출이 2012년에 1.0조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식품소재산업의 국내공급도 17.4조원에서 2012년 24.3조원으로 성장하였음.
- 식품가공 산업 분야는 국내 총산출이 2009년 63.1조원에서 2013년 63.8조원으로 정체 상태에 있음.
  - 반면에 국내 공급액은 2012년에 72.0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 증가 때문임.

그림 2-2.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2009년)



자료: 이용선 외(2012) 재구성.

그림 2-3.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2012년)



자료: 한국은행, 2012 산업연관표(연장표).

- 외식산업부문 국내 총산출이 2009년 70.4조원에서 2012년에는 85.6조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외식산업의 수출은 6.2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14.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2년 최종 소비 및 지출 규모는 2009년 대비 12.2% 증가하였음. 식품소재 산업(0.9%p)과 식품가공 산업(2.0%p)의 전체 규모 대비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물(-0.9%p)과 외식산업(-1.7%p)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음.

## 4. 가공식품 수출 현황

### 4.1. 농식품 부류별·국별 수출 변화

-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이 있음.
  - 2008년 정부가 농식품 수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한 이후 예산 규모와 성장률이 증가하였음.

표 2-8.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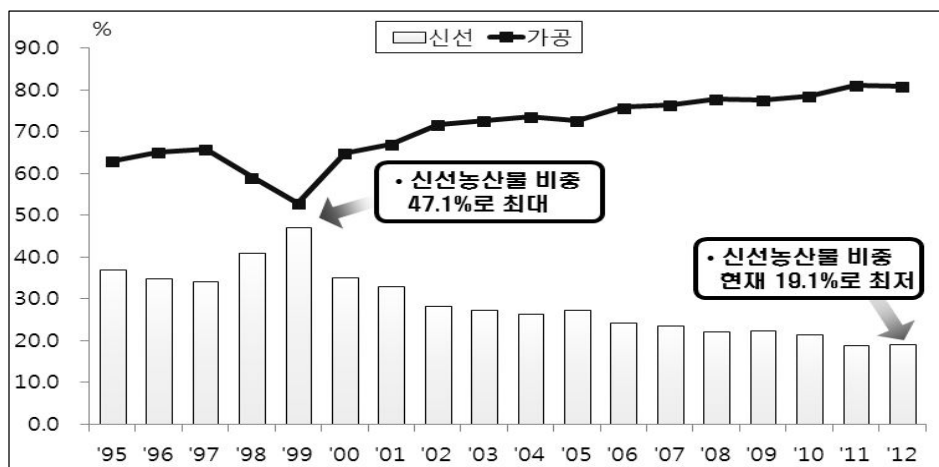
단위: 억 원

분야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해외시장 개척사업	84	127	176	233	276	298	314	280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	191	289	327	413	415	395	410	423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2,154	2,432	2,692	3,122	3,211	3,222	3,852	4,1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 농업부문 수출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부류별 실적을 살펴 보면,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7.0%에서 1999년 47.1%로 정점에 이른 뒤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19.1%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80.9%로 나타나 농업부문 수출의 상당부분은 가공식품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변화되었음.
  - 수출구조가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단순히 수출하던 구조에서 가공을 거친 농식품을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박기환 외 2013).
  
- 최근의 농식품 수출 증가는 대부분 가공식품 수출 증가에서 기인하였음. 식품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하여도 국내산 원료농산물 수요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국내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가공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4.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연도별 수출비중 추이



자료: 박기환 외, 2013,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 부문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등이며, 이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대일 수출 비중은 1999년 56.2%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에는 1999년 대비 31.3%p나 줄어든 24.9%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1의 수출국임. 최근 엔저현상으로 인하여 대일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임.
  
- 대미 수출 비중은 2004년 13.7%까지 확대되었지만, 이후 감소하면서 2012년은 8.4%로 나타났음.
  
-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홍콩의 비중보다 낮았으나, 이후부터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8년부터는 중국이 우리나라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본과 함께 농식품 수출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므로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중 FTA의 추진으로 대중국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표 2-9. 농림축산식품의 주요국별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1997	2000	2005	2010	2011	2012
일본	41.3	46.2	32.1	25.1	25.6	24.9
중국	4.6	7.8	10.4	13.6	17.0	16.1
미국	5.8	9.7	12.6	9.2	7.8	8.4
홍콩	11.8	8.9	5.6	5.3	5.1	4.8
러시아	17.2	4.9	9.2	5.6	4.4	4.5

자료: 박기환 외, 2013,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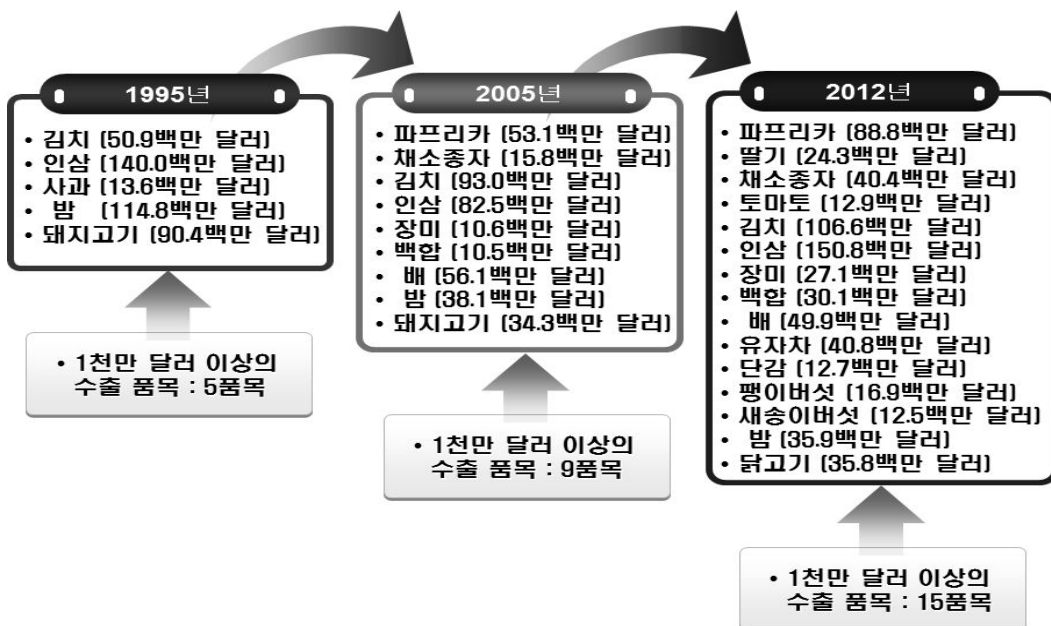


## 4.2. 주요 수출품목

○ 정부에서도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수출 확대와 함께 어느 정도 수출규모를 갖춘 품목수도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신선농산물은 1천만 달러 이상인 수출 품목이 1995년에는 5품목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9품목, 2012년에는 15품목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신선농산물의 수출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2개(김치, 인삼)나 형성되어 있음.

그림 2-5. 1천만 달러 이상 신선농산물 수출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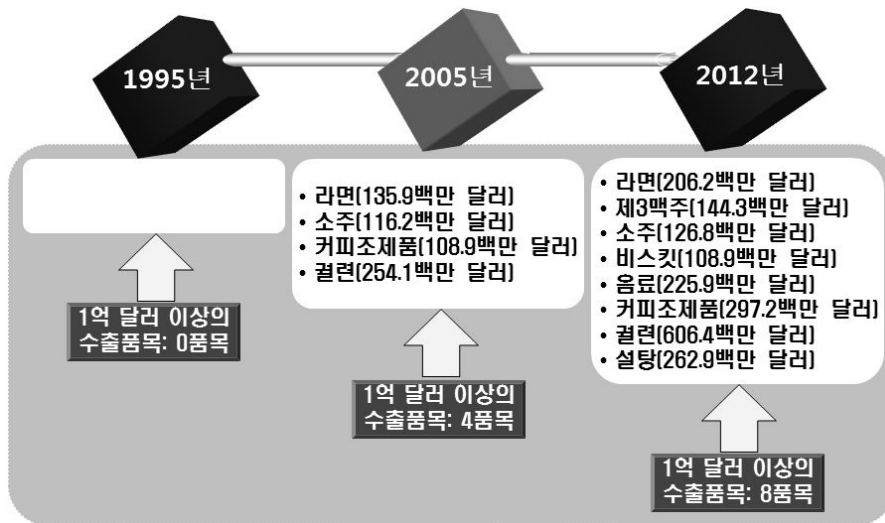
자료: 박기환 외, 2013,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공식품 수출도 1억 달러 품목이 1995년에는 전무했으나, 2005년에는 라면, 소주, 커피조제품, 껌의 4개, 2012년에는 라면, 맥주, 소주, 비스킷, 음

료, 커피조제품, 궤련, 설탕의 8개로 확대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접목,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복지농촌 건설,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을 5대 농정 과제로 선정하였음.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에는 신성장동력 확충, 식품산업 육성 등과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를 세부계획(Action Plan)으로 제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2013년 60억 달러, 2017년 100억 달러로 확대하여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는 물론, 시장 규모화로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식품 수출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그림 2-6. 1억 달러 이상의 가공식품 수출품목 변화



자료: 박기환 외, 2013,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식품산업부문의 과제

### 5.1. 영세한 산업구조 개선

- 식품산업은 생산액·매출액 규모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품산업이 향후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식품제조업의 성장이 효과적이고,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외식업 육성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식품산업, 특히 외식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영세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매출액면에서만 아니라 고용구조면에서도 영세한 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중소 규모의 식품제조업·외식업체를 지원하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식품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많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선대책이 필요함.
  - 식품가공업부문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식품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육성정책에서의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경쟁력을 갖추도록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제품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

### 5.2.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강화

- 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농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국내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제한적임.

- 식품산업의 원료구매에 있어 국내 농축산물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을 의미함.
  - 식품산업의 원료농산물 중 수입산 사용 비중은 2009년 73.4%에서 2012년 80.4%까지 상승하였음.
  - 조사 품목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수입산 원료 이용 비중이 높은 것은 분명함.
- 국내 생산 부족 등으로 수입산에 의존할 수 없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국산 원료 농축산물 구매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식품제조업·외식업체의 국산 원료 이용 증가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임.
  -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각각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수요 측면에서는 식품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국산 원료 확보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여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또 국내 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전통식품기업 등을 육성하는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가공식품 원료농산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업체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공급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자금 및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가공식품 원료로 적합한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재배단지를 구축하여 가공식품업자의 수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5.3. 가공식품 수출 확대

-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신선농산물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농식품 수출 비중을 보면 가공식품의 수출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신선농산물 수출은 검역조건 등으로 인하여 수출 확대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수출국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지속적인 개발이 중요하고, 수출국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한·중 FTA 체결 등 FTA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 3 장

### 식품산업 정책 현황 및 과제

#### 1. 식품산업 주요 정책 현황

- 2008년부터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업 발전을 유인하고자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수출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음. 2008년 이후 식품산업 정책은 공통적으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R&D 포함),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수출 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식품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인 「식품산업진흥법」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단계 계획(2008~2012년)인 「식품산업종합대책(안)」과 2단계 계획(2012~2017년)인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음.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정부의 2단계 식품산업 진흥 정책으로 2012~2017년까지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식품산업의 비전으로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제시하

고, 2017년까지 식품시장규모를 245조 원, 농식품 수출을 200억 달러, 식품 산업 고용을 2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음.

- 주요 정책 과제로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등이 있음.
-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분야의 세부과제는 식품 R&D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인력 교육, 통계·정보관리 강화 등임.
-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분야는 지역전략식품육성, 식품가공 활성화, 농공 상용합형 기업육성, 외식산업 육성 등임.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는 농식품 수출확대, 한식세계화, 전통발효식품 육성 등임.
-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분야는 소비자 정부제공 강화, 녹색 식생활 교육,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1. 주요 식품산업 정책별 비전 및 정책 과제 비교

정책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2008.1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1.9)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2014.3)
비전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R&amp;D 투자 확대</li> <li>-규제혁신, 인센티브 제공</li> <li>-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지원</li> <li>-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산업화</li> <li>-식재료 산업 활성화</li> <li>-농어업·식품산업 연계 강화</li> <li>-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산업 인프라 확충</li> <li>-농어업과의 연계 강화</li> <li>-글로벌 경쟁력 강화</li> <li>-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li> <li>-농식품 품질관리 강화</li> <li>-농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li> <li>-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li> <li>-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li> <li>-외식산업의 선진화, 한식의 진흥</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구성.



- 2014년에는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을 수립하여 식품공급 및 식품안전성 중심의 식품산업육성 정책에서 국민 건강·영양, 식생활 문화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중 식품 미보장 가구(21.1%) 및 영양 섭취 부족인구(28.7%)가 전 국민(3.6%/13.3%) 대비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국민 식생활 및 영양부족 문제를 새로운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음.
  -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식품산업을 통한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식품제조 원료에서 국산 원료의 이용 확대를 위해 가공용 종자개발, 소재·반가공산업 육성, 국산식품의 시장차별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외식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통계정보 제공, 인력양성, R&D 확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그림 3-2. 농어업 부문 재정운용전략과 정책 방향

기본 방향	중기 재정 운용	단기 중점투자	중점 사업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실현	시장개방 대응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추진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기존 직불제 확대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소득, 복지, 경쟁력 중심으로 중점 투자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지원 강화	농촌복지 향상	지원단가 현실화 농지연금 개선 등
안전성 강화, 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창조농업: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6차 산업 집적화 단지, 펀드 조성 등
근본적 가축방역체계 구축, 수출확대 지원	안전한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체계 개선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비축자금, 소비자유통 활성화 지원 강화 등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추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성장동력 제고 투자 확대	R&D 투자 확대, ICT 융복합 기술 확산 등
수산자원 확보, 자원 관리, 유통 인프라 개선, 경쟁력 강화 등	R&D 투자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안전관리 SOC 확대	수리시설 정비, 농촌 용수공급기반 강화 등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과위원회,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2014, 재구성.

-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제시한 농어업 부문 단기·중기 재정운용 방향에서 강조하는 중점투자 및 사업 중 다수가 식품산업 부문과 연계되어 있음<그림 3-2>.
  - 중기 재정 운영 방향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는 식품산업과 농어업 부문 간 연계 강화와 유기적인 관계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과 R&D 투자 확대 본 연구의 방향과 일치함.
  - 식품산업은 단기 중점투자 중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제고 투자 확대 등에 포함되는 분야임.
  - 중점 사업 중 6차 산업 강화, R&D 투자 확대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2. 식품산업 재정 투융자 현황

- 농림수산물 분야 부문별 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식품업 부문의 비중이 가장 낮은 편임. 반면,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은 가장 높은 편임<표 3-1>.

표 3-1. 농림수산물사업 분야 예산의 부문별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농업·수산·식품	172,571 (100.0)	176,354 (100.0)	181,322 (100.0)	183,862 (100.0)	187,334 (100.0)	2.1
-농업·농촌	136,684 (79.2)	139,988 (79.4)	142,455 (78.6)	139,239 (75.7)	141,604 (75.6)	0.9
-수산·어촌	14,045 (8.1)	13,052 (7.4)	13,543 (7.5)	18,343 (10.0)	18,993 (10.1)	7.8
-임업·산촌	16,354 (9.5)	16,953 (9.6)	18,443 (10.2)	18,941 (10.3)	19,014 (10.1)	3.8
-식품업	5,488 (3.2)	6,361 (3.6)	6,881 (3.8)	7,339 (4.0)	7,723 (4.1)	8.9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과위원회,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2014, p8.

- 농식품부의 프로그램 분류에 따르면, 식품산업 관련 사업은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 농식품 안전정보 관리, 식품산업기반 조성, 식품산업 육성, 식품안전 및 규격,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클러스터활성화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지역클러스터활성화 지원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과 동일한 범주로 볼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식품산업 관련 사업을 특성별로 4개 사업군(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식품산업 성장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으로 분류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 중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산업 육성(융자)’에 속하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연차별로 <표 3-2>와 같이 구성되어 왔음.

표 3-2. 식품산업 관련 정책 사업군 분류

구분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식품산업 성장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산업육성</li> <li>-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구, 지역농업클러스터 및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포함)</li> </ul>	
농산물 수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세계화</li> <li>- 해외시장개척 (지원)</li> <li>- 우수농식품구매지원</li> <li>-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li> </ul>
농식품 안전정보 관리		- 농식품 안전정보 관리		
식품산업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유통교육 지원</li> <li>- 고부가 식품 및 컨설팅 지원</li> <li>- 식품표준화</li> </ul>			
식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농식품벤처기업 육성</li> <li>- 식품기능성 평가</li> <li>- 외식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li> <li>-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K-Food 프로젝트</li> </ul>

구분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식품산업 성장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외식업지구 육성</li> <li>- 식품외식정보 분석</li> <li>- 외식업체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일염산업 육성지원</li> <li>-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li> <li>- 세계김치연구소 설립</li> <li>- 전통발효식품 육성</li> <li>- 공동조리시설설치 지원</li> <li>-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li> <li>- 식품·외식 종합자금</li> <li>-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li> </ul>	
식품안전 및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증농식품 지원</li> <li>- 농식품안전사고 및 긴급대응</li> <li>- 농식품안전정보관리</li> <li>- 유기가공식품 인증</li> <li>- 축산물HACCP 인증</li> </ul>		

주 1) 2011년 외식업체 육성,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지원, 신선편이가공시설, 농식품시설현대화, 전통발효식품육성(음자) 통합하여 식품·외식 종합자금 신설. 2012년부터 산지 및 소비지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을 식품·외식 종합자금으로 통합.

2) 2010년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과 통합.

3) 음영 처리한 사업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단위사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결산자료, 각 연도.

## 2.1. 분야별 재정 투융자 현황

- 농식품부 프로그램 분류에 따른 식품산업 정책예산의 연도별 추이는 <표 3-3>에 요약되어 있음. 2008년 이후 집행한 예산의 대부분은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었음. 식품산업 예산에서 농산물 수출 촉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1.3%에서 2013년 59.9%까지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식품산업 육성 비중은 7.5%에서 29.9%까지 증가하였음.
  - 식품산업 예산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산업 육성 예산 규모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결과임.
  - 2012년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에 원료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을 통합하면서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도 예산 비중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

표 3-3. 분야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단위: 백만 원

분류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2013 평균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예산 비중	40,700.0 8.3%	61,470.0 11.2%	69,350.0 11.1%	59,280.0 8.2%
농산물 수출 촉진	예산 비중	396,511.0 81.3%	413,899.0 75.2%	449,562.0 71.9%	443,087.0 61.3%	466,046.0 59.9%	433,821.0 68.6%
농식품안전 정보 관리	예산 비중	0.0 0.0%	1095.0 0.2%	999.0 0.2%	959.0 0.1%	959.0 0.1%	802.4 0.1%
식품산업 기반 조성	예산 비중	5,724.0 1.2%	9,023.0 1.6%	6,860.0 1.1%	9,970.0 1.4%	14,313.5 1.8%	9,178.1 1.5%
식품산업 육성	예산 비중	36,616.0 7.5%	55,988.0 10.2%	86,967.0 13.9%	196,504.0 27.2%	232,372.8 29.9%	121,689.6 19.2%
식품안전 및 규격	예산 비중	8,411.0 1.7%	9,145.0 1.7%	11,305.8 1.8%	12,828.6 1.8%	5,042.9 0.7%	9,346.7 1.5%
합계	예산 비중	487,962.0 100.0%	550,620.0 100.0%	625,043.8 100.0%	722,628.6 100.0%	777,519.1 100.0%	632,754.7 100.0%

주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은 지역전략식품산업,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포함.

2) '비중'은 당해연도 사업군 각각의 예산 비중을 의미함.

3) 비중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므로 합계가 100.0%와 다를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개요, 각 연도.

-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은 2011년까지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향토산업육성 사업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농식품 안전 정보 관리와 식품안전 및 규격 사업 관련 예산은 일정한 규모 및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식품안전 및 규격 사업 예산이 2013년 크게 감소한 이유는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축산물 HACCP 인증 지원, 농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 사업 등의 이관·폐지 등 때문임.
- 고부가 식품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식품산업 기반 조성 부문 예산 비중은 2009~2013년 평균 1.5%에 그쳤음. 이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사업 등 융자 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하드웨어(H/W) 성격 사업 지원에 비해 소프트웨어(S/W) 성격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작음을 의미함.
- 예산 규모 성장률 측면에서는 식품산업 육성과 식품산업 기반 조성 부문 예산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음. 이는 기준연도(2009년) 예산 규모가 작고, 일부 사업이 이관·통합되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침.
- 사업별 효과 평가 및 예산 집행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분야에 재정 지원을 확대·축소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 사업군 성격별 재정 투융자 현황

- 특성별 분류에 따른 식품산업 정책예산의 연도별 추이는 <표 3-4>에 요약되어 있음.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2008년 이후 가장 많았지만,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투융

- 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정책도 강화해 오고 있음.
-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농산물 수출 촉진, 농업과의 연계 강화는 식품산업 육성과 유사한 사업들을 포함함.

표 3-4. 사업군 성격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단위: 백만 원

분류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2013 평균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예산 9,224.0	19,828.0	10,172.0	14,714.0	20,501.5
	비중	1.9%	3.6%	1.6%	2.0%	2.6%	2.4%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예산	8,411.0	10,240.0	12,304.8	13,787.6	6,001.9	10,149.1
	비중	1.7%	1.9%	2.0%	1.9%	0.8%	1.6%
농업과의 연계 강화	예산	73,816.0	106,653.0	153,005.0	251,040.0	272,071.2	171,317.0
	비중	15.1%	19.4%	24.5%	34.7%	35.0%	27.1%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	396,511.0	413,899.0	449,562.0	443,087.0	478,944.5	436,400.7
	비중	81.3%	75.2%	71.9%	61.3%	61.6%	69.0%
합계	예산	487,962.0	550,620.0	625,043.8	722,628.6	777,519.1	632,754.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비중'은 당해연도 사업군 각각의 예산 비중을 의미함.

2) 비중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므로 합계가 100.0%와 다를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개요, 각 연도.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 비중은 2009~2013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큰 편입.
  -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은 2009~2013년 동안 평균 4,940.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332.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농업과의 연계 강화 예산 비중은 2009년 15.1%에서 2013년 35.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당 사업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함. 사업별 예산 측면에서는 지역전략식품산업(구 지역·광역클러스터사업) 예산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식품·



외식종합자금 규모가 증가하였음. 이는 지역 단위 부존·인적 자원을 활용한 접근 방식에서 식품업체에 대한 물적 지원·용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식품·외식 종합자금은 2011~2013년 동안 평균 1,309.7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162.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과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의 연도별 예산 비중은 3.4~5.5%에 머물렀음.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사업 등 용자 사업,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의 예산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의 정책은 식품업체들의 국내원료 매입 자금 부담 경감·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수출 물류비 등 부담 경감을 통한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함. 식품산업과 관련된 S/W 기반 구축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다고 판단함.

### 2.3. 재원별 재정 투융자 현황

- 식품산업정책 예산을 회계·기금 별로 살펴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표 3-5>. 2011년 식품·외식종합자금 사례에서처럼 정책자금의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 예산은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농식품 유통교육, 식품기능성 평가, 고부가 식품 및 컨설팅 등)과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국가인증 농식품 지원, 농식품안전정보 관리, 축산 HACCP 인증 등)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농안기금 예산은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식품·외식 종합자금,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향토산업 포함)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 예산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2013년 우수농식품 구매지원과 식품·외식 종합자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여 농안기금 예산 집행률이 낮아졌음.

표 3-5. 재원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단위: 백만 원

분류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2013 평균
		농특	예산	20,451.0	32,793.0	35,204.8	41,107.6
	비중	4.2	6.0	5.6	5.7	6.8	5.8
농안	예산	424,811.0	456,357.0	520,489.0	622,241.0	665,478.0	537,875.2
	비중	87.1	82.9	83.3	86.1	85.6	85.0
광특(균특)	예산	42,700.0	61,470.0	69,350.0	59,280.0	58,784.9	58,317.0
	비중	8.8	11.2	11.1	8.2	7.6	9.2
합계	예산	487,962.0	550,620.0	625,043.8	722,628.6	777,519.1	632,754.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비중’은 당해연도 사업군 각각의 예산 비중을 의미함.

2) 비중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므로 합계가 100.0%와 다를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개요, 각 연도.

## 2.4. 지원 방식별 재정 투융자 현황<sup>3</sup>

- 식품산업 예산에서 융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2009~2013년 평균 75.2%). 융자 비중은 2009년 79.0%에서 2011년 70.8%까지 낮아졌다가 2013년 78.0%까지 증가하였음. 대조적으로 지자체 지원 방식 사업은 사업 수와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sup>3</sup> 사업별로 (경상)보조, 융자, 자부담, 지자체 분담 등이 섞여있어 분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 분야별 분류에서 ‘융자’ 프로그램에 속하는 사업을 융자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비융자’ 형태로 정의하였음.

표 3-6. 지원방식별 식품산업 정책 예산 추이, 2009-2013년

단위: 백만 원, %

분류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2013 평균
	용자	예산	385,400.0	390,800.0	442,595.0	555,200.0	606,552.0
비중		79.0	71.0	70.8	76.8	78.0	75.2
비용자	예산	102,562.0	159,820.0	182,448.8	167,428.6	170,967.1	156,645.3
	비중	21.0	29.0	29.2	23.2	22.0	24.8
합계	예산	487,962.0	550,620.0	625,043.8	722,628.6	777,519.1	632,754.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비중'은 당해연도 사업군 각각의 예산 비중을 의미함.

2) 비중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므로 합계가 100.0%와 다를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개요, 각 연도.

### 3. 식품산업 관련 정책사업

#### 3.1. 식품산업부문 R&D 현황<sup>4</sup>

- 2003~2012년 동안 식품산업 연구개발(R&D) 부문은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음.
  - 기관 수는 241.0%, 연구개발비는 145.6%, 연구원 수는 115.8%, 1인당 연구개발비는 110.4%, 종업원 천 명당 연구원 수는 189.2% 증가함.
- 매출액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도 않음. 연구개발비 사용 비중을 보면 상위 20개 사가 전

<sup>4</sup> 세부 내역은 제4장 식품정책 주요 사업 성과평가 참고.

체 비용의 60% 이상을 집행하고 있음.

- 특히 상위 5개 사가 연구비용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집행하고 있어 전반적인 연구개발 기반 및 역량은 양적 성장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음.

표 3-7. 식품산업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구 분		2003	2005	2010	2011	2012
연구 개발수행 기관 수(개)		173	191	397	531	590
총 연구개발비(십억 원)		183	234	287	380	451
총 연구원 수	총 연구원 수(명)	2,289	2,591	3,429	4,138	4,940
	상근상당	2,135	2,339	2,881	3,526	4,247
총종업원 수(명)		80,154	84,468	78,160	75,523	100,616
1인당 연구개발비(백만 원)		83	90	165	170	174
종업원 천 명당 연구원 수(명)		27.7	30.7	73.9	89.3	80.1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연도.

표 3-8. 식품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및 집중도

구 분		2003	2005	2010	2011	2012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십억 원)		183	234	288	380	45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0.66	0.81	0.76	1.09	0.87
연구개발비 집중도(%)	상위 5개사	42.2	45.5	38.2	45.6	44.0
	상위 10개사	54.3	55.9	49.0	55.8	53.0
	상위 20개사	67.1	66.8	60.5	64.3	62.5

주 1)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자체부담 연구개발비-외부 지출 연구개발비임.

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식품제조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연도.

### 3.2.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사업

- 농식품정책사업의 자금지원 방식은 저리 융자지원과 보조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수익률을 중심으로 보다 시장 지향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투자지원임. 농식품분야에서 투자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농식품 전문모태펀드 투자사업임.

- 농식품전문모태펀드는 현재까지 5,490억 원이 결성되어 총 2,688억 원이 투자되어 49.0%의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음.
  - 투자조합이 결성되어도 의무투자비율과 투자기간이 있어 투자기업을 발굴하기 전까지 투자가 실현되지 않아도 되므로 투자비율이 낮음.
  - 투자비율을 산업별로 보면 농축산식품업의 투자비율이 27.4%로 가장 낮음. 반면 식품산업 부문이 940억 원이 결성되어 708억 원이 투자되어 투자비율이 75.3%로 매우 높음.
  - 식품기업은 농식품모태펀드에 의한 투자지원방식이 적합한 산업부문이라는 것을 보여줌.

표 3-9. 농식품전문모태펀드 산업별 투자실적 및 투자비율

단위: 억원, %

투자분야	결성금액 (a)	투자금액			투자율(b/a)
		농림수산식품	비농식품	합계(b)	
농림축산업	920	430	156	586	63.6
농축산식품업	1,260	250	95	345	27.4
수산업	820	353	25	378	46.1
식품산업	940	582	126	708	75.3
특수목적	1,550	671	-	671	43.3
합계	5,490	2,286	402	2,688	49.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산업별 투자실적을 보면 식품산업은 2010년에 183억 원이 투자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800억 원이 투자되었음. 식품산업 관련 산업의 투자실적 183억 원까지 포함할 경우 983억 원에 이룸.
  -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분야에서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자비중이 36.6%(2,688억 원 중 983억 원)으로 매우 높음.

표 3-10. 농식품전문 모태펀드 산업별 투자실적

단위: 억원

구분	농림업		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비농업	합계
	농업	관련 산업	축산업	관련 산업	수산업	관련 산업	식품 산업	관련 산업		
2010	35	145	30	180	60	80	183	115	84	912
2011	20	195	65	47	61	10	274	59	132	863
2012	10	48	86	9	-	25	223	9	132	541
2013	-	78	10	11	10	35	120	-	54	318
2014	-	4	20	-	-	30	-	-	-	54
합계	65	469	211	248	131	180	800	183	402	2,688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4.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과제

- 식품산업의 구조적 영세성과 시장 실패(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R&D 추진 유인 부족 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식품산업 관련 재정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문별 예산 비중, 투융자 금액 대비 효율성, 재정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원 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유인이 적은 R&D, 기반 조성 등의 부문의 정책 개입의 역할과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함.
- 정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업체 수와 업체당 지원 규모의 한계로 예산 투입 대비 실제 효과성이 낮을 수 있음.

- 연 평균 주요사업 대상업체 수는 전체 식품제조업체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함. 지원 자격이 되는 업체 수에 비교하여도 그 비중은 여전히 작음. 따라서 정책자금 투입이 식품산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을 보면 수출 촉진과 식품산업 육성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음. 특성별로는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의 예산 비중이 높음. 그러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기 자금 용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체질 강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2013년 대규모 불용액 발생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사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2009~2013년 식품산업 예산의 85.0%를 농안기금에서 조달하였음. 이러한 재원 편중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재원별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통·폐합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용자 위주의 지원방식은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지원 조건(담보 조건, 상환 기간 및 금리 등)이 정책 수요자들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업체들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현행 지원방식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대안(예를 들어 지자체 매칭지원 확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활용 증대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R&D의 특성 상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낮을 수 있고, 결과를 실용화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민간시장의 참여 유인이 낮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문의 연구 기능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편 가능성 검토를 수반할 필요가 있음.

- 2008~2012년의 식품산업진흥 기반조성 1단계를 거쳐, 2013년부터는 기반조성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반조성 2단계에서의 핵심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식품 R&D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임.
- 연구개발 기반 부족 및 높은 집중도는 부분적으로 식품산업 내 구조적 영세성이 원인임. 매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대다수여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국내 식품산업 규모가 영세하여 기초 연구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기초연구 및 식품소재기술 연구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주요 사업별 성과평과와 과제

#### 1. 식품·외식 종합자금

##### 1.1. 사업 현황

##### 1.1.1. 사업 목적

-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의 단위 사업별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음.
  - 농식품 시설현대화: 식품제조, 가공·신선편이, 전통발효, 제조·가공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을 지원
  - 외식업체 육성: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식재료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우수외식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도모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국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 농가 판로 확보,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농공상용복합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014년 별도사업으로 분리)

### 1.1.2. 사업 추진 절차

-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음(농림축산식품부).
  - 민간이전: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농식품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 사업세부계획수립(유통공사) → 3) 세부사업추진(유통공사) → 4) 사업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5) 사업정산 승인 요청(유통공사 → 농식품부) → 6) 사업정산 승인 통보(농식품부 → 유통공사)
  - 지자체 보조: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농식품부 → 지자체) → 2) 사업세부계획수립(지자체) → 3) 사업 집행(지자체) → 4) 지도·감독(농식품부) → 5) 사업정산 보고(지자체) → 6) 사후 관리(농식품부, 지자체)
  - 용자 사업: 1) 자금지원 공고 → 2) 자금신청 접수(농협, 유통공사) → 3) 지원 대상 선정 및 자금 배정(농식품부, 농협·유통공사 본사) → 4) 세부사업계획 제출(선정업체 → 농협·유통공사) → 5) 공사 진행(업체) → 6) 대출 신청 및 기성고 확인 요청(업체) → 7) 기성고 확인(농협, 유통공사) → 8) 대출 실행(농협, 유통공사)
  
- 지원업체 선정 절차는 사업 별로 다음과 같음(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사업: 지원 안내(1월) → 지원업체 선정(2월) → 자금 배정(3월) → 대출(3월말 이후) → 정산
  -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사업: 지원 안내(1월) → 지원업체 선정 및 자금 배정(4월) → 대출 → 정산
  
- 지원 자격 및 조건은 <표 4-1>과 <표 4-2>에 요약되어 있음. 농공상융복합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014년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였음.

표 4-1. 식품·외식 종합자금 세부 사업 지원 자격 및 대상업체 수

단위: 개소

사업 명	지원 자격 및 요건	2012	2013
농식품시설현대화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인증 개보수 희망 업체</li> <li>- 전통식품·술 품질인증 관련 업체</li> <li>- 전통주 제조업체</li> <li>- 축산물열처리 가공제품 생산 업체</li> <li>-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신규 신청 포함) 및 무농약 농산물 원료 가공업체</li> <li>-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 희망자</li> <li>-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액 비율 50% 이상 업체</li> </ul>	17	24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용자)	농식품 가공업자(국내산 가공용 농산물 한정)		
외식업체 육성(용자)	- 외식업체	6	3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용자)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및 참가경영체	3	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14; 한국농식품유통공사.

표 4-2. 식품·외식 종합자금 세부 사업 지원 조건

사업 명	지원 조건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가공용 국내산 농산물 원료 구입비용</li> <li>- 지원 금리: 농업경영체 연 3.0%, 일반 업체: 4.0%</li> <li>- 대출기간: 1년 이내</li> <li>- 사업의무: 지원 금액의 125% 이상 구매</li> <li>- 지원 한도: 업체당 30억 원 이내(외식전처리는 10억 원 이내)</li> <li>- 배정기준: 가공원료 구매실적 및 계획에 의거</li> </ul>
농식품 시설 현대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시설자금); 원료구입 및 소요비용(운영자금)</li> <li>- 지원 금리: 농업경영체 연 3.0%, 일반 업체: 4.0%</li> <li>-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li> <li>- 대출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시설자금), 2년 이내(운영자금)</li> <li>- 사업의무: 기성고 확인(시설자금), 대출액의 125% 이상 운용(운영자금)</li> <li>- 지원 한도: 업체당 50억 원 이내</li> <li>- 배정 기준: 적격 심사 결과 득점 순 배정</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14; 한국농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sup>5</sup>
  - 자금 지원업체 전체 및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자금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함(2013년 322개 업체).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함.
  -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간담회, 업체 개별 방문을 실시하고,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병행함.
  - 시설자금 신청 후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다음 해 자금 신청 시 최후 순위로 배정하는 등 제제를 가하고 있음.

### 1.1.3. 사업 추진 실적

- 2011년 외식업체 육성,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지원, 신선편이가공시설, 농식품시설현대화, 전통발효식품육성(용자) 사업 등을 통합하여 식품·외식 종합자금 자원으로 개편하였음. 같은 해 유기가공식품명품화,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또한 2012년에는 산지 및 소비지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사업도 통합하였음(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사업).
  - 2013년 소비자유통시설지원 사업을 농협경제사업으로 이관하였음. 2014년에는 농공상용합협 중소기업육성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음.
-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은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함. 2012년 통합한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용자) 사업의 예산 비중이 가장 크고, 세부사업 예산 규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외식업체 사업의 용자 규모는 2011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음. 농공상용합협 중소기업육성 사업은 2013년까지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2014년 예산을 축소하였고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음.

<sup>5</sup> 농림축산식품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각 연도.

- 식품·외식 종합자금 세부사업은 모두 용자 사업임. 2013년 이관된 소비자 유통시설을 제외하면 용자 80% 조건임(연 이율 3%, 3~4%, 4%). 2년 내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 방식이며, 운영자금은 1~2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함.
  -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은 지원 금액의 125% 이상을 국내농산물 구매에 사용하도록 함.

표 4-3. 식품·외식 종합자금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 명	2011	2012	2013	2014
농식품시설현대화(용자)	57,200	44,800	36,300	36,300
외식업체 육성(용자)	8,800	7,000	3,000	3,000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용자)	-	91,000	91,000	91,000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용자)	4,000	17,200	37,200	17,200
용자 사업 예산 총계	70,000	160,000	167,500	147,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14.

- 식품·외식종합 자금 사업 내 세부사업의 지원업체 수는 연도별로 제한적임. 지원한도는 사업별로 상이함.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지원을 제외한 세부사업별 업체당 지원 금액은 감소하고 있음.<sup>6</sup>
  - 농식품시설현대화 50억 원, 농공상용복합형 중소기업 육성 40억 원, 외식업체 육성 6억 원(운영자금 5억 원, 시설자금 1억 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30억 원임.

<sup>6</su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한 평균을 구한 것으로 업체별 지원 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4-4. 식품·외식종합 자금 사업 세부사업별 재정 투입 현황

단위: 억 원

사업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식품시설현대화					26.4	15.1
외식업체 육성					11.7	1.0.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57.3	21.9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sup>7</sup>	업체 수	89	76	82	83	
	업체당 평균 금액	3.8	4.3	5.1	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14.

## 1.2. 사업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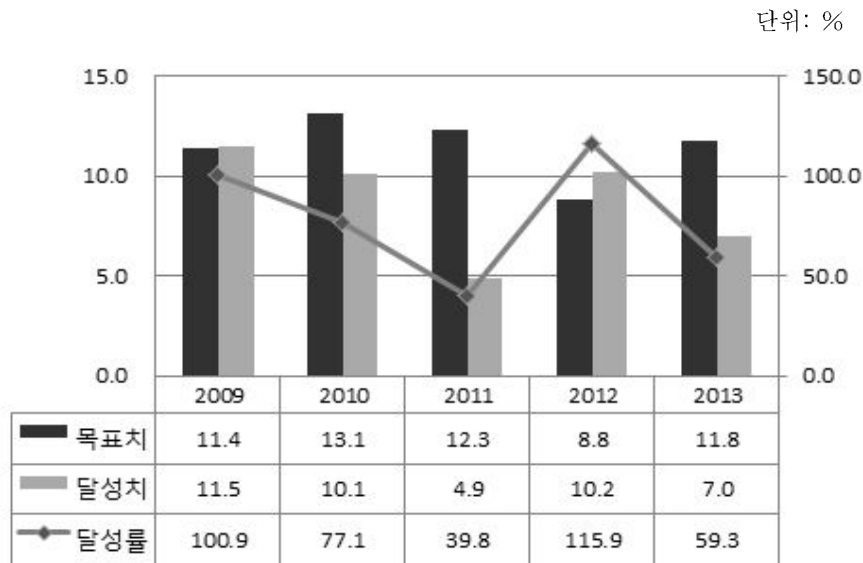
### 1.2.1. 매출액 성장 효과

-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식품시설현대화 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식품제조업 매출액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음.
  - 농식품시설현대화업체 매출액 증가율은 식품·외식 종합자금 지원업체 중 시설완료 가동업체와 운영자금을 받아 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와 시설현대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p72)을 고려하여 식품제조업 매출액 성장률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였음.
  - 2012년 통합된 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식품업체들의 원재료 구매 자금 수요를 충족하라는 점에서 평가지표로 사용하기 적합함.

<sup>7</sup>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2013.2.28. 현재), 최지현 외(2013) p103에서 재인용.

- 식품제조업 매출액 성장률은 [(당해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100] - 100](%)로 계산함. 식품제조업 매출액 성장률을 토대로 했을 때,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됨.
  - 연도별 목표치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시장 여건이나 전년도 목표치 달성 정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목표치 설정의 일관성이 부족함.
  - 실제 매출액 증가율도 매년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 결과 목표치 달성률의 편차도 매우 큰 편임. 사업 방식이나 성격을 변화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 식품제조업 매출액 성장률, 2009-2013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각 연도.

- 농식품시설현대화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은 [(지원 후 가동업체의 당해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100](%)로 계산함. 2011, 2012년 자료만 이용할 수 있어 정량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매출 증가율 목표치는 두 해 모두 전년대비 5%였고, 실제 증가율은 2011년

12.6%, 2012년 4.2%였음<표 4-5>. 전체 식품제조업 평균 매출액 성장률과 비교하면 2011년에는 평균 이상이었으나 2012년에는 오히려 하회하였음.

- 최근 세계 경기 불황과 내수 경기 위축 등으로 2012년 식품산업 업종별 생산액 성장률이 2011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여건 악화가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p41).
- 지원 대상 업체의 영세성, 자금 지원 규모, 물적 기반조성 지원 사업의 한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5. 식품산업 주요사업별 대상업체 매출액 성장률 비교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식품제조업체 전체	4.9	10.2	-
시설현대화 지원 업체	12.6	4.2	-
식품가공원료매입 업체	-	-	0.5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22.3	12.8	1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보고서, 2013

- 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사업은 2012년에 신규 통합되어 이용 가능한 지표가 2013년에 한정됨. [(지원업체의 당해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 100 - 100](%)로 계산한 매출액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이용함(농림축산식품부 성과보고서, 2014). 2013년 매출액 증가율 목표는 전년대비 10%였으나, 실제 증가율은 0.5%에 그침.
  - 시장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지원업체 중 47%가 매출 감소를 겪음(농림축산식품부 2014. p137).
-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사업 대상업체의 특성이 다르고 평가 가능한 기간이 짧아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지원 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성장률은 전체 식품제조업체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경기 침체 여파를 감



안하더라도 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사업 대상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매우 부진한 편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사업은 재정 투융자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투융자 금액 대비 효과성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시설현대화 사업 업체의 매출 성장률은 2011년 전체 평균 성장률보다 높았으나, 2012년에는 크게 하회하였음.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및 시설 가동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의 효과가 지원 당해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2012년 성장률(4.2%)는 전년도 사업 결과로 볼 수도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설현대화 사업 효과성은 재정 투입액 대비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효과를 단일 연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2013년 식품가공원료매입 업체 매출액 성장률은 목표치(1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식품제조업체 평균 성장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
  - 대조적으로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 시행한 교육 및 컨설팅은 대상업체의 매출액 증가 효과가 큼.

## 1.2.2. 지원업체 수 비중

-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은 지원 대상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낮다는 점 외에도, 사업 지원을 받는 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음<표 4-6>.
  - 2009~2013년 동안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과 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은 업체 평균수는 각각 82.5개, 10.8개임.
  - 같은 기간 전체 식품사업체 대비 두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비중은 평균 0.15%에 불과함.

표 4-6. 주요 사업별 지원 업체 수 및 재정 투입, 2009-2012년

사업 명	세부 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식품·외식 종합자금	식품가공 원료 매입자금 지원	전체 사업체 대비 지 원업체 수 비중(%)	89 (0.15)	76 (0.12)	82 (0.13)	83 (0.13)
		지원 금액(억 원)	335.1	327.9	416.4	630.1
		평균 지원 금액(억 원)	3.77	4.31	5.08	7.59
	시설 현대화 지원	전체 사업체 대비 지 원업체 수 비중(%)	17 (0.03)	11 (0.02)	8 (0.01)	7 (0.01)
		지원 금액(억 원)	221.7	103.5	141.2	94.7
		평균 지원 금액(억 원)	13.04	9.41	17.65	13.53
식품제조업체 수(천 개소)			58.0	62.4	63.0	63.9

주: '비중'은 전체 식품산업체 수 대비 지원업체 수 비중을 의미함. 외식업체를 포함할 경우 '비중'은 더욱 작아질 수 있음.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수로 한정하면 '비중'은 커질 수 있음.

자료: 지원업체 수, 지원 금액: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최지현 외(2013)에서 재인용·재구성. 식품산업체 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http://www.atfis.or.kr>>)

-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지원 대상 업체 수 및 전체 사업체 수 대비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정책개입을 통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1.2.3. 자금지원 집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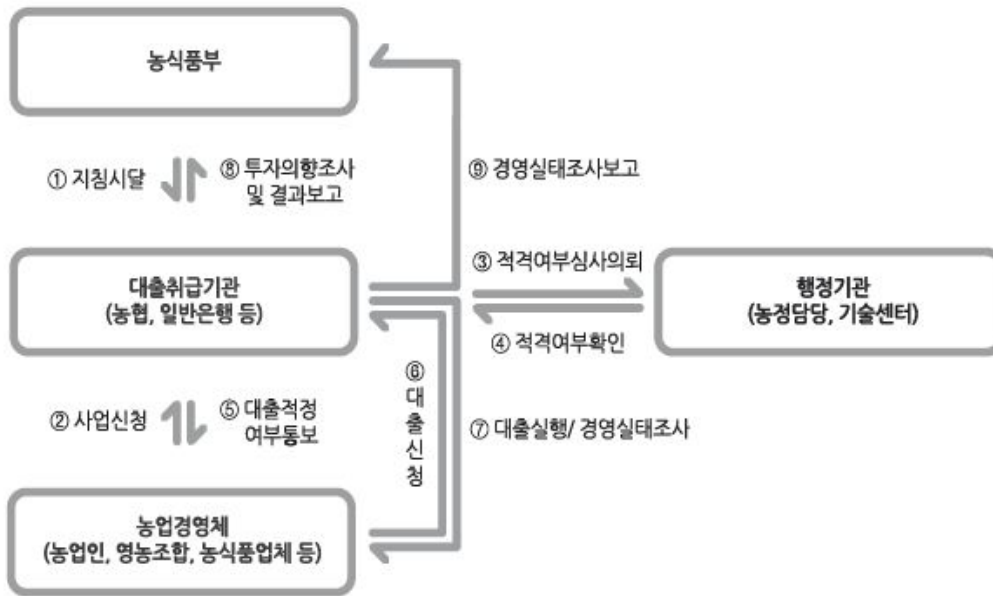
- 식품·외식 종합자금은 2011~2013년 동안 평균 1,309.7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162.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타 사업 및 사업군에 비해 불용 실적이 높은 점은 사업 수요 예측이나 예산 집행 효율성 개선이 필요함.
  - 사업군별·연도별 집행률은 대부분 95%를 상회하였으나, 식품산업 육성 분야의 집행률이 저조한 편임. 특히 2009년, 2013년 식품산업 육성 분야 집행률은 80%를 하회하였음.

- 용자 사업들의 현재 연리(연 3%, 3~4%, 4%) 수준이 시중 금리에 비해 실질적으로 낮다고 보기 어렵고, 타 사업이나 기관(예를 들어, 농업종합자금지원 사업, 농신보 등) 금리보다 높은 수준임. 상환 조건 역시 타 사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지원 조건 때문에 식품업체들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중도 포기가 증가하여, 불용액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음.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지원 금액의 125% 이상을 국내농산물 구매에 사용’ 등도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2.4. 타 사업과의 중복성

- 식품·외식 종합자금사업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 사업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농업종합자금의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액 비율 50% 이상 업체’ 또는 ‘농산물 가공사업, 식품가공업체’ 등의 지원 조건은 두 사업 모두에 적용됨.
- 농업종합자금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 후 자금 신청을 하면 타당성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임. 지도금융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높임.
  - 사업대상은 원예·축산·가공사업(원예·축산업자, 농산물가공업자,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등), 농기계 구입·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꿀·녹용 가공산업 육성, 쌀 가공산업 육성 등임.
  - 농산물 가공 사업자는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농식품업체 (대기업 제외) 및 생산자단체를 포함함.

그림 4-2. 농업종합자금 사업 추진 체계



자료: <http://www.6차산업.com/>

- 원예·축산·가공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리 3%(시설, 개보수, 운영자금)로 용자를 실시함. 사업대상에 따라 3~5년 거치-10년 균분상환, 2~3년 거치-5년 균분 상환 등이 조건이고,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함. 꿀·녹용 및 쌀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연리 3%를 적용함.
  -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원칙을 적용하고, 시설, 개보수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3년 거치 5~7년 균분상환 등의 지원조건을 적용함.
  - 2015년부터는 농기계생산지원사업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이상 연리 3%),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연리 4%)를 제외하고 연리를 2%로 조정하였음.
  
-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지원은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가장 많음. 국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

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대출심사 기준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출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려고 함.

- 시중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정책 금리의 이점이 일정 부분 상쇄되었으나, 거치 및 균등상환 기간이 길어 사업자들의 선호가 높은 편임. 정책 자금 규모 상 있어 현장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음.
-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과 농업종합자금지원 사업 지원 대상 등이 일부 중복되고 있음. 따라서 중복되는 영역을 일부 통합하거나 이관함으로써 사업 예산 규모 확대, 효율성 증진 및 집행 절차 간소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3. 개선 과제

#### 1.3.1. 적정 예산규모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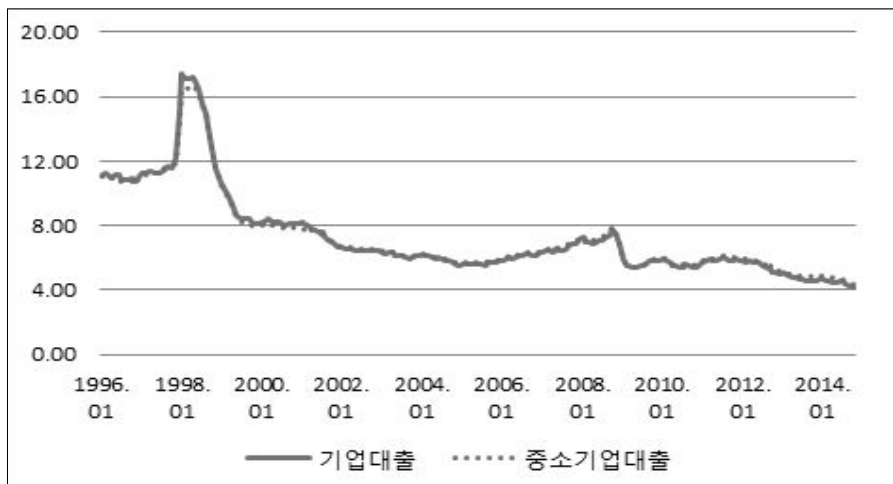
-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의 예산 규모나 지원 업체 수, 업체당 지원 규모 등으로 고려할 때 정책자금의 직접적인 투자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원 자격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유사한 성격을 지닌 타 사업으로 부분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은 농산물가공사업(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또는 생산자단체<sup>9)</sup>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함. 대출 금리는 2015년 기준 2.0%(일부 사업 제외)임.

- 지원 용도가 식품·외식 종합자금과 다르나, 사업 부분 통합을 고려할 경우 지원 용도 및 대출 기간 등을 조정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식품·외식 종합자금 사업을 유지할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화(targeting)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비용(예산)효과성과 사업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1.3.2. 지원 금리 개선

- 식품산업 정책 중 대부분의 용자사업은 연 3~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정책자금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을 경우, 사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4-3.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1996-2014년



자료: 한국은행, 대출금리 통계, 각 연도.

<sup>8</sup> 2015년 변경 내용 기준임.

### 1.3.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활용

- 현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는 2013년 말 현재 약 2.6조 원을 조성하였고, 보증잔액은 9.4조 원 수준임(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책자금의 강점인 저금리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그림 4-2>. 현행 정책 금리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시중 금리 수준과 연동되는 정책자금 금리 수준을 책정하되, 상·하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요 업체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유통·가공 부문에 대한 보증 지원은 개인 및 생산 부문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2013년 말 유통·가공 부문 보증잔액 4,177억 원, 전체 보증잔액 대비 4.4%). 가공·유통 부문의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2014.1)에서 가공·유통업 보증지원 확대(2018년까지 2.3조 원, 전체 보증잔액의 15% 이상), 농수산물 가공업자 지원 확대(생산, 가공, 제조까지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여, 농신보 제도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재원 규모와 업체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정책자금 투입보다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금융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신용보증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의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이정환 외 2013).

## 2.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 2.1. 사업 현황

#### 2.1.1. 사업 목적

-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 식품 컨설팅: 중소 식품·외식업체 수준별·단계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견 기업으로 육성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식품제조·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계층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식품·외식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 2.1.2. 예산 집행 현황

- 2009~2013년 누적 사업비는 322억 원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시행함(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표 4-7.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전한 식생활 확산	2,000	3,230	4,067	4,640	0
식품산업 컨설팅	1,200	1,200	2,400	2,400	3,215
식품산업 인력 양성	3,523	1,250	413	770	1,102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0	0	0	600	0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0	0	0	0	1,000
총계	6,723	5,680	6,880	8,410	5,317

주: 1)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은 2014년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으로 이관.

2)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은 2014년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사업으로 이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각 연도.



- HACCP 의무적용 품목 및 대상업체 확대로 컨설팅 수요 지속적 증가 전망
- 2014년에는 국고보조 50% 및 지자체 정액보조 형태로 지원 방식을 변경

### 2.1.3. 사업 추진 절차

-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임. 사업시행주체에서 실시하는 세부 사업 내용은 <표 4-8>과 같음.

표 4-8.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내역

사업 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관련 기술 중 10개	- 위탁 교육기관 8개소 선정 및 1년간 교육 지원
현장 코칭 (경영·기술)	- 경영·기술: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 준비자 - 외식: 외식업체, 창업 준비자 - 수출: 유통 수출업체	- 경영, 기술, 외식, 수출 분야 별로 컨설팅 지원(컨설팅 비용 중 100만 원 국고 부담, 10만 원 자부담)
현장 코칭 (R&D 멘토링)	-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 R&D 멘토링(컨설팅 비용 중 80% 지원, 400만원 한도)
심층 컨설팅 (창업 지원)	- 업력 5년 미만, 매출액 5억 원 미만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 기술, 경영, 수출, 창업 준비 컨설팅(컨설팅 비용 70% 지원, 500만 원 한도)
심층 컨설팅 (경영개선)	- 업력 5년 이상 또는 매출액 5억 원 이상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 기술, 경영, 외식, 수출 컨설팅(컨설팅 비용 중 50% 지원, 1천만 원 한도)
심층 컨설팅 (판로 개척)	- 중소 식품제조·가공 및 외식업체	- 기술, 경영, 외식, 수출 컨설팅(컨설팅 비용 중 50% 지원, 1천만 원 한도)
수출 컨설팅	- 신규 및 기존 수출업체	- 신규 수출기업 육성, 시장 진입 및 수출 확대, FTA 수출 지원 등

주: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컨설팅,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 해외 한식당 컨설팅 지원,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은 표에서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식품외식기업 지원 사업 종합안내서, 2014.

- 심층 컨설팅 및 현장코칭 지원업체 수와 지원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업체당 평균 지원 금액은 감소하거나(심층 컨설팅), 증감을 반복함(현장코칭).

표 4-9. 연도별 컨설팅 지원 추이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지원 내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심층 컨설팅	지원업체 수	71	111	118	134
	전체 사업체 대비 지원업체 수 비중(%)	0.12	0.18	0.19	0.21
	지원 금액	684	999	952	937
	업체당 평균 지원 금액	9.63	9.00	8.07	6.99
현장 코칭	지원업체 수	206	131	214	250
	전체 사업체 대비 지원업체 수 비중(%)	0.36	0.21	0.34	0.39
	지원 금액	200	200	200	276
	업체당 평균 지원 금액	0.97	1.53	0.93	1.10

주: '비중'은 전체 식품산업체 수 대비 지원업체 수 비중을 의미함. 외식업체를 포함할 경우 '비중'은 더욱 작아질 수 있음.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수로 한정하면 '비중'은 커질 수 있음.

자료: 지원업체 수, 지원 금액: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최지현 외(2013)에서 재인용·재구성.

식품산업체 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http://www.atfis.or.kr>>)

## 2.2. 사업 성과평가

### 2.2.1. 매출액 성장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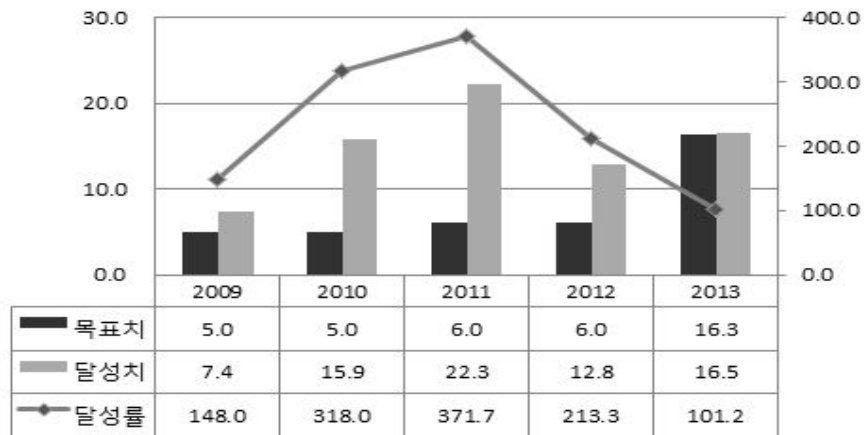
-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대상 업체의 컨설팅 전후 매출액 증가율과 업체 만족도를 사용할 수 있음.
- 컨설팅 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은 [(컨설팅 지원업체의 당해연도 매출액/컨설팅 지원업체의 전년도 매출액\*100) - 100](%)로 계산함. 사업 시행 초기인

2009년을 제외하면 대상업체들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10%를 상회함. 식품산업육성 관련 다른 사업 지원 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성장률과 비교해도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예산 규모 대비 효과성을 고려하면 사업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 사업 대비 매출액 증가 효과도 높음.

그림 4-4. 컨설팅 대상업체 매출액 성장률, 2009~2013년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각 연도.

## 2.2.2. 지원 대상 업체 만족도 평가

-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업체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분석은 정량적인 관점에서 고부가 식품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음. 이 절에서는 최지현 외(2013)의 연구에서 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음.

### □ 컨설팅 사업

- 설문대상 조사 대상업체 547개 중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수는 102개(18.6%)였음. 컨설팅 유형 별로 구분하면,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업체 전부가 경영 또는 기술 컨설팅을 받았음. 수출 및 기타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수는 각각 21개(20.6%), 16개(15.7%)로 비교적 적었음.<sup>9</sup>

표 4-10. 지원 대상 업체들의 컨설팅 희망 분야 교차분석 결과

구분	희망 분야			
	경영	기술	수출	기타
지원 분야				
경영 컨설팅	28	40	29	5
기술 컨설팅	28	47	22	5
수출 컨설팅	3	8	9	1
기타 컨설팅	4	7	2	3

자료: 최지현 외(2013) 설문조사 자료 재분석.

- 지원 받은 컨설팅 종류에 관계없이 기술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고, 경영과 수출 컨설팅에 관한 수요 비중은 비슷하였음. 수출 컨설팅을 받지 않은 업체들의 수출 컨설팅 수요가 많은 것은 향후 수출 계획을 고려한 업체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함.
- 지원 대상 업체들의 보완 요청 사항은 지원 받은 컨설팅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현장 수요 또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컨설팅 수요 비중이 높은 것은 지원 사업의 질적 측면 개선과 관련 정보 제공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성장단계별 컨설팅에 대한 수요 비중은 높은 것은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업력이 다양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업체들의 자부담이었음. 현행 사업에서 정한 지원액 최대한도 및 자부담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sup>9</sup> 복수 응답이어서 개별 응답의 합계가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체 표본 수보다 클 수 있음.

표 4-11. 지원 대상 업체들의 컨설팅 보완 요청 사항 교차분석 결과

보완 사항	지원 분야	현장 수요 반영한 실습 컨설팅 강화	컨설턴트 전문성 확보	성장단계별 컨설팅	식품소비 트렌드 반영한 컨설팅 다양화	기타	합계
1순위	경영	30 (29.4%)	13 (12.7%)	21 (20.6%)	37 (36.3%)	1 (1.0%)	102 (100.0%)
	기술	40 (39.2%)	10 (9.8%)	22 (21.6%)	29 (28.4%)	1 (1.0%)	102 (100.0%)
	수출	8 (38.1%)	3 (14.3%)	5 (23.8%)	5 (23.8%)	0 (0.0%)	21 (100.0%)
	기타	8 (50.0%)	0 (0.0%)	2 (12.5%)	6 (37.5%)	0 (0.0%)	16 (100.0%)
2순위	경영	26 (25.5%)	16 (15.7%)	23 (22.5%)	37 (36.3%)	0 (0.0%)	102 (100.0%)
	기술	18 (17.6%)	15 (14.7%)	27 (26.5%)	42 (41.2%)	0 (0.0%)	102 (100.0%)
	수출	6 (28.6%)	2 (9.5%)	4 (19.0%)	9 (42.9%)	0 (0.0%)	21 (100.0%)
	기타	3 (18.8%)	4 (25.0%)	5 (31.3%)	4 (25.0%)	0 (0.0%)	16 (100.0%)

자료: 최지현 외(2013) 설문조사 자료 재분석.

표 4-12. 컨설팅 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교차분석 결과

컨설팅 받지 않은 이유	1순위	2순위
신청 절차의 어려움	22 (5.9%)	26 (7.0%)
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22 (5.9%)	22 (5.9%)
자부담 비중 높음	104 (28.0%)	63 (17.0%)
현업에 도움이 안 됨	76 (20.5%)	60 (16.2%)
사후관리 부재	47 (12.7%)	59 (15.9%)
원하는 분야의 컨설팅이 없어서	44 (11.9%)	69 (18.6%)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서	53 (14.3%)	58 (15.6%)
기타	3 (0.8%)	14 (3.8%)

자료: 최지현 외(2013) 설문조사 자료 재분석.

수 있음. 관련 분야와 관계가 적거나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지원 받은 업체들의 보완 요청 사항 중 현장 수요 및 트렌드 반영, 성장단계별 컨설팅과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외에 식품업체들의 사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최지현 외(2013)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장코칭, 심층코칭, 농공상용합컨설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업체 비중이 높음.
  - 현장코칭(‘만족 또는 매우 만족’ 비중 33%)에 대한 만족도는 심층코칭(58%)이나 농공상용합컨설팅(67%)에 비해 낮았음.
  - 설문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은 경영 및 기술애로 사항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매출액 증대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사업 성격을 개선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식품관련 교육

- 설문대상 조사 대상업체 547개 중 식품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수는 318개(58.1%)였음.<sup>10</sup> 교육 유형 별로 분류하면, 기술 분야 교육을 받은 업체(169개, 53.1%)가 가장 많았고, 경영 분야(106개, 33.3%), 기타 분야(77개, 24.2%), 수출 분야(24개, 7.5%) 순이었음.
  - 분야별 식품관련 교육 만족도(‘매우 만족’ 또는 ‘만족’) 비중은 기술(72.6%), 경영(77.7%) 분야가 수출(62.5%), 기타(63.7%) 분야보다 높았음.
- 지원 대상 업체들의 보완 요청 사항을 경영, 기술 분야 간에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중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요청 비중이 높은 사항((1), (3), (5), (7)) 중 교육 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를 제외하면, 컨설팅 대상

<sup>10</sup> 복수 응답이어서 개별 응답의 합계가 교육 경험이 있는 전체 표본 수보다 클 수 있음.

업체들의 요청 사항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음. 컨설팅과 달리 업체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는 형태이므로 편의성을 높이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요가 있을 수 있음.

표 4-13. 지원 대상 업체들의 식품관련 교육 보완 요청 사항 교차분석 결과

보완 사항	지원 분야	(1)	(2)	(3)	(4)	(5)	(6)	(7)	(8)	합계
1 순위	경영	44 (41.5%)	3 (2.8%)	17 (16.0%)	9 (8.5%)	14 (13.2%)	2 (1.9%)	17 (16.0%)	0 (0.0%)	106 (100%)
	기술	60 (35.5%)	13 (7.7%)	28 (16.6%)	10 (5.9%)	23 (13.6%)	4 (2.4%)	31 (18.3%)	0 (0.0%)	171 (100%)
	수출	7 (29.2%)	3 (12.5%)	4 (16.7%)	2 (8.3%)	4 (16.7%)	1 (4.2%)	3 (12.5%)	0 (0.0%)	24 (100%)
	기타	24 (31.2%)	4 (5.2%)	17 (22.1%)	3 (3.9%)	9 (11.7%)	1 (1.3%)	16 (20.8%)	3 (3.9%)	77 (100%)
2 순위	경영	16 (15.1%)	8 (7.5%)	14 (13.2%)	9 (8.5%)	19 (17.9%)	8 (7.5%)	32 (30.2%)	0 (0.0%)	106 (100%)
	기술	29 (17.2%)	12 (7.1%)	23 (13.6%)	16 (9.5%)	27 (16.0%)	13 (7.7%)	49 (29.0%)	0 (0.0%)	169 (100%)
	수출	2 (8.3%)	0 (0.0%)	2 (8.3%)	3 (12.5%)	7 (29.2%)	2 (8.3%)	8 (33.3%)	0 (0.0%)	24 (100%)
	기타	11 (14.3%)	7 (9.1%)	12 (15.6%)	5 (6.5%)	10 (13.0%)	3 (3.9%)	28 (36.4%)	1 (1.3%)	76 (100%)

주: (1) 현장수요에 부응한 실습 교육과정 강화, (2) 교육과정의 단계화, (3) 수요자 중심의 교육 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야간, 사이버 교육과정 확대), (4) 교육 강사의 전문성 확보, (5) 기업의 성장단계별 교육과정의 단계화, (6) 해외연수 확대, (7)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8) 기타임.

자료: 최지현 외(2013) 설문조사 자료 재분석.

- 식품 관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와 차이를 보였음. 자부담 비중이 높거나 원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은 크게 낮아진 반면,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가 많았음. 두 사업 모두 ‘현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점은 향후 제도 개선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임.

표 4-14. 식품관련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교차분석 결과

컨설팅 받지 않은 이유	1순위	2순위
신청 절차의 어려움	9 (3.9%)	0 (0.0%)
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13 (5.7%)	1 (0.4%)
자부담 비중 높음	21 (9.2%)	67 (29.3%)
현업에 도움이 안 됨	48 (21.0%)	59 (25.8%)
사후관리 부재	37 (16.2%)	38 (16.6%)
원하는 분야의 컨설팅이 없어서	49 (21.4%)	36 (15.7%)
식품관련 교육 사업을 알지 못해서	52 (22.7%)	18 (7.9%)
기타	0 (0.0%)	10 (4.4%)

자료: 최지현 외(2013) 설문조사 자료 재분석.

### 2.2.3. 참고 사례: 농협 재무컨설팅

- NH농협은행은 2014년 8월 13일 발표한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계획」에서 농식품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14년 6월말 11.4조 원에서 17년 말 18.1조 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도 병행하기로 하였음.
  - 농식품기업금융 전문인력을 연간 60명씩 양성하여 2020년까지 360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영업현장에서 농식품기업을 진단,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2012년부터 재무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2012~2014년까지 26건의 심층 컨설팅을 수행하였음. 컨설팅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컨설팅 효과를 높이고 있음.
  - 2014년에는 권역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 재무·경영 컨설팅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원가 분석·인사·마케팅 진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1회 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는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여 사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2.3. 개선 과제

### 2.3.1. 사업규모 확대

- 성과 평가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품산업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높고(매출액 증가율 기준), 수요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만족도 조사 결과 기준).
- 사업시행 주체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4년 배정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였음. 이는 그동안의 컨설팅 사업 성과가 우수하여 식품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한 결과일 수 있음. 현장 수요 증대(HACCP 의무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수요 증가 전망)에 대응하고,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 고부가 식품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3.2. 컨설팅 분야 확대 및 전문성·효율성 제고

- 한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시설현대화 지원 등 H/W 중심의 지원보다 S/W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컨설팅 사업을 받은 업체도 외부 여건 악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원 수요 충족과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설문 조사 결과(표 4-11)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 수요 또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많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영·기술·수출 컨설팅 외에 재무 컨설팅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방

-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농협 상호금융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 재무컨설팅’과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설문 조사 결과(표 4-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컨설팅 지원 사업은 매출액 증대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미진함. 해당 분야 컨설팅의 질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농신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식품우수기술사업화자금 대출 및 보증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고부가 식품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컨설팅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대상업체들의 사후 만족도 조사 등을 보다 정밀화하여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예상되는 업체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컨설팅의 질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표 4-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컨설턴트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도 비중이 높음.
- NH농협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해 왔고, 수출업체들에 대한 컨설팅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임.<sup>11</sup>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업체 또는 수출업체 등으로 대상을 특화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여 차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2.3.2. 사후관리 강화

- 지원 업체 대상 환류 과정을 강화하여 컨설팅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성장

---

<sup>11</sup> 면접 조사 결과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컨설팅 사후관리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컨설팅을 원하는 업체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신규 업체들의 수요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지원 대상 업체는 자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2.3.4. R&D지원, 시설현대화 사업과의 연계 강화로 효율성 제고**

- 현재 효과가 미진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업의 지원 자격과 연계를 하여 사업간 유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여건 진단 또는 컨설팅을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자부담에 부담을 갖는 업체가 많으므로(표 4-11), 진단·컨설팅 수준과 자부담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지원 업체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음.

### 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3.1. 사업 현황

##### 3.1.1. 목적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따라서 지역의 농축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식품사업단을 육성함.
  - 최근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100개소의 사업단을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농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3.1.2. 사업의 특성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지역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학관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음.
- 본 사업의 초기인 2005년에는 20개소를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22개소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고, 초기에는 지역농업클러스터로 추진되었음. 이후 2008년 광역클러스터, 2010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재편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미래 농산업은 생산과 가공 등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종합적인 식품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기에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일정한 범위로 진행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성격이 변화되면서 불규칙하게 사업이 진행된 특성이 있음.
- 2005년 20개 시범사업단으로 출발한 클러스터사업은 2008년 22개의 본사업, 2009년 12개의 광역사업단, 2011년 13개의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광역사업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음. 농업·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유지 등을 위하여 사업명과 추진방식의 변경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11년까지 선정된 사업단의 유형은 축산, 가공, 식량, 원예 등이 중심이며, 사업단별 조직화와 사업화의 성과달성 등의 유리성으로 축산이 17개 사업단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공사업단 16개, 식량이 12개, 원예 11개 순임.
  - 그리고 사업의 초창기에는 1차 생산물 중심의 사업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 선정 사업단은 생산에서 가공이 접목된 사업단을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 농림축산분야의 최근 6차산업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
    - 사업 초기는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가공과 서비스 제공 등의 2, 3차산업으로 융복합되고 있음.

### 3.1.3. 예산 및 지원 조건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2014년 185억 원 정도임. 이 중에서 보조는 94억 원, 지방비는 91억 원임. 최근 관련 사업의 예산은 2011년 555억 원에서 2012년 364억 원, 2013년 296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보조에 매칭하여 지방비도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비는 추가적인 자부담 등이 부과되므로 매년 사업을 위한 재정 소요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별 초기 지원액은 2005년(20개소) 5억 8천만 원, 2008년(22개소) 8억 4천만 원, 2009년(12개소) 4억 1천만 원 그리고 2011년(13개) 3억 8천만 원임.

표 4-1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69,030	55,510	36,440	29,680	18,528
보 조	135,800	27,910	18,380	15,000	9,408
지방비	133,230	27,600	18,060	14,680	9,1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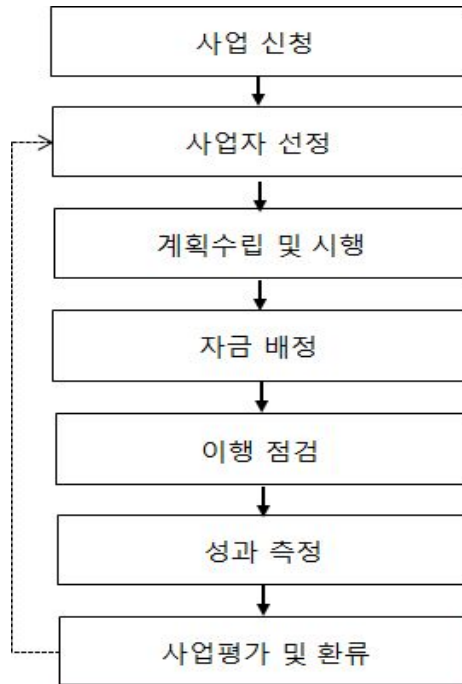
- 사업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등이고, 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이 대상임.
-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이 해당됨.
  - 그리고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등이 있음.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에는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등이 있음.

- 구체적으로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분야에는 지역 내 개별 농어업 경영체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하여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체계 구축 등이 포함됨. 그리고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축산식품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추진 등이 포함됨.
- 구체적인 사업의 재원은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사업)이고, 지원기간은 5년 지원,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등의 조건이 포함됨. 그리고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로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 원(국고) 내외로 지원하고 있음.

#### 3.14. 추진 절차

- 본 사업의 추진 절차는 총 7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① 사업 신청, ② 사업자 선정, ③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④ 자금 배정, ⑤ 이행 점검, ⑥ 성과 측정 및 ⑦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가 있음.
- 사업 신청 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사업계획을 제출함. 그리고 사업단은 사업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통보한 사업에 대해 시·도의 사업단은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는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실행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전년도 7월~12월), 사업단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함.

그림 4-5.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 추진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 이행점검단계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에서 사업단은 연말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

### 3.2. 추진 실적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시범사업(2005년)에서 현재까지 사업명이 변경되어 추진되는 등 본 사업에서 많은 변화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초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의 실시 전 사업의 성격과 목표 등이 자주 변동되어 선정 사업단의 전문성 부족과 행정적 지원 미흡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미흡 등으로 사업단의 선정과 운영에서 갈등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하여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및 사업신청 조건 등으로 인한 매칭 펀드 조성의 어려움과 적정 사업단 구성의 애로 등으로 사업의 신청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6.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05	2008	2009	2011	2014
사업단 수	20	22	12	13	10
평균 지원액*	2,909	3,113	2,690	-	-
예산 지원액	58,170	68,490	32,280	28,749	8,000

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5년간 지원하는 사업, 2005년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의 정책목표 수정으로 사업명이 지역클러스터, 광역클러스터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등으로 변경되어 매년 일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불연속 사업으로 진행되었음.

\* 는 5년간 종료된 사업이 대상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 사업기간이 종료된 2005~2009년 사업에 지출된 예산은 1,589억 원이고, 2005년 선정 사업단은 평균 29억 원, 2008년 사업단은 31억 원 그리고 2009년 사업단은 26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음.
- 2005년 2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고, 5년간 투입된 국고 보조액은 581억 원, 2008년 선정된 사업단에 투입된 국고보조 예산은 684억 원, 2009년은 322억 원, 2011년 287억 원등으로 매년 본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예산은 감소하고 있음.

-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의 지원실적에서 4년차 인센티브는 사업단은 전체 20개 사업단에서 2개를 제외하고 18개 사업단이 받았고, 5년차에서는 15개 사업단이 받았음. 초기 사업단의 성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축소되고 있음.
- 2008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의 지원 실적에서 4년차 인센티브는 사업단은 전체 22개 사업단에서 6개를 제외하고 16개 사업단이 받았고, 5년차에서는 9개 사업단이 받았음.
- 2009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의 지원 실적에서 4년차 인센티브는 사업단은 전체 12개 사업단에서 6개 사업단이 받았고, 5년차에서는 6개 사업단이 받았음.
- 본 사업에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실적에서 보면, 2005년과 2008년 선정 사업단의 인센티브는 사업이 진행함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예산의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구조임.
- 최근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사업단의 선정보다는 기존 사업단의 지속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이 더욱 필요함.

표 4-17.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도	시·군	사 업 명	연도별 국비 지원현황					
			계	'05	'06	'07	'08	'09
경기	안성	안성마춤	3,846	565	1,335	1,506	190	250
	포천	포천 전통한과마을	1,449	550	570	119	210	-
강원	춘천·철원·화천· 양구·인제(5)	한우 하이록	2,979	611	1,019	969	230	150
	태백·영월· 평창·정선(4)	백두대간 농업포럼	2,473	600	600	883	240	150
충북	영동	포도 농산업 클러스터	3,080	577	1,273	760	180	290
	괴산	괴산 친환경 청정고추	2,584	550	860	824	200	150
충남	아산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2,271	550	760	801	160	-
	서천	한산 모시	2,196	550	630	606	210	200
전북	장수	장수 사과	2,268	550	690	668	210	150
	정읍	정읍 환원 순환농업	2,710	550	750	1,070	190	150
	임실	임실 낙농(치즈)	3,007	550	1,000	1,457	-	-
전남	보성	보성 녹차	4,033	561	1,339	1,623	260	250
	함평	함평 과학농업	1,903	550	670	683	-	-
	순천·고흥· 보성·강진	전남 친환경쌀	3,348	600	1,060	1,318	220	150
경북	도청	경북 한우	5,210	715	1,985	2,000	310	200
	영주	풍기 인삼	2,640	550	870	860	210	150
경남	김해·창녕·남해· 하동·산청·거창	경남 친환경쌀	2,644	600	890	1,004	150	-
	하동	하동 녹차	3,565	561	1,409	1,105	290	200
	고성·김해·산청· 양산·창원·함안· 함양·통영·거창· 의령	경남 양돈	3,366	600	1,140	1,296	180	150
제주	도청	제주 감귤	2,598	700	550	748	450	150
합계		20개 사업단	58,170	11,640	19,400	20,300	4,090	2,740

주: 본 사업의 예산은 총 5년간 지원하고, 4-5년차에 사업성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표 4-18. 2008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도	시·군	사 업 명	연도별 국비 지원현황					
			계	'08	'09	'10	'11	'12
경기	화성	화성 웰빙떡	2,820	820	800	800	400	-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고성, 양양	강원 영동 한우령	3,345	960	935	800	650	-
	홍천	홍천 늘푸름 한우	3,115	800	665	1,000	650	-
충북	도청	충북 친환경 축산	2,970	1,170	800	800	-	200
충남	서산	서산 생강	2,450	850	800	800	-	-
	논산	논산 예스민 딸기	2,620	820	800	1,000	-	-
	홍성	홍성 백년대계 한우	2,590	790	800	800	-	200
전북	진안	진안 친환경 한방	3,470	820	800	1,000	650	200
	무주	무주 반딧불 산머루	3,340	790	800	1,100	650	-
	남원	남원 친환경 흑돈	2,820	820	800	800	400	-
	완주	완주 감	3,020	820	800	1,000	400	-
전남	영암	영암 무화과	4,170	770	800	1,200	1,000	400
	곡성	곡성 멜론	2,970	770	800	800	400	200
	신안	신안 시금치	2,570	770	800	800	-	200
	구례	구례 산수유	2,770	770	800	800	400	-
	무안	무안 황토고구마	4,070	770	800	1,100	1,000	400
경북	경산	경산 종묘	3,221	820	871	800	-	730
	상주	상주 고평지포도	2,767	810	757	800	400	-
	영천	영천 와인	3,642	820	772	1,000	650	400
경남	남해	남해 보물섬 시금치	2,934	820	714	1,000	400	-
	거창, 산청, 함양	경남 서북부 한우	2,996	910	886	800	400	-
제주	도청	제주 마(馬)산업	3,820	1,020	800	1,000	1,000	-
합계		22개 사업단	68,490	18,510	17,600	20,000	9,450	2,9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표 4-19. 2009년 광역클러스터 사업단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도	시·군	사 업 명	연도별 국비 지원현황					
			계	'09	'10	'11	'12	'13
경기	용인시,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7)	팔당클린 농식품	2,450	450	1,000	1,000	-	-
강원	홍천군, 영월, 화천, 고성	산우리 재래돼지	2,050	400	1,000	650	-	-
충북	충북도	육품정 육우	2,450	450	1,000	1,000	-	-
충남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3)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2,600	400	1,000	1,000	200	280
전북	전북도	청보리를 활용한 참예우	2,650	450	1,000	1,000	200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청보리 녹색산업	2,400	400	1,000	1,000	-	280
전남	광주시, 나주, 강진, 무안, 신안, 완도, 영암, 장성, 해남, 화순(10)	녹색한우 명품화	2,450	400	1,000	1,000	-	-
	담양군, 장성군	딸기 신산업	2,800	400	1,000	1,200	200	-
경북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감 고부가가치	3,430	400	1,000	1,300	730	280
	안동시, 문경, 영주, 예천	청정 약용작물	3,100	400	1,000	1,300	400	280
제주	제주도	제주 넉치	3,300	400	1,000	1,500	400	280
광주	광주광역시	우리밀 산업화	2,600	400	1,000	1,200	-	280
합계		12개 사업단	32,280	4,950	12,000	13,150	2,130	1,6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표 4-20. 2011년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도별	참여시군	사업단명	연도별 국비 지원현황			
			계	'11	'12	'13
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역다시마	1,984.5	405	979.5	600
광주	광주광역시	한국명품김치 산업화사업	2,384.5	405	979.5	1,000
경기	도내 13개 시·군	명품경기막걸리 세계화사업	2,345.5	405	979.5	961
	양주, 포천	경기북부양돈산업 식품산업화사업	2,114	365	1,020	729
충북	충북, 충주, 진천, 음성	유기쌀가공식품 고부가가치화	2,135.5	405	979.5	751
	괴산, 단양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사업	2,385	191	1,194	1,000
충남	서천, 보령	명품김수출산업화 육성사업	2,285	394	991	900
전북	전주, 완주, 순창	비빔밥산업 세계화육성사업	1,746	405	671	670
	고창, 정읍, 순창	북분자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2,245.5	405	979.5	870
전남	고흥, 완도, 진도	유자식품산업육성 사업	2,269.5	405	979.5	885
경북	청도, 상주	약선가공식품 명품화사업	2,384.5	405	979.5	1,000
경남	경남, 통영, 거제	명게부가가치향상 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2,084.5	405	979.5	700
제주	제주도	제주콩 품산업육성사업	2,384.5	405	979.5	1,000
합계		13개소	28,748.5	5,000	12,691.5	11,06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표 4-21.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도별	참여시군 (품목)	사업단명	연도별 국비 지원현황	
			계	'14
부산	사하·서구(어묵)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	800	800
강원	평창·정선(콩)	고랭지약선두유사업단	370	370
충북	청주·청원(채소)	충북친환경채소 가공식품클러스터사업단	800	800
전북	순창·장수(콩, 엽채류)	동부권발효벨트사업단	1,100	1,100
	전주·완주(콩)	완전식품 소이푸드사업단	1,368	1,368
전남	진도·완도(울금)	울금식품가공클러스터	1,012	1,012
	광양·구례(매실)	빛그린매실사업단	770	770
경북	영양·울진(당귀, 황기)	자생생물자원 로컬푸드육성사업단	480	480
제주	제주도(갈치)	제주갈치 블루어리사업단	300	300
	제주도(돼지)	제주 그린포크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000	1,000
합 계			8,000	8,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 3.3. 성과 평가

-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성과에서 매출액 성장률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2009~2011년 목표치는 14.0~16.5% 정도이지만, 실제 실적은 15.8~32.6%를 보이고 있음.

표 4-2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성과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3
지역전략식품	목표	14.0	15.0	16.5	50.0
	실적	15.8	32.6	23.3	53.4

주: 성과 비율은 (지원업체의 당해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 100) -100로 계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클러스터추진팀, 2014.

-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사업단과 지자체 중심 및 학연사업단 등의 유형으로 운영, 다년간에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연도 사업단의 성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선정된 사업단은 20개이고, 매출액은 2005년 1,359억 원에서 2009년 3,533억 원으로 매년 27%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음.

표 4-23. 2005년 사업단의 사업 성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매출액	135,904	187,304	265,799	319,241	353,334	1,261,582 (27.0)
예산 지원액	11,640	19,400	20,300	4,090	2,740	58,170
예산비중	8.6	10.4	7.6	1.3	0.8	-

주: 20개 사업단 선정, ( )는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클러스터추진팀, 2014.

- 2005년과 2008년 사업단의 실적에서 관 주도형 실패는 다음과 같음.
  - 장수사과: 관(장수군) 주도형으로 사업단은 구성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에서 참여업체에 네트워킹 구축, 현장애로기술연구 및 홍보마케팅, 생산기반조성, 사과산업 가공 상품개발에 지원
  - 정읍 순환환원농업: 관(정읍시) 주도형으로 사업단은 구성하지 않고 지역의 개별 업체에 대한 지원
  - 논산에스민딸기: 가공시설 완공(2013년)이 늦어져 매출 미 발생
- 2005년과 2008년 실적 없는 사업단과 관주도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업단의 연평균 매출 성장율에서 2005년 사업단의 사업중단은 15.8%(3개사업단), 음의 성장률 사업단은 10.5%로 나타나고, 2008년은 음의 성장률은 9.5%로 2005년 사업단 보다 표면적으로 성장률 지표는 양호함.



표 4-24. 2005년 및 2008년 사업단의 사업 성과

단위: 사업단 수, %

구 분	2005년		2008년	
+ 성장율	14	73.7	19	90.5
- 성장율	2	10.5	2	9.5
사업중단	3	15.8	-	-
계	19	100.0	21	100.0

주: 22개 사업단 선정, ( )는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클러스터추진팀, 2014.

- 2008년 이후 사업단의 매출실적에서 사업초기 단계의 실적자료가 없는 것은 본 사업단의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사업실적이 미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비 집행에서도 사업승인과 집행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미비로 발생하였음.
-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시범사업, 본 사업 및 사업재편 등의 정책적 혼선과 집행과정에서 사업단의 세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사업선정 초기에 예산 집행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음.
- 초기 선정된 사업단의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는 1차년에 42.6%, 2차년 27.8% 그리고 3차년 9.2%로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은 20.4% 수준으로 높음.

표 4-25.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역	사업단명	'05	'06	'07	'08	'09	'10	'11	'12	'13	성장율
경기	안성마춤	47,000	62,000	63,300	94,500	104,000	108,600	73,200	70,600	81,600	7.1
	포천전통한과마을	6,000	6,200	6,400	7,000	7,200	7,500	7,400	7,800	7,600	3.0
강원	한우 하이룩	1,500	3,500	7,300	9,500	12,900	23,700	30,000	31,200	35,600	48.6
	백두대간 농업포럼			5,600	11,000	17,200	14,200	40,600	35,600	36,900	36.9
충북	포도 농산업클러스터	884	942	1,001	1,057	1,113					
	과산 친환경청정고추	5,000	6,200	40,200	45,500	48,000					
충남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14,513	14,758	18,027	18,987	23,931	26,588	25,939	28,586	10.2
	한산모시	10	12	30	12	13	13	14	15	23	11.0
전북	장수사과										
	정읍 환원순환농업										
	임실 낙농	589	707	804	796	675	465	392	370	382	-5.3
전남	보성녹차	43,700	50,700	79,400	81,000	82,800	83,000	59,600	58,000	53,000	2.4
	함평 과학농업	4,420	6,032	8,753	10,802	9,739	8,967	8,449	7,632	7,448	6.7
	전남 친환경쌀	2,100	7,000	8,500	7,900	12,800	10,651	14,573	13,554	11,050	23.1
경북	경북한우			34	89	93	74	55	80	122	23.7
	풍기인삼	205	284	304	330	361	394	446	400	441	10.0
경남	경남 친환경쌀		1,900	3,700	500	1,300	300	500	100	200	-27.5
	하동녹차	8,400	9,000	8,000	9,900	9,700	11,600	28,000	25,000	23,800	13.9
	경남양돈	10,900	13,600	14,800	15,500	17,800	17,800	10,100			
제주	제주감귤	5,196	4,714	2,915	5,828	8,653	6,368	5,849	11,437	12,215	11.3
계	20개소	135,904	187,304	265,799	319,241	353,334	317,563	305,766	287,727	298,9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클러스터추진팀, 2014.

표 4-26. 2008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역	사업단명	'08	'09	'10	'11	'12	'13	성장율
경기	화성웰빙떡			1,000	2,200	2,000	3,000	44.2
강원	강원 영동 한우령	3,900	4,200	7,300	5,700	16,200	11,300	23.7
	홍천늘푸름 한우	11,000	17,200	14,200	40,600	35,600	36,900	27.4
충북	충북 친환경축산		4	2,332	15,920	26,492	24,997	789.1
충남	서산생강	2,942	5,044	9,523	8,400	8,500	8,600	23.9
	논산에스민딸기							
	홍성 백년대계한우		167	287	311	552	1,526	73.9
전북	진안 친환경 한방		5	87	483	848	2,296	362.9
	무주 반딧불 산머루	50	672	310	250	330	310	44.0
	남원 친환경 흑돈					13,120	7,230	
	완주 감		2,500	2,700	2,900	2,500	2,600	1.0
전남	영암무화과	600	7,700	12,900	9,600	5,900	4,300	48.3
	곡성멜론		1,300	2,013	2,686	4,015	5,004	40.1
	신안시금치			7,150	15,190	16,160	54,530	96.8
	구례산수유	99	178	39	567	341	81	-3.9
	무안 황토고구마		2,000	1,300	2,800	2,900	2,800	8.8
경북	경산종묘(종묘조합)		391	400	410	420	580	10.4
	상주 곶랭지포도		68	685	910	727	728	80.9
	영천와인		20	50	50	54	54	28.2
경남	남해 보물섬 시금치	5,400	6,500	5,500	5,800	19,000	7,400	6.5
	경남 서북부 한우	5,600	11,800	15,900	18,700	22,700	18,100	26.4
제주	제주 마산업			226	564	724	605	38.9
계	22개소	29,591	59,749	83,902	134,041	179,083	192,941	

표 4-27. 2009년 광역클러스터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단명	'09	'10	'11	'12	'13
광주	우리밀 산업화		1,000	1,400	1,600	1,100
경기	팔당클린농식품		1,000	2,200	2,000	3,000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1,400	800	400	400
충북	육품정 육우		6	149	2,598	3,367
충남	서부충남고품질양돈		1,579	9,077	9,632	13,652
전북	청보리를 활용 참여우		597	10,384	5,249	11,347
	청보리 녹색산업					107
전남	녹색한우 명품화		24,544	27,386	35,515	40,657
	딸기 신산업		360	1,687	2,999	833
경북	감 고부가가치		4	750	817	1056
	청정약용작물		519	704	706	692
제주	제주넙치		747	2,378	9,037	7,924
계	12개소		31,756	56,915	70,553	84,135

표 4-28. 2011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지원 사업단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단명	'11	'12	'13
부산	미역·다시마사업단		109	181
광주	한국명품김치산업화		67	533
경기	명품경기막걸리세계화		100	100
	경기북부양돈산업	27	61	109
충북	유기쌀가공식품산업화		1	40
	친환경농식품산업육성		60	100
충남	명품김수출산업화			581
전북	비빔밥산업 세계화육성			
	북분자지역전략식품산업			
전남	유자식품산업육성사업	3	49	681
경북	약선가공식품명품화			
경남	명계부가가치향상		131	1
제주	제주콩식품산업육성		1	790
계	13개소	30	579	3,116

주: (전북) 비빔밥산업 세계화육성, 북분자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가공시설 완료가 늦어져 매출액 미 발생, (경북) 약선가공식품명품화: 가공시설 완료가 늦어져 매출액 미 발생

표 4-2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매출발생 시점 분석

단위: 개, %

구분	2005, 2008, 2009년 매출 최초발생년도				총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사업 이후	
		23 (42.6%)	15 (27.8%)	5 (9.2%)	11 (20.4%)

주: ( )는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2012.

- 본 사업의 목적인 지역의 종합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소득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사업단의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소득기반 확보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업단의 육성이 절실한 과제임.
  - 따라서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사업단 선정과 육성을 통한 본사업의 추진으로 보다 내실있는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고, 예산의 집행도 수반되어야 함.
  - 사업단 구성, 사업 계획 등 예비사업단으로 일정 성과가 있는 경우 본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30. 사업단의 R&amp;D 관련 예산 집행 실태

단위: 백만원

구분	R&D 투자비용						총계
	0	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사업단 수 (비중 %)	23 (59.0%)	7 (17.9%)	5 (12.8%)	1 (2.6%)	2 (5.1%)	1 (2.6%)	39 (100%)

주: R&amp;D 출처 미기재 사업단은 제외(15개 사업단), R&amp;D비용 기준은 상품개발 및 실질적인 상품개발비용만(브랜드개발비용제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2012.

- 본 사업의 예산 편성기준에서 사업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R&D 투자비용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단에서 59%는 미집행 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사업단이 별도 기술개발 투자를 사업단 예산에 포함하는 것보다 본 사업단의 종합적인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업단은 기술개발 보다는 사업 생태계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사업단 인력의 역량강화, 판로 등에 집중해야 함.

### 3.4. 개선 과제

#### 3.4.1. 예비사업단 지정 및 운영예산 지원

- 본사업의 실시 과정에서 사업단의 준비 부족 및 행정지원 미흡 등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성과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그리고 사업단의 철저한 준비 부족으로 지원사업 종료후 사업단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본 사업에 앞서 충분한 사전 예비사업단의 준비과정을 통한 사업의 실시로 예산 효율성과 사업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본 사업의 참여 조건에 예비단계를 포함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방식이 필요함.

#### 3.4.2. 보조금(인센티브)의 지원방식 다양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참여자간 갈등문제,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방비 매칭, 사업평가 방식 제고 등이 있음.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매칭비율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의 실적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평가방식에 부합되지 못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미흡의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하여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기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 성과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보조금의 차등화가 필요함.

### 3.4.3. 지역농업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사업 지원

- 기술개발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사업단에서는 본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갈등 해소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 사업이 확대 될 필요가 있음.

## 4.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 4.1. 사업 현황

#### 4.1.1. 목적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임.

#### 4.1.2. 예산 및 지원 조건

-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예산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으로 이원화되어 지원되고 있음. 최근 관련 사업의 예산은 2011년 3,672억 원(추경 포함), 2012년 3,852억 원, 2013년 4,171억 원 그리고 2014년 4,200억 원이 책정되었음. 사업의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식품 수출사업자(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등이고, 지원 조건에서 용도는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등임.
  - 구체적인 지원 금리는 농업경영체는 3%, 일반 업체는 4% 정도임. 그리고 지원업체 사업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는 1%, 우수업체는 0.5%의 금리인하의 혜택이 적용됨.
- 사업비의 지원 한도 및 비율에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200억 원이며, 지원하는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용자함.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0억 원이고,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 중소·중견기업은 대출액의 50% 이상의 금액에 준하는 수출 이행 의무가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용자금의 100% 수출 이행의무가 있음.
- 식품·외식 종합자금에서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과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과 유사성이 있음. 단지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은 농식품수출 관련 업체를 대상, 사업실적에 따른 지원 금액(총액)과 지원조건(금리)에서 인센티브가 있지만, 기본적인 혜택의 여타사업과 유사성이 높음.

표 4-31. 연도별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당초	추경	당초	추경	당초	추경	
계	3,652	3,672	3,652	3,852	3,870	4,171	4,200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3,202	3,222	3,242	3,342	3,410	3,500	4,200
농협중앙회	450	450	410	510	460	6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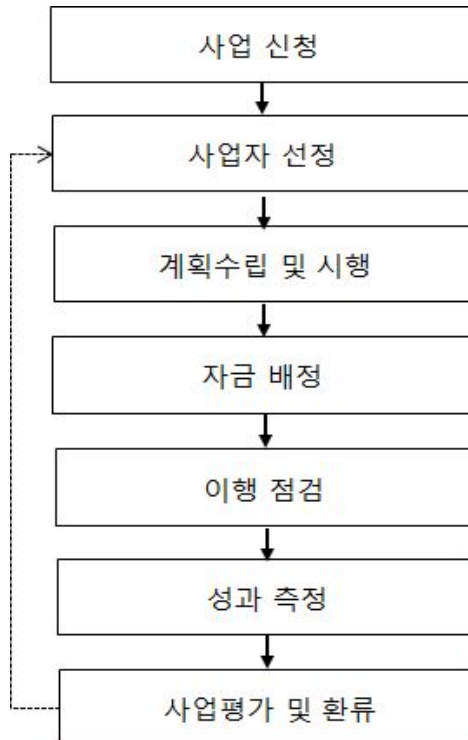
주: 2014년부터 농협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농협 경제 사업으로 분리·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2014.



### 4.1.3. 추진 절차

-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는 총 7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① 사업 신청, ② 사업자 선정, ③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④ 자금 배정, ⑤ 이행 점검, ⑥ 성과 측정 및 ⑦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가 있음.
- 사업 신청 단계에서 대상 업체는 일반 업체와 수출 지역농협이 되고, 업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 사업 신청에서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 해당 담당업체(유통공사와 농협)가 진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담당하고, 신청업체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함. 그리고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대출 절차와 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자금배정 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별 용자 배정 한도액 결정 및 배부를 담당하고, 시행기관들은 수요업체의 배정계획 수립과 승인 등을 요청하는 작업을 담당함.
- 이행점검 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기관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대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단계를 통한 제도개선을 반영하고 있음.
- 참여 업체의 애로사항 중에 사업 단위가 1년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수출업체의 경우 최근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농산물은 생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수출이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림 4-6.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추진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14.

## 4.2. 추진 실적

- 2013년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66개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총 3,205억원의 정책자금을 용자 지원하였으며, 지원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은 149개(자금 지원액 대비 62%)로 전체 지원 업체 중 90%를 차지하고 있음.
  - 평균 지원액은 2012년 12억 원에서 2013년 13억 원으로 소폭 증가함.
- 사업군별에서 중견기업은 13개 업체(자금 지원액 대비 30.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개 업체(7.4%)를 지원하였고, 평균 지원액은 각각 75억 원, 60억 원으로 전년도 83억 원, 72억 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 본 사업 자금 지원업체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하여, 농식품 국가전체 수출 1.4% 증가율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지원업체 수출액은 2012년 9억 8,600만 달러에서 2013년 11억 8,000만 달러로 19.7% 성장하였음. 상대적으로 국가전체 수출액은 2012년 56억 4,500만 달러에서 2013년 57억 2,400만 달러로 약 1.4% 성장하였음.
- 지원업체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약 52억 원(업체당 3,100 만원)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기업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시중금리가 지원금리보다 높을 경우, 지원업체는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고하고 있지만, 최근 지원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을 경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아져 예산 불용액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표 4-32.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품목별 지원액 및 수출액

단위: 백만 원, 천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총 계	322,200	851,450	331,001	985,523	320,497	1,265,539
신선농산물	146,557	333,286	179,544	427,376	193,990	662,852
가공식품(소계)	175,643	518,164	151,457	558,147	126,507	602,687
일반가공식품	146,313	464,921	148,108	539,052	112,297	567,988
기타가공식품	29,330	53,243	3,349	19,095	14,210	34,69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2014.

-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업체별 특성에서 2013년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의 지원액은 1,939억 원 정도이고, 가공식품 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1,265억 원 정도임. 전체 용자금액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의 지원 금액은 60.5% 정도 차지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 진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농업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최근 관련 사업의 지원 금액에서 신선농산물의 수출 지원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 2013년 기업규모별 지원금액에서 대기업은 업체당 71억 원, 중소기업은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용자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평균 지원 금액은 2010년 83억 원에서 2011년 80억 원, 2012년 80억 원 정도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7억 원에서 2013년 19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표 4-3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기업규모별 지원액

단위: 개소, 백만 원

기업 규모	2010		2011		2012		2013	
	업체 수	지원액	업체 수	지원액	업체 수	지원액	업체 수	지원액
대기업	14	116,339 (8,310)	15	120,654 (8,044)	15	120,454 (8,030)	17	121,870 (7,169)
중소	167	204,753 (1,226)	173	201,546 (1,165)	170	210,547 (1,239)	149	198,627 (1,333)
합계	181	321,092 (1,773)	188	322,200 (1,714)	185	331,001 (1,789)	166	320,497 (1,931)

주: ( ) 평균 금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2014.

- 신선농산물 업체 지원액은 2011년 1,465억 원에서 2012년 1,795억 원 그리고 2013년 1,939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공식품 업체 지원액은 2011년 1,756억 원에서 2012년 1,514억 원 그리고 2013년 1,265억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임.

### 4.3. 성과 평가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농축산물 생산과 해외 시장의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음. 본 사업의 성과에서 예산 지원액은 2011년 322억 원에서 2012년 331억, 2013년 320억 원 정도임. 수출액은 2011년 8억 5,145만 달러에서 2013년 12억 6,554만 달러로 매년 21.9%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음.
- 전체 수출액에서 지원된 예산의 비중은 2011년 37.8%에서 2013년 25.3%로 비중이 작아지고 있음.

표 4-3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성과

단위: 백만 원, 천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합계
수출액	851,450	985,523	1,265,539	3,102,512 (21.9)
예산 지원액	322,200	331,001	320,497	973,698
예산비중	37.8	33.6	25.3	-

주: ( )는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2014.

- 2011~2014년 연속적으로 선정된 사업체의 지원액과 수출 실적자료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용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2년차에서 3, 4년 차로 갈수록 수출실적에서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따라서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는 신규 선정에서 최장 지원까지 연속적으로 2년 내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보다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표 4-35.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업체별 연속 지원 성과

단위: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수출실적 (A)	지원액 (B)	비중 (B/A)	업체 수
1년차 실적(2014 기준)	-	198,205	-	127
1+2년차 실적(2013)	1,108,325	473,414	42.7	147
1+2+3년차 실적(2012)	1,594,042	616,632	38.7	83
1+2+3+4년차 실적(2011)	2,225,527	838,779	37.7	135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2012~2013년 예산 불용액은 1.0%, 8.4%이었지만, 2014년의 불용액 비율이 36.6%로 급증하였음. 엔저 등 환율 변화로 수출시장의 대외여건 변화와 국내 금융시장의 이자율 하락 등으로 기존 사업의 이자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음.

표 4-36.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예산 불용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A)	지원액	불용액(B)	불용 비중 (B/A)
2012년	334,200	331,001	3,199	1.0
2013년	349,958	320,497	29,461	8.4
2014년	419,971	266,169	153,802	36.6

주: 2013년까지 aT와 농협에서 지원, 2014년부터 aT에서 지원 예산 및 지원액은 aT 해당액으로 작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2014.

#### 4.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대상 업체의 선호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농식품 운영,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시행함.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대상 기업체의 경영성과 및 국내산 원료 구입 규모, 만족도, 향후 희망 금리, 매출액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정책 개선의 자료로 활용함.

표 4-37.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관련 조사

구분	세부내용
조사 대상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조사 지역	전국(17대 광역시도)
조사 방법	전화 면접, e-mail, Fax 조사 병행
표본 추출	List를 이용한 조사
조사 기간	2014년 12월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 업체는 총 68개로 농업경영체가 20개(29.4%), 일반 업체가 48개(70.6%)임. 경영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0개(88.2%), 중견업체가 8개(11.8%)임.
  -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영에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역할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응답 업체들의 2013년 평균 매출액 규모는 200.5억 원이나, 응답 업체의 88.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평균 규모는 85.8억 원임. 농업경영체의 평균 매출 규모는 일반 업체에 비해 작은 편임.

표 4-38.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특성

구분		업체 수	비중	2013년 매출액	2013년 국산 원료구입액
회사형태	농업경영체	20	29.4	8,122	4,107
	일반 업체	48	70.6	25,119	4,757
회사규모	중소기업	60	88.2	8,577	4,256
	중견기업	8	11.8	104,622	7,56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2014.

- 2013년 평균 매출에서 중견기업은 1,046억 원, 중소기업은 85억 원임.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금액은 중소기업은 42억 원, 중견기업은 76억 원 정도임.
- 매출액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8% 정도,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은 55% 정도를 차지함. 국내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의 확대와 업체의 확대가 필요함.

표 4-39.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매출액 규모(2013년)

단위: 개소, %, 백만 원

구분		업체 수	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평균
합계		67	37.3	28.4	25.4	9.0	20,045
회사 형태	농업경영체	20	14.9	7.5	7.5	0.0	8,122
	일반 업체	47	22.4	20.9	17.9	9.0	25,119
회사 규모	중소기업	59	37.3	26.9	23.9	0.0	8,577
	중견기업	8	0.0	1.5	1.5	9.0	104,622

주: 회사규모에서 전체 기업체 68개에서 무응답 업체 1개를 제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2014.

- 조사업체의 평균 매출액 규모에서 50억 원 미만 업체는 37.3%로 가장 높고, 50~100억 원 미만은 28.4%, 그리고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9.0% 차지함. 조사업체의 2013년 평균 매출액은 200억 원 정도임.
- 2013년 현재 응답 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국산원료 농산물 구매액은 22.6%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농업경영체의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과 일반 업체에 비해 높고, 중견기업은 매출액 대비 국산원료 구매 비중은 7.2%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농산물 소비와 수출의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농산물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업체와 지원규모의 확대가 중요함.



표 4-40.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응답 업체의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2013년)  
단위: 개소, %, 백만 원

구분		업체 수	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 이상	평균
계		59	15.3	55.9	18.6	10.2	4,537
회사 형태	농업경영체	20	0.0	23.7	8.5	1.7	4,107
	일반 업체	39	15.3	32.2	10.2	8.5	4,757
회사 규모	중소기업	54	15.3	50.8	16.9	8.5	4,256
	중견기업	5	0.0	5.1	1.7	1.4	7,565

주: 전체 기업체 68개에서 무응답 업체 1개를 제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2014.

- 응답 업체의 94.1%(64개)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이 기업의 매출액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해 91.2%(62개)는 만족하고 있음.

표 4-4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매출액에서 중요도  
단위: 개소, %

구분	사업의 매출액 영향		사업의 만족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예	64	94.1	62	91.2
아니오	4	5.9	6	8.8
합계	68	100.0	68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2014.

표 4-42.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희망 금리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업체 수	현행 유지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계		68	8.8	7.4	16.2	10.3	54.4	2.9
회사 형태	농업경영체	20	4.4	1.5	2.9	1.5	16.2	2.9
	일반업체	48	4.4	5.9	13.2	8.8	38.2	0.0
회사 규모	중소기업	60	7.4	7.4	8.8	7.4	54.4	2.9
	중견기업	8	1.5	0.0	7.4	2.9	0.0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2014.

- 응답 업체 중 8.8%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현행 금리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업참여 업체의 대부분은 대출금리의 인하를 희망하고 있음. 업체의 절반 이상이 현행 금리를 약 20% 이상 인하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 자금 등에 유리성이 높기 때문임.

표 4-4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후 매출액 변화

단위: 개소, %

구분		업체 수	변화 없음	10% 증가	20% 증가	30% 증가
합계		68	41.2	32.4	20.6	5.9
회사 형태	농업경영체	20	16.2	7.4	4.4	1.5
	일반 업체	48	25.0	25.0	16.2	4.4
회사 규모	중소기업	60	35.3	29.4	17.6	5.9
	중견기업	8	5.9	2.9	2.9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2014.

- 응답 업체 중 8.8%가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전후 매출액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절반 이상의 업체가 매출이 10~20%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남.
-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정책사업의 효과가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의 매출과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와 금리 인하 및 사업 기간의 탄력적 적용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4-44.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단위: 개소, %

구분		업체 수	대출금리 인하	대출 한도액 확대	담보 비율 확대
합계		68	69.1	16.2	14.7
회사 형태	농업경영체	20	22.1	2.9	4.4
	일반 업체	48	47.1	13.2	10.3
회사 규모	중소기업	60	58.8	14.7	14.7
	중견기업	8	10.3	1.5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응답 업체 중 69.1%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통한 국내 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대출금리 인하’를 희망하고 있음. 그리고 16.2%는 ‘현행 대출 한도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음.
- 농산물의 생산의 특성과 환율 등 수출시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의 사업기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확대, 지원액 증대 및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리고 최근 시중 금리의 인하로 본 사업 금리의 유인 효과가 약해지고, 예산의 불용액이 증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금리는 시중 금리에 기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4.5. 개선 과제

### 4.5.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지원이 잘 안되는 주요 제한 요인인 담보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비율의 확대와 신용보증 확대가 필요하고, 평가결과에 의한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함.

- 신선 농산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규모의 확대와 지원금리를 시중 금융권 이자율보다 유리하게 적용
  - 기타가공식품 업체의 국산원료 30%이상 구매 조건 관리 강화
  -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확대

#### 4.5.2. 사업추진 방식의 탄력적 적용

-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의 사업 주기(1회 대출기간)를 현행 1년 보다는 장기로 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사업기간의 확대가 필요
- 사업 선정에서 시행 및 환류 단계에서 신선 농산물 활용 업체에 대한 평가 지표 반영해야 함.
  - 현행 업체 평가지표에는 수출사업성과, 자금운용 효율성, 가점지표 및 경영 건실도 등이 있음.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가점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점지표에 수출선도조직 선정여부, GAP, HACCP 인증 여부에 추가로 신선 농산물 활용 및 신선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활용 등의 추가적인 지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

#### 4.5.3. 신규 사업자 확대 및 금리의 인하

- 수출 관련 1,700개 대상 업체에서 신규 참여 업체의 수를 확대하고,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혜택 확대 추진해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1~2014년 업체별 연속적으로 선정된 사업체의 지원액과 수출 실적 자료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용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2년차에서 3, 4년 차로 갈수록 수출실적에서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연속 적으로 2년 내외 선정 기

준으로 다양한 신규 업체를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지원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사업체의 지원 인센티브가 없어 예산의 불용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지원금리를 시중금리 최저 수준에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4.5.4. 유사 지원사업의 통합 운영

- 현재 국내 농산물 구매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식품외식 종합자금의 식품가공 원료매입지원과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이 있음.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단 기존 개별 사업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통합과정에서 운용하는 방식이 필요함. 예를 들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서 사업실적에 따른 추가지원 금액(총액)과 지원조건(금리)에서 인센티브를 유지

## 5.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5.1. 사업 현황

-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출범되고 식품산업이 이관되면서,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2008.11)<sup>12)</sup>」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이 수립됨.

<sup>12)</sup> 식품 분야 R&D 투자 규모 확대 및 미래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의 신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자 함.

- 식품산업 R&D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이 수립(2009.6)됨에 따라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식품산업 R&D를 분리·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신설('10.1)함.
- 2011년 7월,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7년까지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85%로 향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표 4-45.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분류체계 변화

2008년 이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농식품가공유통	식품산업	전통식품/한식세계화 식품안전 식품가공/제조	기능성강화 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 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고급·실용화 저탄소·신가공 식품기술

자료: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 단위사업평가 결과보고서(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2011.

### 5.1.1. 사업 목적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의 사업 목적은 농축산물 연계 품목 가공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 지원을 통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 5.1.2. 예산 집행 현황

- 2010~2014년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누적 사업비는 1,410억 원이며, 2010년(신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

율은 19.8%임.

- 예산은 100% 집행되고 있음.

표 4-46.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예산	18,294	24,808	28,957	31,327	37,633	19.8%
집행	18,294	24,808	28,957	31,327	-	
불용	0	0	0	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5.1.3. 사업추진 절차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의 시행주체(전담기관)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산·학·연·관 연구자)를 지원 대상<sup>13</sup>으로 함.

<sup>13</sup>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임.

표 4-47.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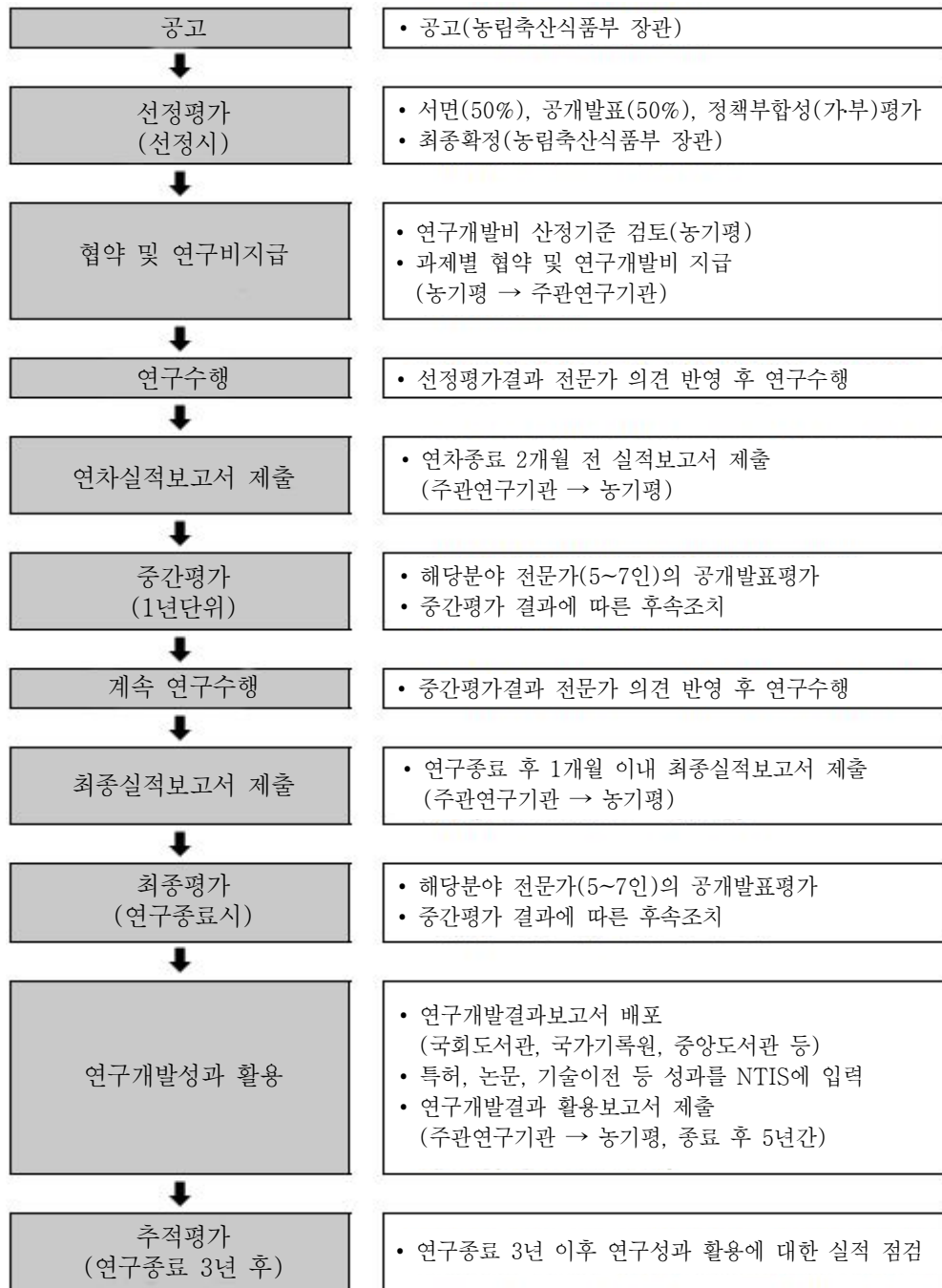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산·학·연·관 연구자
지원기준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등
재원 및 지원조건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정부출연 100%(대기업 50%이상, 중소기업 25%이상 매칭)
주요 지원분야	기능성장화식품, 전통웰빙식품, 품질관리, 식품 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저탄소·신가공 식품기술(6대 분야)
시행주체 (전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 안내서.

-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술수준,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6대 분야 18대 핵심기술에 우선 투자함.
  - 6대 분야에는 기능성장화식품, 전통웰빙식품, 품질관리, 식품 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저탄소·신가공 식품기술이 해당됨.
- 과제의 분야와 성격에 따라 지정공모과제와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함.
  - 지정공모과제는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한도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유응모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제안하는 연구내용에 따라 적정한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관을 선정평가를 통해 책정하여 지원함.
  - 기획(지정공모) 과제 중 프로젝트 R&D는 장기·대형과제 추진을 위해 '13년부터 수행함. 공고되는 과제는 기술수요 조사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시장창출·선도가능성, 기업 및 소비자의 니즈 등을 반영하여 선정함.



그림 4-7.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 연구개발 성과 향상 및 활용 제고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수행되는 과제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4.5%<sup>14</sup> 과제에 대해 과제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당해연도 협약 종료 시점에 연구수행 실적 및 계획, 산업화노력,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문제발생 시<sup>15</sup>,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의 과제 중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 성과, 산업화실적, 농림업 연계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음. 농식품부에서 자체평가가 완료된 국가 R&D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년도 사업예산을 심의조정하고 있음.
-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의 연구 성과 및 기자재 활용이 미흡하여 국가예산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된 경우에도 2년간 추적평가하고, 구입 기자재 활용실적 등을 관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관리 미흡 시에는 연구 참여 제한 연장 등 추가 패널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5.2. 사업 성과 평가

### 5.2.1. 성과지표 평가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농식품분야 R&D(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sup>16</sup>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자료를 이

<sup>14</sup> 상대평가를 통한 중단비율이 높아 도전적 R&D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연구자들은 안정적 R&D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어 성과제고에 한계가 있었음.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관리기준이 개정('13.4)됨에 따라 2014년 1월 중간평가에 따른 중단과제 비율을 7.5%→4.5%로 축소한 바 있음.

<sup>15</sup> 연구개발 결과 불량(과제참여 제한: 1~3년), 연구내용 누설 및 유출(2~5년), 연구수행 포기(3년), 기술료 미납(2년), 용도 외 연구비 사용(3~5년), 연구성과의 사유화(등록·출원, 1년), 거짓 등 연구 부정 수행(3년 이내), 기타 사업관련 규정 또는 협약 위반(2년 이내)임.

<sup>16</sup>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외에

용하여 성과관리를 받고 있음.

- 실용화성과(지식재산권 창출), 산업화성과(기술사업화, 기술이전), 과학적성과(SCI급 논문, 비SCI급 논문), 산업기반구축성과(인력양성)를 지수화하며, 사업목적에 따라 세부성과지표의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목표치를 설정함.
- 2013년의 경우,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실용화성과와 산업화성과는 목표대비 달성률이 1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의 세부사업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을 반영하고, 도전적 성과창출을 위해 목표치의 5%를 추가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표 4-48.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가중치		최근 3개년 실적				측정방식 (또는 측정방법)
		'11	'12	'13	'14	
실용화성과 (지수)*0.30	목표	-	-	21.99	27.40	[(특허출원건수×0.3)+ (특허등록건수×0.7)]× 가중치
	실적	11.46	23.40	28.71		
	달성률(%)	-	-	130.6		
산업화성과 (지수)*0.40	목표	-	-	7.92	8.79	[(산업체기술이전 건수× 0.4)+(농어업인기술이 전건수×0.2)+(사업화 건수×0.4)]×가중치
	실적	5.92	6.64	10.40		
	달성률(%)	-	-	131.3		
과학적성과 (지수)*0.20	목표	-	-	21.02	23.54	[(SCI급 논문건수 ×0.7)+(비SCI급 논문건수×0.3)]×가중치
	실적	15.34	17.98	23.48		
	달성률(%)	-	-	111.7		
산업기반 구축성과 (지수)*0.10	목표	-	-	11.72	13.39	[(인력양성 건수× 0.6)+(교육지도건수×0. 4)]×가중치
	실적	15.34	17.98	13.68		
	달성률(%)	-	-	116.7		

주: '13년부터 성과지표가 수정 관리됨에 따라 2011~2012년의 목표치는 제공되지 않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14년도 성과계획서.

도 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Golden Seed 프로젝트 등이 있음.

## 5.2.2.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sup>17</sup>

- 식품업 및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 예산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 현재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9개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은 22.2% 수준임.

표 4-49.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 및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억 원, %,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A)	108	137	150	151	170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B)	18	25	29	31	38
B/A	(16.9)	(18.0)	(19.3)	(20.7)	(22.2)
과제당 평균지원규모	127			164	200

주: 과제당 평균지원규모는 자료 있는 연도에 한해서 제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각 연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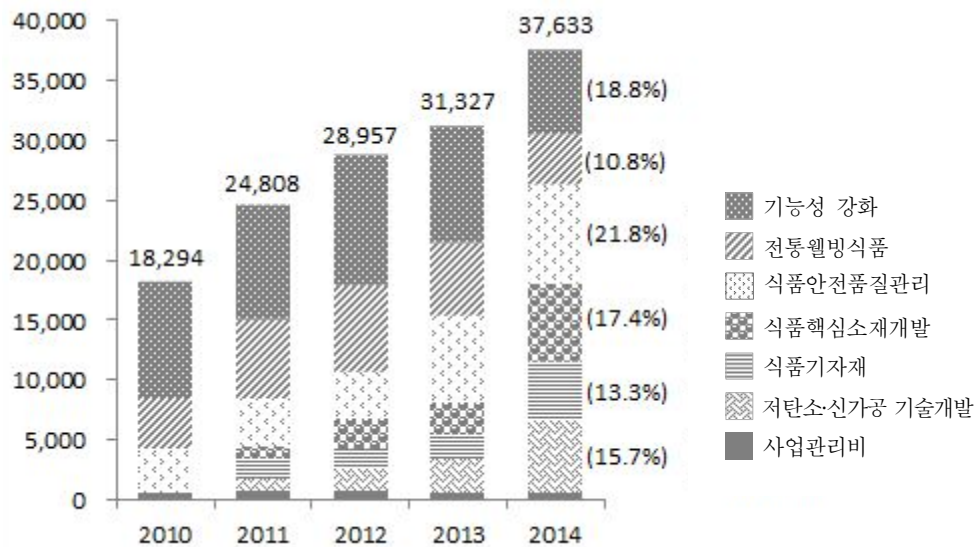
- 과제당 평균지원규모는 2010년 127백만 원에서 2014년에는 200백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4년 기준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9개 사업 중 과제당 평균지원규모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170백만 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sup>18</sup>.

<sup>17</sup>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2010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식품산업 R&D를 분리·확대하여 신설한 사업으로 관련 시계열자료가 5년밖에 되지 않음. R&D 투자 변화에 따른 정책의 유효성 분석에 한정 함.

<sup>18</sup> 2014년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의 세부사업별 과제당 평균지원규모는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270백만 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373),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443),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사업(975),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200), 기술화지원사업(170),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370),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6대 분야의 예산 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의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sup>19</sup>에는 기능성장화, 전통웰빙식품분야의 투자가 전년대비 축소되고, 식품핵심소재 및 식품기자재 등 식품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되었음.
  - 저탄소·신가공 기술개발분야의 투자도 크게 증가함.

그림 4-8.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6대 분야 예산 변화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25), Golden Seed 프로젝트(370)임.

<sup>19</sup> 2014년도 사업목표는 식품 핵심소재·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해 식품시장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신가공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해 고효율의 탄소발생 저감 기술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 기술을 확산하는 것임.

## 5.3. 개선 과제

### 5.3.1. 성과지표 수정 및 목표치 개선 필요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연관성 있게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지표 목표치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미래창조과학부 2013).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가중치에 차이가 있지만, 실용화성과, 산업화성과, 과학적성과, 산업기반구축 성과라는 4개의 동일한 성과지표로 관리되고 있음.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 산업기반구축 성과(인력양성, 교육지도 건수)의 가중치는 10%에 불과하고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업목적인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과의 연계성이 매우 미약하여 성과지표에 수정이 필요함.
  - 산업화성과(기술이전·사업화, 0.4)과 타 성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긴 하나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가중치를 더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고, 기술이전·사업화 이외에도 매출액 증가 등 추가 성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을 반영한 후, 5% 추가 상향조정하고 있음.
  - 예산증가율을 반영한 것은 투입 대비 산출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사업별 속성, 사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됨.
- 현재 성과지표는 양적 성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연구수행 실적에 따라 과제 중단, 과제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는 당초 목표성과를 낮게 세우거나, 양적 목표성과 달성을 위해 저급한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과학적 성과 측정을 위해 SCI급 논문과 비SCI급 논문의 가중

- 치를 차별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은 반영할 수 있지만 논문의 우수성, 논문성과 확산(피인용 등)여부 등은 반영하지 못함.
- 실용화 성과 측정을 위한 특허의 경우에도 양적 성과지표로는 특허의 우수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sup>20</sup>.
- R&D 사업성과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증가는 정체될 수 있음.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개선이 요구됨.

### 5.3.2.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필요

- 농업부문 R&D는 공공성, 불확실성, 비독점성, 장기성, 지역성 등의 한계를 지니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기술파급효과(technology spillover)와 같은 외부효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식품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함.
- 특히 식품산업은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R&D역량이 부족한 기업 수가 많아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
- 고부가가치 식품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및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서도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2014)<sup>21</sup> 의하

<sup>20</sup> 특허청(2013)에 의하면, 2008~2012년 동안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연평균 12.9% 증가하였고,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1.4로 미국,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그러나 우수특허(특허의 청구항 수, 피인용도 등 특허품질지표(PQI) 활용 분석결과, 국내 전체 등록 특허 상위 10% 이내 해당 특허) 비율은 외국인 1/7 수준이고, 특허분석평가 시스템(SMART) 결과, 16.4%정도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sup>21</sup> 국가 중장기 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객관적 기초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중장기계획의 4대 중점 연구분야 14대 핵심분야 50개 핵심전략

면,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7점 기준)으로는 연구개발 자금확보<sup>22</sup>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11.7)」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85%로 향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고부가가치 식품분야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79.1%로 9개 국가 중 8위임. 기술격차는 4.4년이고 기술수준그룹은 추격그룹에 해당됨.

표 4-50. 고부가가치 식품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호주	중국
기술수준그룹	추격	최고	선도	선도	선도	선도	선도	선도	추격
기술수준(%)	79.1	100	98.1	90.0	90.9	92.1	95.4	83.6	64.1
기술격차(년)	4.4	0.0	0.1	2.2	1.8	2.0	1.2	4.0	6.7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2014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 고부가가치 식품분야의 주요 기술별 경쟁력 및 기술수준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제시된 4개 기술의 기술은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해당하여,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한 장기적 연구지원이 요구됨.
  - 신선도 유지 및 장기저장을 위한 냉해동 기술은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조직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산·학·연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진행함. 주요 국가로는 OECD(34개국)와 농업분야 주요국가(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 9개 국가를 선정하였음. 선정기준으로는 농식품분야 R&D 투자규모가 상위인 국가, 농식품분야 수출규모가 상위인 국가, 특허출원·등록 건수 및 논문 등재수가 많은 국가임.

<sup>22</sup> 연구개발 자금확보(6.1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4.4), 정보·인프라 확보(4.2), 정부지원 정책 개선(4.0), 산·학·연 협력 활성화(3.9), 기술의 실용성 향상(3.1), 국제협력 활성화(2.2) 순으로 나타남.



표 4-51. 고부가가치 식품분야 한국 경쟁력 분석 및 기술수준 제고방안

기술명	최고국	한국 경쟁력	기술수준 제고 방안
질향개선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개발 기술	미국	성장기, 추격그룹, 최근 특히 출원 증가세(9개국 중 3위)	- 장기적인 연구지원 정책 모색 필요 - 기초연구 DB 확립을 통한 중부투자 최소화 시스템 구축 필요
고품질/고소득 발표 식품 소재화 및 실용화 기술	일본	도입기, 추격그룹, 최근 논문 증가추세(논문활동도·논문영향도 2위)	- 발효미생물 관련 기초연구 분야 개발 필요 - 전문 인력 유지위한 지원 필요
농식품 신선도 유지 및 장기저장을 위한 냉해동 기술	미국	도입기, 사업화(현장적용) 가능성 높음	- 산·학·연 공동연구 필요 - 국가차원의 체계적·조직적 연구 필요 - 기업의 기술수요 반영 활성화 필요
식품가공 효율성 향상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	미국	도입기, 추격그룹, 제품연구 분야 발달	-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하고, 장기적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필요 - 정부의 정책적 지원, 생산자의 기술적 서비스 개선 시급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2014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 5.3.3. 기업체 대상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체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함.
  - 기업체의 연구수행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산·학·연 공동 연구수행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있음.

### 5.3.4. 컨설팅 사업과 연계 필요

- R&D 지원과 컨설팅 사업은 모두 식품업체의 질적·인적 역량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두 사업 간의 연계(예를 들어 유사 연구를 수행

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 컨설팅, 분야별 연구·기술 컨설팅 제공 확대)를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5.3.5.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이길우 외(2012)의 연구에서 성과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한 성과관리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성과관리·활용 시스템 미비가 27.7%로 나타남.
  - 또한 성과활용이 미진한 이유로는 성과물의 추적과 관리 미흡(28.7%), 성과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연구수행(27.7%), 성과활용에 대한 보상부재(24.7%), 기술거래시장의 비활성화(17.3%)순으로 나타남.
- 식품산업 R&D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성과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하고, 연구 성과의 추적관리를 통한 지속적 성과관리 및 성과관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관련 성과의 D/B 구축과 동시에 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제 5 장

---

### 식품산업육성정책 중요도 분석: AHP분석

#### 1. AHP분석 과정

##### 1.1. 분석 필요성

-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통해 농업발전을 유인하고자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식품산업육성정책에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야 하는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육성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하여 계층적분석방법(AHP)을 적용하였음.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정책방향과 부합하게 추진되는 세부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함.
  - 우선순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에 적절한 지원 방법을 통해 자원공급을 원활하게 하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sup>23</sup>.
- 이 분석으로만 정책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 절의 세부정책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향과 연계하여 향후 우선과제를 도출하는데 기본방향으로 활용함.
  -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의 전략적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도 있음.
  - 정성적 평가를 도출하는 것에 적합한 분석방법의 하나가 AHP분석방법임.<sup>24</sup>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는 Saaty가 개발한 9점 척도를 이용하였음.
  - 자료 입력 시 일관성비율을 나타내는 *CR* 값이 0.2를 초과하는 설문 문항은 재조사를 실시하였음.

## 1.2. 분석대상 및 자료

- AHP분석을 위하여 조사대상은 농식품 분야 정책입안자 또는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을 설정하였음.<sup>25</sup>

<sup>23</sup> 우선순위 대상으로 도출된 분야의 예산이 반드시 순위가 낮은 분야보다 큰 것은 아님(KISTEP, 2008).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보다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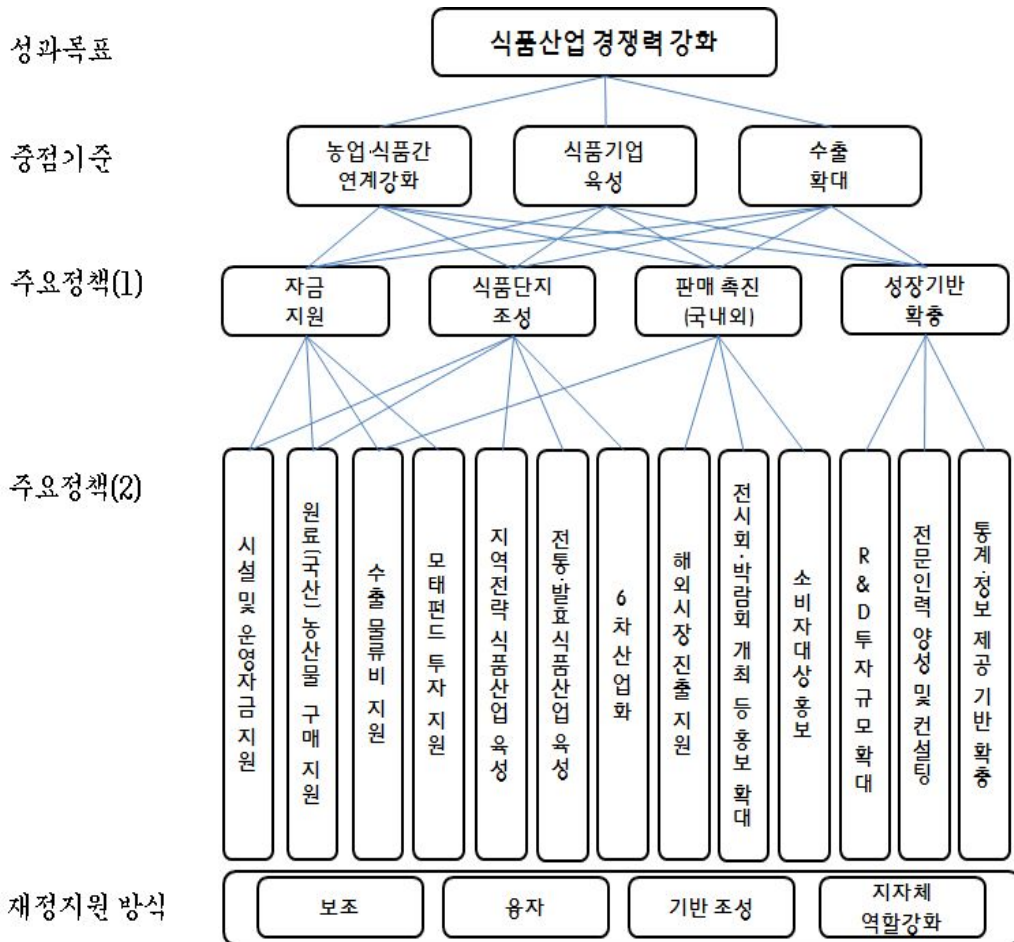
<sup>24</sup>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부록에 정리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총 15명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AHP분석은 표본의 대표성보다 전문성이 더 중요하므로 설문조사의 수는 충분함.
  - 식품산업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만이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시간이나 비용 등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유의표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책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도출하였음.(그림 5-1)
    - 식품산업육성정책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강화, 식품기업의 육성, 수출확대 등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금지원, 식품단지조성, 판매촉진 지원, 성장기반확충 등 4개의 정책수단을 연계하였음.
  - 마지막으로 세부추진과제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원료 농산물구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통계정보 제공 등 1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음.
  - 정책방향에 대해 재정지원 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재정지원방식으로 보조, 융자, 기반조성, 지자체 역할강화의 수단을 연계하였음.
    - 식품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sup>25</sup> 연구조사 방법으로는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하거나 전화, 전자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 하는 방법을 병행하였음.

그림 5-1.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HP 계층구조



## 2. 식품산업육성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 2.1. 중점 기준 우선순위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중점목표로는 먼저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0.493)가 가장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식품기업 육성(0.349), 수출 확대(0.158) 등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응답자들은 농식품 수출확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국내 농업과 식품 부문 간의 연계 강화, 식품기업 육성을 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
- 이는 식품산업 성장을 통한 국내 농업부문 성장의 견인이라는 정책 목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국내 식품산업의 구조적 영세성을 극복하여 자생력과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출확대가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육성과는 연계성이 낮은 또 다른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보임.

표 5-1.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기준의 중요도

구분	주요 내용	중요도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	-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제조업 및 외식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비율(29.7%)을 높임으로써, 국산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신규 수요 창출	0.493
식품기업 육성	-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부가가치와 고용증대 효과를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0.349
수출 확대	- 신(新)시장 창출과 해외판로 개척·확대를 통한 농식품 수출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0.158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표 5-2.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기준의 중요도

구분	학계		연구		정책		전체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	0.513	1	0.451	1	0.458	1	0.493	1
식품기업 육성	0.338	2	0.450	2	0.240	3	0.349	2
수출 확대	0.149	3	0.100	3	0.303	2	0.158	3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응답군<sup>26</sup> 별로 비교하면, ‘정책’ 군 응답자의 우선순위가 차이를 보였으나, 농업·식품 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음.
  - 연구계에서는 수출확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책담당자는 정책적으로 수출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음.
  - 정책적으로 수출확대 목표가 높기 때문에 정책적 의사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적합할 것임.

## 2.2. 주요정책별 우선순위

- 주요 정책수단별 중요성을 보면, 식품단지 조성(0.282), 판매 촉진(0.275), 성장기반 확충(0.275), 자금 지원(0.168) 순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식품단지 조성은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식품산업 구조상 개별적인 기업 단위의 노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참가자들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함을 시사함.
  - 판매 촉진을 강조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 결과 다수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함. 특히 향후 농산물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sup>27</sup>, 식품 수요 창출 및 확대는 식품과 농산물 활로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성장기반 확충은 기존의 하드웨어(H/W) 확대 외에도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등 소프트웨어(S/W) 측면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sup>26</sup> 전문가 그룹 간 비교를 위해 응답자를 ‘학계’(교수 등 7명), ‘연구’(연구기관 종사자 등 5명), ‘정책’(유관 기관 3명)으로 구분하였음. 표본 크기 때문에 대표성에 한계를 지닐 수 있지만, 분야별 평가의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음.

<sup>27</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연도, 농업전망.



-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자금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게 평가되고 있어 자금지원에 의한 식품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그동안 식품산업 정책은 자금 지원(보조, 융자 등)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던 것의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정책자금을 통한 식품산업 지원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사업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금지원 규모 대비 성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자금지원대상 업체 수가 전체에 비해 적어 현장 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표 5-3.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의 중요도

구분	주요 내용	중요도
식품단지 조성	- 클러스터 조성,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식품산업 참가자들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강화로 시너지효과 창출	0.282
판매촉진 (국내외)	- 국내외 소비자와 잠재적 시장의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통한 판로 창출·확대	0.275
성장기반 확충	-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 식품산업의 내재적 역량 강화	0.275
자금지원	- 식품업체들의 자금 수요(원료구매, 시설개선, 운전자금 등)를 적시에 적절한 규모로 지원	0.168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응답군 별로 주요 정책 순위 차이가 나타났음. 성장기반 확충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정책’ 그룹을 제외하면 자금지원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음.
  - 학계에서는 식품단지의 조성 및 성장기반 확충을 더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고, 연구계는 성장기반 확충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표 5-4.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의 중요도

구분	학계		연구		정책		전체	
식품단지조성	0.314	1	0.229	2	0.133	4	0.282	1
판매촉진(국내외)	0.250	3	0.205	3	0.413	1	0.275	2
성장기반확충	0.273	2	0.320	1	0.183	3	0.275	2
자금지원	0.164	4	0.175	4	0.271	2	0.16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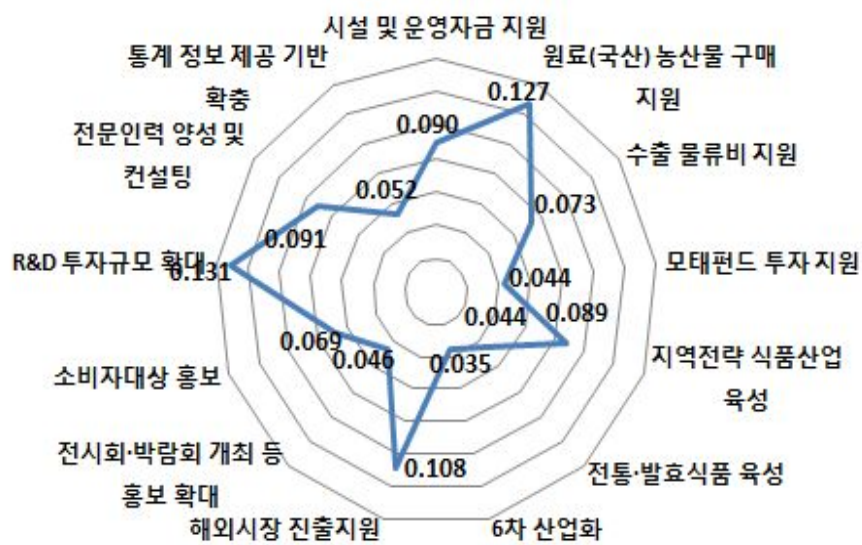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3. 세부정책별 우선순위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별 중요도를 보면, R&D 투자규모 확대(0.131)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원료(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0.127), 해외시장 진출지원(0.108),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0.091),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0.09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0.089)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았음.
- 세부정책별 중요도는 상위 주요정책의 방향과 대체로 일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R&D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은 성장기반 확충과 연계되며, 원료(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은 식품단지 조성 및 자금지원에 연계됨.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은 식품단지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은 판매 촉진과 연계됨.
- R&D는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 그러나 식품업체의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식품업체의 자체적인 투자 규모도 작고, 상위 업체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업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함을 반증함.

- 따라서 정부 차원의 기초 연구 투자와 확산(dissemination)을 통해 질적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그림 5-2.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별 중요도



- 원료(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등 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체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 규모·부담과 지원 업체 수, 지원 기준 완화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현장 수요에 맞추어 개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성장기반 확충이나 인력의 양적·질적 제고 등의 방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은 업체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 이런 점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육성·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 개별평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장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사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위생관련시설의 투자가 낮아지고 폐수처리 등의 효율성이 낮은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식품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세부정책에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전통·발효식품 육성(0.044)의 중요성은 매우 낮은 편임.
  - 이는 품목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특정 지역 생산자 및 관계자들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상향식’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할 때, 현행 사업 방식 및 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임.
- 응답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부정책 순위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집단 간 세부사업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5. 식품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별 중요도

구분	학계		연구		정책		전체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0.058	9	0.114	3	0.182	1	0.090	5
원료(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0.173	1	0.120	2	0.073	6	0.127	2
수출 물류비 지원	0.069	8	0.086	5	0.056	8	0.073	7
모테펀드 투자 지원	0.039	13	0.051	9	0.057	7	0.044	1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0.096	3	0.083	6	0.031	10	0.089	6
전통·발효식품 육성	0.041	12	0.064	7	0.024	12	0.044	11
6차 산업화	0.046	11	0.023	12	0.016	13	0.035	13
해외시장 진출지원	0.083	5	0.090	4	0.170	2	0.108	3
전시회·박람회 개최 등 홍보 확대	0.049	10	0.020	13	0.081	5	0.046	10
소비자대상 홍보	0.073	7	0.028	11	0.128	3	0.069	8
R&D 투자규모 확대	0.086	4	0.224	1	0.104	4	0.131	1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0.112	2	0.064	8	0.055	9	0.091	4
통계 정보 제공 기반 확충	0.076	6	0.033	10	0.024	11	0.052	9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4. 재정지원 방식별 우선순위

- 중점기준과 주요정책 중 성장기반 확충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보조위주의 지원방식은 가장 낮은 중요도로 평가되었음.
- 식품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농업·식품 간 연계 강화나 식품기업 육성에서 용자 방식의 중요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적인 기반 조성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음.

표 5-6.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구분	주요정책			중점기준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	식품기업 육성	수출 확대	성장기반 확충
기반 조성	0.371	0.380	0.394	0.469
용자	0.314	0.327	0.232	0.182
지자체역할 강화	0.218	0.180	0.282	0.235
보조	0.097	0.112	0.092	0.115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주요 정책별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응답군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표 5-7.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구분	학계		연구		정책		종합	
기반 조성	0.436	1	0.339	1	0.253	2	0.371	1
용자	0.270	2	0.338	2	0.359	1	0.314	2
지자체 역할강화	0.224	3	0.240	3	0.160	4	0.218	3
보조	0.070	4	0.083	4	0.228	3	0.097	4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표 5-8.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구분	학계		연구		정책		종합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반 조성	0.428	1	0.318	2	0.306	2	0.380	1
융자	0.275	2	0.380	1	0.337	1	0.327	2
지자체 역할강화	0.211	3	0.221	3	0.080	4	0.180	3
보조	0.086	4	0.080	4	0.277	3	0.112	4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표 5-9.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구분	학계		연구		정책		종합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반 조성	0.462	1	0.331	1	0.299	1	0.394	1
융자	0.180	3	0.284	3	0.278	2	0.232	3
지자체 역할강화	0.284	2	0.323	2	0.201	4	0.282	2
보조	0.074	4	0.062	4	0.222	3	0.092	4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표 5-10.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 중요도

구분	학계		연구		정책		종합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기반 조성	0.502	1	0.378	1	0.363	2	0.469	1
융자	0.177	3	0.183	3	0.132	3	0.182	3
지자체 역할강화	0.245	2	0.372	2	0.079	4	0.235	2
보조	0.076	4	0.067	4	0.426	1	0.155	4

- 보조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 정책 효과성, 식품업체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자금 지원보다는 융자지원방식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원 후 모니터링을 통해 인센티브(추가 금리인하, 기한 연장 등)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 확대, 성장기반 확충, 농업·식품 간 연계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하향식 지원보다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보다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고려 가능한 정책(현장 수요에 신속적 대응 가능)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함.
  - 식품산업 발전으로 인한 성과가 상당 부분 지역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정책 집행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함.
  -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 및 독자적인 사업 능력 미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지자체의 사업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별 자원 배분에 대한 심사·평가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민간부분과의 공동자본 형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음.





## 제 6 장

### 중소기업육성 지원제도 현황

#### 1. 자금지원제도 체계

-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크게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지원방식과 컨설팅지원방식이 있음.
  - 정책금융은 크게 중소기업의 가용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중소기업의 담보력 및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대표적인 중소기업 가용자금 공급 확대 제도로는 중소기업대출 의무제도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이 있음.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2013년 12월에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 변경·운영되고 있음.
  - 총액한도대출은 현재의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고 동 제도의 기본 운영 방향을 대출금리 감면보다는 신용공급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

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를 설정하는 등 기존 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음.

표 6-1. 국내 중소기업정책 금융의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제도	주요내용
한국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각 금융기관이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도록 지원
	금융중개지원 대출(총액 한도대출)	시중유동성과 중소기업 및 지역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신용보증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채무 이행을 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기청위탁 정책자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청 이외 부처	정책자금	각 부처 소관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과 병행하여 지자체별로 자체 조성한 재원으로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산업은행	on-lending	온렌딩(전대제도) 방식으로 은행과 리스크 분담 및 간접투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적 지원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9) 일부 수정, 남주하·김정렬·김상봉(201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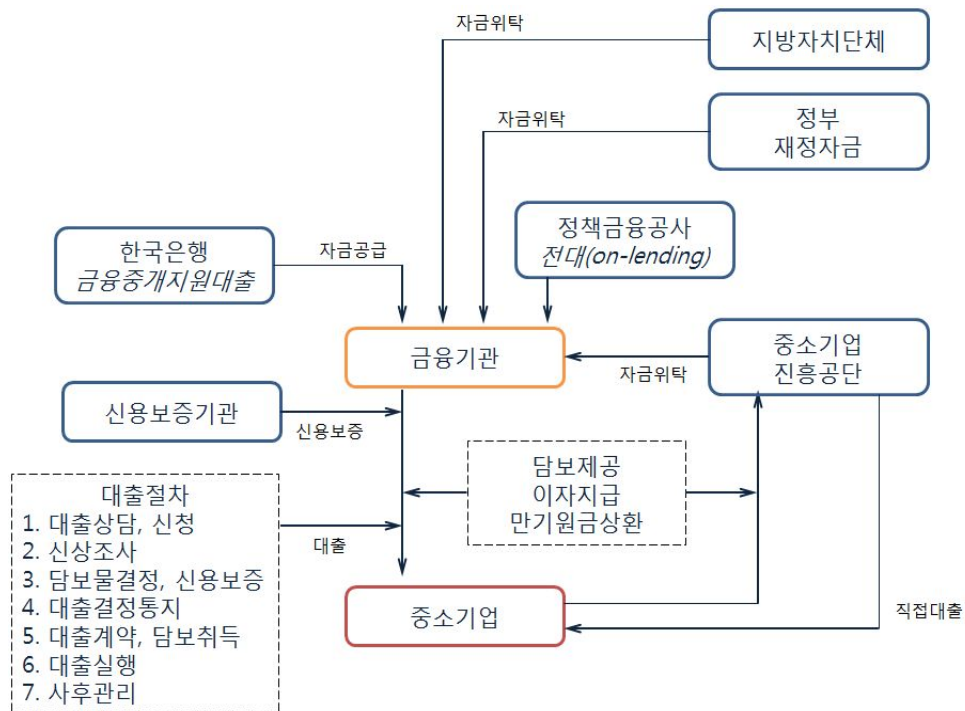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및 신용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는 신용보증제도가 있음.

-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의 필요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공적 기관’이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주는 제도임.
- 국내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원 체제, 각각 상이한 법령과 목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초기기업, 수출기업 등 혁신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보험 및 SOC 신용보증 업무도 운영함.
- 기술보증기금은 벤처·이노비즈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술평가보증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소재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소액 보증지원을 위주로 지원함.

그림 6-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연구원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자금 및 육성지원자금이 있으며,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14개 중앙부처가 하고 있음.

- 정부는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음. 각 부처의 예산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 직접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거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등 회수가 가능한 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나누어짐.
  - 정부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청 외에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재정 대비 중소기업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4.7%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6-2. 정부재정대비 중소기업지원 비중

단위: 조 원,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정부재정(조원)(A)	301.8	292.8	309.5	326.1
전부처 중기지원예산(억원)(B)	140,444	59,722	59,762	61,547
비중(B/A)	4.70	2.04	1.93	1.89

자료: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각 년도, 중소기업청, 남주하·김정렬·김상봉(2013) 재인용

- 중소기업청은 예산의 사업비를 통해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기술사업화, 장기시설투자,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 운영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융자금리간 금리차이만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의 전체 지원규모에서 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책금융공사(이후 산업은행)의 설립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

하고 있음.

-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으로 통합되어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됨.
  - 산업은행의 사업 중 전대제도(온랜딩), 신용위험분담, 간접투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함.
  - 전대제도는 일정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대출(On-Lending) 방식임. 신용위험분담제도는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대출금(On-Lending)의 일부분을 중개금융기관(은행 등)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임.
  - 간접투자제도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금융공사, 금융기관 및 펀드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여 투자조합 결성, 펀드운용사가 정해진 설립목적에 따라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임.
- 정부는 모태조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모태조합은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를 말함.
  -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할 수 있음.

##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임.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수출 마케팅 및 국제협력지원, 기술 컨설팅·종합진단 및 중소기업 연수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용(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임.
  - 정책자금 용자: 창업예비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신성장 기반, 개발기술사업화 및 사업전환 자금,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 자금, 투융자복합금융 등
  - 마케팅 지원 및 글로벌 협력
  - 연수: CEO 경영역량 강화, 민간 기피(소외) 영역 및 정부정책 연수 강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등
  - 기술 및 인력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컨설팅, 연구 개발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 청년구직자 인식 개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정책자금 용자사업(창업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지원, 지방 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등)의 비중이 가장 큼.
- 정책자금 지원 사업

- 용자한도: 개별기업 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기준으로 45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까지 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 가능
  - 용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용자 신청, 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을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용자체계: 온라인 용자신청 → 신청 검토 및 상담 →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접수 → 기업평가/기업진단 및 평가 → 용자결정 → 직접대출/대리대출
- 정책자금 용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핵심 사업이며 규모도 가장 큰 사업
- 용자사업 중 창업기업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신성장기반사업 등이 규모가 큰 사업임.
  - 용자한도는 연간 7천만 원~45억 원이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차등 적용함.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함.
-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자금 규모와 배분이 달라지는데 2013년에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약 1.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운용하였음.
- 한편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대폭 확대되어 소상공인지원 용자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전략산업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며 신성장기반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표 6-3.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부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재창업자금	사업목적	실패한 중소기업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의 기회 부여		
	지원대상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용자범위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대출기간	-시설자금: 9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신용대출: 시설 9년, 운전 6년 이내)	
대출한도		업체 당 연간 45억 원(운전자금 10억 원)이내 (용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5억 원 이내)		
구조개선신용자금	사업목적	부실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기회를 부여		
	지원대상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기업,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진단 기업,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용자범위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 포함)		
	용자조건	대출금리	공자기금 대출 금리에서 +1.05%p	
		대출기간	담보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신용 3년(1년 거치, 2년 분할)	
대출한도		연간 10억 원(3년 간 10억 이내) (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은 30억원 이내 담보부 대출)		
사업전환지원	사업목적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지원대상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자,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이전		



(계속)

구분		주요내용
		업종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융자범위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45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업종 전환의 경우 기업 당 70억 원
무역조정지원	사업목적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중 중진공 자금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무역조정 운전자금 신용대출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기업 당 45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무역조정 융자지원은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1인창조기업 포함)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계속)

구분		주요내용
용 자 조 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 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 당 1억 원
개 발 기 술 사 업 화 자 금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용자범위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용 자 조 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신 성 장 기 반 자 금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
	지원대상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원지원,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용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 조성공사비,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용 자 조 건	대출금리

(계속)

구분		주요내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 원(운전자금 연간 2억 원)	
협동화자금	사업목적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공동구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융자범위	-시설자금: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 시설 도입비 등 -운전자금: 위 시설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시설자금 70억 원 -운전자금: 5억 원(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협업자금	사업목적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 보완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지원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중소기업청에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중소기업청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협업체의 참가업체 중 협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자	
	융자범위	협업사업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시설자금: 70억 원 -운전자금: 5억 원(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은 연간10억 원)

(계속)

구분		주요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용자범위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10억 원 이내(3년간 10억 원 이내)
수출금융지원	사업목적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
	지원대상	용자제외대상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용자범위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180일 이내 -수출계약기준: 수출품(또는 용역 납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수출실적기준: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대출한도: 기업 당 10억 원 이내 -수출계약기준: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 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수출실적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투융자복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하는 방식으로써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음

(계속)

구분		주요내용	
합 금 용 지 원	지원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 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 상되는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 업 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 하지 아니한 기업	
	용자범위	-	
	용 자 조 건	대출금리	-이익공유형 대출 • 고정금리: 대출시점에서 아래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 리에서 2%p를 차감(고정), 업력 7년 미만은 정책 자금 기준금리 에서 0.08%p 차감 • 이익연동이자: 영업이익×3%, 단,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 생 시 해당 결산기의 이익연동이자 면제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1%(단리), 만기보장금리 4%(복리)
		대출기간	-이익공유형 대출: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성장공유형 대출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이익공유형 대출: 기업 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 당 연간 45억 원(운전자금 10억 원)	
소 공 인 특 화 자 금	사업목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의 필요 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수제화, 의류·섬유, 기계·금속가공, 가죽 가방, 인쇄, 귀금속·액세서리 등)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단, 주된 사업의 업종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용자대상에서 제외	
	용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 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용 자 조 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단의 직접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2013년의 정책자금 용자 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은 66.7%이며,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45.2%(직접대출의 67.7%)인 것으로 나타남.

- 대리대출은 명목상 업체편의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17개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방법이며, 대출금상환도 은행으로 하게 되어 은행에 리스크가 부담됨.
-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기업의 대출 신청을 심사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진흥

표 6-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사업

단위: 백만 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창업기업지원용자	1,150,000	1,180,000	1,400,000	1,390,000	1,529,969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용자	288,000	158,000	257,999	308,000	330,000
신성장기반지원	1,329,999	1,259,999	861,949	855,000	935,000
지방중소기업지원	300,000	-	-	-	-
긴급경영안정용자	1,500,000	270,000	240,000	250,000	315,000
사업전환용자	147,500	147,500	147,500	165,000	170,000
자산유동화지원용자	40,000	20,000	-	-	-
소상공인지원용자	1,121,663	300,000	445,000	505,000	934,459
모태조합출자	285,000	100,000	32,000	70,000	80,000
연수원건립및장비구축	200	513	7,093	5,401	3,064
연수사업	14,156	13,830	13,809	12,860	14,426
중소기업정보제공사업	4,703	4,318	4,512	2,012	3,650
해외산업협력지원	2,021	2,276	2,455	3,082	2,931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8,319	8,583	9,222	9,236	8,701
중소기업인력지원	2,120	2,004	3,584	3,394	3,197
정책지원성과향상	5,925	6,501	33,917	36,730	58,200
레저장비산업발전	1,957	1,859	1,659	1,586	1,500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6,484	2,750	2,581	2,262	2,140
투융자복합금융지원	-	-	-	150,000	170,000

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사업 분류 적용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단으로부터 대출 인가를 받은 기업에게 대출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은행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을 전달하는 구조임.

- 적용되는 금리 및 기타 대출조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약정을 체결하는 직접대출과 동일하나 대출금 회수의 책임은 은행에 있고 BIS비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기피함.

표 6-5.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개편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전략적 배분	직접대출 비중 확대: (2012년) 55% → (2013년) 65% 개발기술, 긴급경영자금은 100% 직접대출 운용, 신용대출 비중 60% 건강진단 기반 자금공급 확대: (2012년) 1조원 → (2013년) 1.2조원
금리체계 개편	금리 연동체계 개편(공자금리 → 중진채 조달금리) 창업, 개발기술, 사업전환 - 정책자금 기준금리 $\Delta 0.3\%P$ 신성장기반, 소상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0.2\%P$ 긴급경영안정 -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동산담보 대출	담보종류: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담보인정비율: 기계기구(30~100%), 기타(40~50%)
시설투자 지원한도 확대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한도 대폭 확대 (2012년) 연간 30억 원 → (2013년) 기업당 45억 원(지방기업 50억 원)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융자대상 업종 추가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플랜트 건설업, 콜센터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자료: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연차보고서」.

표 6-6. 용도별 정책융자 지원실적

구분	단위: 억 원		
	시설자금	운전자금	계
2008	15,395	10,954	26,349
2009	19,429	28,687	48,116
2010	20,607	10,377	30,984
2011년	19,314	10,251	29,565
2012년 8월말	13,791	8,356	22,147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남주하·김정렬·김상봉(2013) 재인용

- 자금 용도별 정책용자 지원 실적을 보면 시설자금에 대한 용자비중이 높음.
  - 2011년 용도별 정책용자 지원규모를 보면 시설자금으로 1조 9,314억 원 (65.3%), 운전자금으로 1조 251억 원(34.7%)을 지원함.
-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분류에 의한 정책용자 지원실적을 보면 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규모별 정책용자 지원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 4,321억 원 (14.6%), 소기업에 대해 2조 5,244억 원(85.4%)을 지원함.
  - 2012년 규모별 정책용자 지원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 2,863억 원 (12.9%), 소기업에 대해 1조 9,284억 원(87.1%)을 지원함.

표 6-7. 기업규모별 정책용자 지원 실적

단위: 개, 억 원

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8	516	2,715	711	4,129	2,394	7,836	3,017	11,669
2009	751	3,580	1,307	7,055	4,985	13,690	7,147	23,791
2010	377	2,285	663	4,156	2,676	8,723	3,832	15,820
2011	269	1,455	513	2,866	2,845	9,512	4,072	15,732
2012	181	873	367	1,990	2,953	7,314	3,854	11,97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남주하·김정렬·김상봉(2013) 재인용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 이외에도 지원기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컨설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진단과 컨설팅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진단 및 평가결과는 용자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됨.
  - 지원규모: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54억 원,  
특화형 6억 원(해외전문가 3억, 융합컨설팅 3억)



- 중진공의 컨설팅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경영컨설팅보다는 공정혁신 등 문제를해결하는 기술컨설팅지원에 보다 중점을두고 있음.

표 6-8. 중진공 컨설팅지원사업 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정혁신컨설팅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업력·업종 제한 없음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공정혁신”을 처방받은 기업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환경경영 등)
	추진절차	건강진단 신청·접수 → 컨설팅 신청·접수/진단·처방 → 적합성평가/추천서발급 → 최종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중간보고 및 점검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비(잔금)지급
해외전문가컨설팅	사업목적	국내 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첨단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 컨설팅을 지원
	지원대상	-업력 제한 없음 -제조업 기술 분야
	컨설팅 내용	첨단·핵심 기술 분야 (제품설계 및 해석, 신기술·제품개발, 신공법 도입, 원가·품질개선 등)
	추진절차	신청·접수 → 대면평가 →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중간(수시)점검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지급
융합컨설팅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합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
	지원대상	-업력 제한 없음 -부품·소재, 뿌리산업 영위기업 중 2년 내 정부 R&D과제 성공 판정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컨설팅 내용	산업·기술 간 융합 분야 (新사업 및 상품기획, 제품기능 및 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
	추진절차	신청·접수 → 요건 검토 → 대면평가 →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중간보고 및 중간(수시)점검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비(잔금) 지급

### 3. 산업은행(구정책금융공사)

-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9년 10월 28일 한국정책금융공사(KoFC) 설립하였다가 재통합하여 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 산업은행 정책금융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에 필요한 자금공급 및 관리 등 폭넓은 업무임.
  - 정책금융은 독일의 KfW, 일본의 JFC 등과 같이 모든 분야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음.
-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식
  - 산업은행은 전대제도, 신용위험분담, 간접투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함. 전대제도는 일정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간접적으로 대출하여 지원
  - 신용위험분담제도는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대출금의 일부분을 중개금융기관(은행 등) 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
  - 간접투자제도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장래 성장가능성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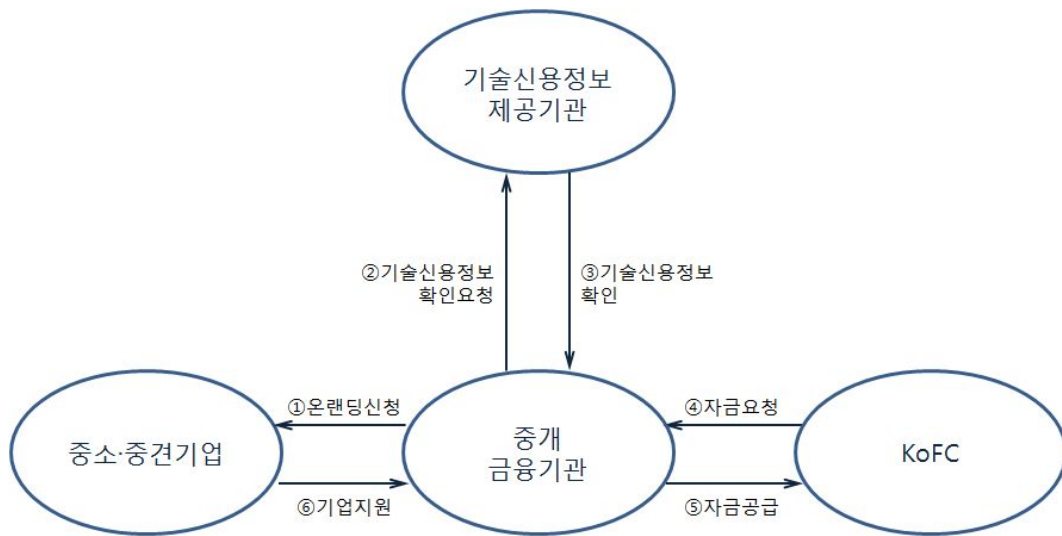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금융공사, 금융기관 및 펀드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여 투자조합 결성, 펀드운용사가 정해진 설립목적에 따라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 □ 온렌딩대출 제도

- 온렌딩대출 제도는 전통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제도로서, 중개금융기관(은행)이 자체 금융절차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기업의 기술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자체 금융절차에 따라 대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산업은행이 장기·저리 자금을 전대 받아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적·시장친화적 정책금융 제도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 중 6~11등급에 해당(단, 2014.7.1~2014.12.31은 6·7등급 지원 불가)
  -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술신용정보 보유기업(기술금융과 관련한 TCB평가수수료는 금융회사(은행)가 부담)
  - 회사 설립 후 3년 경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연간매출실적이 10억 원 이상(단, 강원·제주·호남 소재 기업은 동 조건 불요)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 중 6~11등급에 해당(단, 2014.7.1~2014.12.31은 6·7등급 지원 불가)
    -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술신용정보 보유기업(기술금융과 관련한 TCB평가수수료는 금융회사(은행)가 부담)
- 자금지원절차는 중개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
  - 1. 기업의 용자상담, 차입신청 → 2. 중개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기업의 온렌딩 대출 기본자격요건 검토 → 3.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 심사

→ 4. 중개금융기관이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 여신 심사 → 5. 중개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승인 시 기업과 온렌딩 대출약정체결 → 6. 중개금융기관은 공사로부터 온렌딩 자금을 배정받아 기업에 자금 지급

그림 6-2. 온렌딩의 구조



자료: 정책금융공사

표 6-9. 산업은행의 온렌딩사업 세부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일반 ~ 원화 ~ 온렌딩	대출금리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기업 대출스프레드 (온렌딩대출 기준금리는 3, 6, 9, 12월 5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대출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대출한도	-중소기업: 시설 50억 원/운영 20억 원 (기업별 100억 원) -중견기업: 시설 250억 원/운영 100억 원 (기업별 500억 원) (신용위험 분담비율은 중소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분담 없음)
	지원절차	대출 요청 및 사업계획안 제출 → 중개기관 대출취급 검토 → 기술신용 정보평가 요청 → 기술신용정보 제공 → 온렌딩 자금한도확인 요청 → 온렌딩 자금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원리금회수(기한전상환 포함)
외화 온렌딩	대출금리	대출통화: 미달러화(USD)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기업 대출스프레드 (온렌딩대출 기준금리는 3, 6, 9, 12월 5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대출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대출한도	-중소기업: 시설 US\$ 4백만/운영 US\$ 2백만 (기업별 잔액 기준 US\$ 8백만) -중견기업: 시설 US\$ 20백만/운영 US\$ 10백만 (기업별 잔액 기준 US\$ 40백만) (신용위험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분담 없음)
	지원절차	대출 요청 및 사업계획안 제출 → 중개기관 대출취급 검토 → 기술신용 정보평가 요청 → 기술신용정보 제공 → 온렌딩 자금한도확인 요청 → 온렌딩 자금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원리금회수(기한전상환 포함)
특별 온렌딩	대출금리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기업대출스프레드 (온렌딩대출 기준금리는 3, 6, 9, 12월 5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대출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대출한도	-중소기업: 시설 150억원/운영 60억원 (기업별 300억원) -중견기업: 시설 500억원/운영 200억원 (기업별 1,000억원) (신용위험 분담비율은 중소기업 60% 이내, 중견기업 분담 없음)
	지원절차	대출 요청 및 사업계획안 제출 → 중개기관 대출취급 검토 → 기술신용 정보평가 요청 → 기술신용정보 제공 → 온렌딩 자금한도확인 요청 → 온렌딩 자금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원리금회수(기한전상환 포함)

주: 특별온렌딩은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을 포함  
자료: KDB산업은행

## □ 신용위험분담 제도

- 신용위험분담제도는 중개금융기관이 감수해야하는 온렌딩대출 원리금 미회수위험(채무불이행위험)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일부 분담하는 신용보강제 도입.
  -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가 온렌딩대출에 대해 신용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
- 시설자금의 경우 정책금융공사 대출금액의 50%(25억 원) 이내에서 신용위험이 분담되며, 운전자금의 경우는 정책금융공사 대출금액의 50%(10억 원) 이내에서 신용위험이 분담됨.
  - 지방중소기업 및 특별온렌딩에 대해서는 온렌딩 대출금액의 60% 이내로 신용위험 분담이 확대됨.
  - 시설자금의 경우 계획시설에 대한 담보취득은 중개금융기관 선택사항이며, 신용위험분담 부 대출 관련 취득담보에 대하여는 담보 처분 시 신용위험분담 부 대출에 우선 충당함.
- 중개 금융기관은 정책금융공사의 자금대출 심사 시 신용위험 분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접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정책금융 공사에 신용위험 분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중개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온렌딩대출 자금의 50% 범위 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60%)에서 위험을 분담
  - 단, 매출액 600억원 초과 기업 및 6~7등급 기업 만기 3년 미만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분담은 불가

## □ 간접투자 제도

- 공사가 자금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운용사가 투자 기업의 심사, 투자를 담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펀드

를 통해 자금을 공급(간접투자)

- 창업 초기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에 중소벤처펀드와 PEF를 적절히 활용하여 투자금을 공급

표 6-10. 간접투자제도의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투자대상	-중소·벤처펀드: 성장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이라면, 창업부터 성장단계의 모든 기업이 투자 검토 대상 -PEF: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후기 중소기업·중견기업
투자범위	-중소·벤처펀드: 창업단계~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자금(Growth Capital) 지원 -PEF: 성장성숙단계 기업에 대한 성장자금(Growth Capital), 인수합병,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 기업의 재도약 및 경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투자
투자방식	-유형: 주식 또는 무담보 주식관련채권 인수 -조건: 주식 인수가격 및 주식관련채권 금리, 투자기간, 투자규모 등 투자조건은 미래성장성, 수익성 등을 감안한 추정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
투자절차	-중소·벤처펀드: 펀드 계획 → 운용사 선정 → 펀드 결성 → 투자 실행

자료: KDB산업은행

## □ 중소기업 종합컨설팅서비스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경영전략, 재무전략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

표 6-11. 컨설팅사업 세부서비스내용

구분	KDB Start-Up	KDB Jump-Up	KDB Global Highway
대상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	제한 없음	해외진출 추진기업 등
수수료	무료	무료	유료
분야	-초기경영전략 -자금조달전략 -경영환경분석	-경영전략 -재무전략	-해외진출전략 -해외사업 타당성
신청방법	공사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자료: KDB산업은행





## 제 7 장

---

###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 식품산업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여전히 영세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낮음.
  - 또한 식품산업이 국내 농산물을 원료농산물로 사용하는 비중이 약 30%(2012년 기준) 수준에 불과한 바와 같이 농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식품산업을 발전시킬 재정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분야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우선과제는 식품산업이 국내농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임.
  - 다음으로는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 식품기업의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임.
  -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재정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식품산업 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현재 재정지원체계의 개편과 자금지원 이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정책효과가 보다 높은 재정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식품기업에 원료농산물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용자중심의 자금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함.
  - 저금리시장이 도래한 상황에서 연리 3.0%~4.0% 수준의 단기 용자지원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용자 중심보다는 식품기업의 애로요인을 해결하여주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거나 농식품전문모태펀드와 같은 투자지원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보다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활용하도록 식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식품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금리 면에서 유리한 직접적인 정책자금 용자지원보다는 식품기업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력을 보완하는 대책을 강화함.
  - 식품기업이 농신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을 강화하도록 함.
  - 보다 혁신적인 식품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산업에 적합한 기술 및 창업 신용보증을 확대하도록 함.
- 셋째,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국내우수농산물 매입자금 지원 및 전통식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함.

- 정책자금지원으로 매입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사전 평가에서 매입실적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기능을 강화함.
  - 정책자금의 지원은 시장에서의 자금공급이 영세한 전통식품 가공업체 등에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산업의 기반으로는 국내에서 원료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공용 농산물생산단지의 조성, 식품산업전문 생산단지의 조성, 기술정보의 제공 등이 해당될 것임.
  -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자금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다섯째, 식품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확대함.
- 전통식품기업 등 영세한 식품가공업체는 지역적 특성이 높고, 지역과 밀착관계가 높아야만 농업과 연계성이 강화되므로 이러한 식품기업육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확대함.
  - 지역식품산업의 육성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연계하도록 하는 것임.
- 여섯째, 기술집약형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분야 R&D투자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위하는 자금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기술개발자금지원에서 식품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기업체 현장애로 공동연구를 강화함.
  - 현장의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도록 컨설팅과 R&D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함.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 창업 활성화

## 2. 세부 개선과제

### 2.1. 정책자금융자 지원체계 개선

#### □ 정책자금 금리인하

- 금융시장에서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면서 정책금리와 시중금리간 금리 차가 적어지면서 정책금융 장점이 사라지고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산업육성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고 있음.
  - 특히 식품기업에 대한 연 4.0% 수준의 정책금융 금리는 금리 상 유리성이 없는 수준임.
- 식품산업분야에서 정책금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현행 4.0% 수준에서 3.0% 이하로 1.0%p 이상 인하하는 것이 필요함.
  - 연리 4.0% 수준의 금리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신용대출로 차입할 수 있는 수준임.
  - 농업부문에서도 연리 3.0% 수준의 정책금융 금리가 일부 1.0%~2.0% 수준으로 인하하여 정책금융의 역할을 확보하고 있음.

#### □ 농업경영종합자금과 식품·외식종합자금의 통합 후 차별성 확보

- 식품·외식종합자금은 연간 약 1,50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업체의 비중도 전체 식품기업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식품종합자금 지원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농업경영종합자금에서도 국산농산물 이용비율이 50% 이상인 식품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어 식품종합자금과 실질적으로 중복되고 있음.

- 식품종합자금은 농업경영종합자금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식품종합자금의 목적을 농업경영종합자금에 통합하고 식품종합자금은 보다 차별적인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으로 전환함.
  - 농협과 경합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전통식품기업, 6차산업화 식품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그룹에 대한 성격을 차별화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용자지원은 과거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농산물구매자금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시설자금 지원에 보다 집중을 하고 지원금리도 2.0%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과 매칭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시설자금지원에 특화하는 것도 한 방안임.

## □ 평가 후 자금지원 강화

- 우수농산물구매자금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용자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농업과 연계성 등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한 후 자금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강화함.
  - 과거실적 평가에 따라 후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지원 성과가 높은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금리 등)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함.
- 지원식품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함.

## 2.2. 식품산업의 자금이용여력 확대를 위한 농신보 역할 강화

### □ 농신보의 신용보증 확대

- 식품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자금차입여력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많은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방안임.
  - 현재와 같이 저금리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여건변화 속에서는 저리자금 지원방식으로는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보다 많은 식품기업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자금이용여력을 제고하는 것이 적합함.
  - 즉, 농신보가 식품기업에 신용보증을 하는 것에 제한이 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는 정책적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한, 식품기업에 대한 총보증한도의 제한 등을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외식산업에 대한 농신보의 신용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업체에 대해서만이라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함.

### □ 투자중심의 기업지원을 강화

- 식품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융자지원보다는 농식품전문모태펀드를 통한 투자지원에 보다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현재도 모태펀드에 의한 식품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함.
- 식품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투자지원을 받도록 투자정보를 제공, 기술개발지

원과 투자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식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의 역할을 강화함.
- 또한 식품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통한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우수농식품기술보유기업에 대한 농신보의 신용보증 특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2.3. 컨설팅기능 등 보완기능 강화

#### □ 제품혁신 및 공정개선 컨설팅 강화

- 앞의 성과평가를 보면 융자지원보다는 식품기업에 대한 컨설팅지원 등이 보다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정책보다 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컨설팅지원은 식품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품혁신 및 공정개선 컨설팅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임.
  - 경영컨설팅도 있지만 이는 자금지원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임. 농협은행에서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이를 의미함.
-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컨설팅 후 시설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 □ 기술컨설팅 지정, 기술정보제공에 보조지원

- 특정식품기업그룹이 하나의 사업단을 형성하여 필요한 기술컨설팅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컨설턴트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함.
  - 기술컨설팅의 경우에는 1회성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연계성을 가질 때 보다 효과적임.
- 컨설팅이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지정컨설팅제도를 도입함.
- 컨설팅제도와 함께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
  - 농식품기술개발의 실용화가 낮은 것도 기술정보가 부족한 것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함.
  - 지정컨설팅제와 기술정보제공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 컨설팅과 R&D의 연계강화

- 컨설팅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연구하여야 하는 장기과제도 있음.
  - 문제가 발견하였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해결하도록 함.
- 컨설팅 결과 나타난 기술개발방향에 대해서 현장애로 기술과제로 설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즉, 컨설팅과 R&D의 기술개발과제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고, 기술개발의 실용화도 제고하도록 함.



## 2.4.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체계개선

### □ 현장참여형 기술개발지원체계 강화

-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제품개발 등에서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식품기업이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투자를 확대함.
  - 또한 식품기업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도록 컨설팅 및 현자수요조사 후 기업과 공동연구하는 체제를 강화함.
- 정책적으로는 식품기업의 애로요인, 성장발전방향에 필요한 기술개발방향 및 주제를 선정하는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R&D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주제개발체제에 대한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기업은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비 매칭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중소기업이 25% 이상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다 완화하여 10%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은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비용이 부족한 실정임.

### □ 사업화자금 지원

- 연구개발한 기술이 바로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산업분야의 사업화자금지원을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연구개발자금은 연구개발에 국한되어 있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추가자금이 필요한 실정임. 중소기업육성정책에서도 연구개발자금과 사업실용화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R&BD자금이 있음.

-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함께 동시에 사업화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중복지원이 아니라 연장연구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함.
- 식품기업이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있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기술력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보조지원 하도록 함.
  - 기술력 평가를 통하여 자금시장에서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촉진함.

## 2.5. 식품산업 원료농산물 생산단지조성

- 식품산업육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임.
  - 식품기업이 국내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구매자금지원만으로는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에 한계가 있음.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가공원료로 적합한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생산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 기능성 원료, 저가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함.
- 기능성, 다수확, 기계화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가공용 생산단지를 개발하여 생산하도록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합함.
  - 농업생산구조는 식용 고품질생산체제이어서 가공용으로는 부적합함.

-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집단화하고, 기계화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저가 원료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재배 및 수확기계화를 위한 농기계공급, 기계화에 적합한 종자개발 등이 필요함.
- 생산단지의 조성만이 아니라 국산원료농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료농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함.
  - 현물담보관리방안 등으로 제3자에 의한 원료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많은 원료농산물을 구매하기는 어려우므로 생산단지 조성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생산단지 개발과 제3자 원료농산물공급체계의 구축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축하도록 함.

## 2.6. 식품산업 전문단지조성

- 연세한 식품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식품위생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됨.
  - 특히 효과적으로 오폐수처리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투자할 여력이 부족함.
-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전문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기반시설투자에 중앙정부만 아니라 관련지자체도 함께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식품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자체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산업전문단지의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임.
  -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전문단지의 지정에 의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취득세 등 세제감면을 추진하기 위한 것도 전문단지의 조성이 요구됨.
- 식품산업전문단지의 조성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는 제외하고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부록

---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분석

## 1. AHP분석기법의 개요

- 정책 우선순위 및 중요도 산출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기준과 주요 정책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법의 선택이 중요함.
  -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척도표시법부터 복잡한 경영 과학적 수리계획법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으나, 정책 우선순위 도출 및 자원 배분 등과 같은 의사결정에서는 적용률이 매우 낮은 편임.
- 1970년대 초 Thomas Saaty 교수가 고안한 AHP 기법은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선정함<sup>28</sup>.

---

<sup>28</sup> 의사결정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거나, 기준과 틀 그리고

-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의 속성을 체계적, 계층적으로 규명하여 단계별로 비교·분석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임.
- 여러 의사결정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그들 사이의 중요도를 산출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요소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용이함.
  - 정량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경험, 판단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성적인 자료도 계량화(무형의 요소를 측정)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 할 수 있음.
- AHP 기법은 적용이 쉽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집단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특히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의 요소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통합적 평가를 위해 가장 적합한 기법으로 평가됨.
  -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정부사업의 예비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AHP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해왔으며, 국가 연구개발부문의 자원배분 우선순위 관련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분석 모형임.

## 2. AHP분석 절차

- [단계 1: 의사결정 문제의 계층구조화] 최상위 계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 목적을 놓고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됨.
  - 동일 계층 내 항목 간에는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상위항목에 대한 하위요인의 종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

조사대상(응답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 [단계 2: 의사결정 요소 간 쌍대비교] 의사결정 요소 간 쌍대비교(보통 9점 척도)로 판단자료를 수집함.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 목적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됨.

- 항목  $i$ 가 항목  $j$ 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중요도를  $a_{ij}$ 라 하면,  $a_{ij} = \frac{1}{a_{ji}}$  로 표기할 수 있으며, 쌍대비교행렬을 도출할 수 있게 됨.

○ [단계 3: 의사결정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쌍대비교행렬을 바탕으로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함.

- 행렬  $A$ 를 식(1)과 같이 나타낸다면, 고유치 방법에 의하여  $A \times w = n \times w$ 에서의  $w$ 를 구할 수 있음(단,  $w = [w_1 \ w_2 \ w_3 \ \dots \ w_n]$ 는 행렬  $A$ 의 우측 고유 벡터이고,  $n$ 은  $A$ 행렬의 고유치임).

$$A = \begin{bmatrix} \frac{w_1}{w_1} & \frac{w_1}{w_2} & \frac{w_1}{w_3} & \dots & \frac{w_1}{w_n} \\ \frac{w_2}{w_1} & \frac{w_2}{w_2} & \frac{w_2}{w_3} & \dots & \frac{w_2}{w_n} \\ \frac{w_3}{w_1} & \frac{w_3}{w_2} & \frac{w_3}{w_3} & \dots & \frac{w_3}{w_n} \\ \vdots & \vdots & \vdots & \dots & \vdots \\ \frac{w_n}{w_1} & \frac{w_n}{w_2} & \frac{w_n}{w_3} & \dots & \frac{w_n}{w_n} \end{bmatrix} \dots\dots\dots (1)$$

- 평가자가 정확한  $w$ 를 모르고 쌍대비교에 의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다음 식(2)에서  $w$ 를 추정함. 계산된  $\lambda_{\max}$ 가  $n$ 에 근접하는 값일수록 쌍대비교행렬  $A$ 의 수치들이 일관성( $CI$  (Consistency Index),  $CR$ (Consistency Ratio))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음 (식 (3) 참조).

$$A'w' = \lambda_{\max}w' \text{ (단, } \lambda_{\max}: \text{행렬 } A' \text{의 가장 큰 고유치)} \dots\dots\dots (2)$$

$$CI = (\lambda_{\max} - n) / (n - 1) \text{ (} n: \text{계층의 요소 수), } CR = CI / RI \dots\dots (3)$$

- 난수지수(Random Index, RI)<sup>29</sup>는 일관성의 허용 한도를 나타냄. 평가자의 응답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CR 값은 0.1이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0.2까지도 허용될 수 있음. CR 값이 0.2 이상이면 쌍대비교를 수정해야 함<sup>30</sup>.
- [단계 4: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 통합대안의 종합적 평가] 의사결정 목적달성을 위해 종합중요도 벡터를 산출해야 함. 최상위 계층에 대하여 k번째 하위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종합중요도는 식(4)로 산출함.

$$C[1, k] = \prod_{i=2}^k B_i \dots\dots\dots (4)$$

- 가장 큰 가중치를 갖는 대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안임. 평가자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에 대해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를 기하평균으로 통합함. 이를 원소로 하는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할 수 있음.

---

29	<i>n</i>	1	2	3	4	5	6	7	8	9	10
	난수지수(RI)	0	0	0.58	0.90	1.12	1.23	1.32	1.41	1.45	1.49

주: *n*은 *n*개의 기준, 행렬의 크기

<sup>30</sup> 통상적으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0.1 이하 일 때 평가자의 응답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0.2까지도 허용될 수 있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쌍대비교를 수정해야 함(Saaty et al, 1985). 본 연구에서는 0.2를 기준으로 하였음.



## 참고 문헌

-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과위원회. 2104.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 김성용, 안병일, 김윤식, 이미숙, 남경수, 길수민. 2009. “식품클러스터의 잠재성 분석: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생명과학연구」 제43권 제6호: 117-127.
- 김성훈, 박순찬, 홍성효, 홍승지, 이금호, 임효빈, 배선찬, 이도경. 2012. 「외식산업 육성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정욱, 김석영, 양승민. 2012. “산업클러스터 효과 추정 방법에 대한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5권 제1권: 42-62.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2014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 \_\_\_\_\_. 2014. 농림축산식품 민간 R&D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개요.
- \_\_\_\_\_. 2014.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_\_\_\_\_. 2014.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 \_\_\_\_\_. 각 연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
- \_\_\_\_\_. 2014.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 박기환 외. 2013.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순찬, 김종숙, 김성훈, 홍현균. 2011.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한국 고용정보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연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이길우·김홍범·장인호, 2012. 정부 R&D 성과 관리·활용·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KISTEP 이슈 페이퍼.
- 이용선 외. 2012.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외. 2013.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정희, 김종진, 허성윤. 201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윤희. 2013.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사업평가 13-05. 국회예산정책처.
- 최종일, 고두갑, 이승협, 강민정. 2011.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한

- 국고용정보원.
- 최지현 외. 2013.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경제총조사.
- \_\_\_\_\_. 각 연도. 광업·제조업 조사.
- 특허청. 2013. 201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각 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도출모델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0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2013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
- \_\_\_\_\_. 2014. 2014 식품외식기업 지원 사업 종합안내서.
- \_\_\_\_\_. 식품 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 \_\_\_\_\_. 각 연도. 식품산업통계정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연도. 농업전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2013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 한국은행. 각 연도. 산업연관표.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식품유통 재정사업).
- 황의식 외. 201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심층평가: 2011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aaty, T.L. and K.P. Keams. 1985.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 RWS Publications, Pittsburgh.